

통일과 평화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7, No.1, 2015

7집 1호 · 201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차례

논문

- 장영권 ■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와 구축 전략
: 한반도 'DMZ평화' 구상을 중심으로 3
- 김성훈 · 최재용 · 이윤호 ■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49
- 강동완 · 김현정 ■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북한 정권의
대응 95
- 박명규 · 임수진 ■ 연대과학기술대학의 비전과 실제
: 국제성, 민족성,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135
- 조관자 ■ 재일조선인 담론에 나타난 '기민(棄民)의식'을 넘어서
: '정치적 주체성'을 생각하다 176
- 이경분 ■ 북한의 망명음악가 정추 연구
: 초기 교향악을 중심으로 217

서평

- 이무철 ■ 김정은의 '북한호'는 어디로? 253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와 구축 전략

: 한반도 'DMZ 평화' 구상을 중심으로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국문요약

평화가 중간에 파기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란 평화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조건이나 상태가 충족된 것을 의미한다. 평화는 존재론적으로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등 네 가지의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DMZ는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평화를 회복, 유지,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가 중간에 파기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존재론적 조건인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등 영역별로 구분하여 평화복합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은 그동안 한반도 DMZ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다양한 평화구상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부해 왔다. 남북한 간에는 현재 개성공단 사업만 명맥이 유지될 뿐 다른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최근의 남북한 관계로 보아 조만간에 관계가 개선, 회복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박근혜 정부가 DMZ 세계평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평화복합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평화협력이 가장 용이하고 남북한이 절실히 필요한 생태평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를 단계적, 선순환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존재론적 평화, 평화복합체, 평화구상, DMZ, 세계평화공원

I. 문제 제기 :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¹⁾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는 장미꽃보다 더 붉은 동족상잔의 피로 물들었다. 남한과 북한은 3년 1개월간의 가장 잔혹한 전쟁을 치르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그리고 60여 년이 흘렀다. 한반도의 평화는 언제쯤 향기로운 장미꽃이 되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인가?

현재 남한과 북한은 평화는 고사하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남한은 매년 수 만 명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평화의 싹이 자랄 한 조각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 나라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평화(Peace)’일 것이다. 국가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나라는 국가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특히 우리 한반도는 늘 평화의 위협을 받아 왔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평화 그 자체가 실종, 유린되기도 했다. 지금도 전쟁의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은 침략한 당사자는 물론 침략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준다. 인간이 전쟁에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는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1) 로마의 명장이자 군사전략가인 베제티우스(Vegetius)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설파했다. 그 결과 인류는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시대 이후 현재까지 전쟁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발상을 대전환하여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고 외쳐야 한다. 이 말은 필자가 베제티우스의 말을 평화의 시각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인류사회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고 촉구한 베제티우스(Vegetius)의 후예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어 왔다. 역사 속에서 무력으로 지킨 평화는 ‘따듯한 평화’가 아니라 긴장이 연속되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였다. 이제 평화의 발상을 대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준비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전쟁은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도 일어난 사례가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실현하는 일은 인류의 지상과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전쟁의 구조적 잠재력을 해소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작업은 국제정치 특히 평화를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궁극적인 책무이다.³⁾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가 꿈꾸는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어떻게 전쟁을 막고 ‘지속 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대안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평화가 중간에 파기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평화의 실질적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접근, 즉 존재론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시각

2) 국제사회는 탈냉전 이후 새로운 평화가 정착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군사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신냉전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군비경쟁이 증가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인택, “탈냉전과 평화,”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서울: 나남, 1992), pp.233~255.

3) 김성주, “마르크스주의의 전쟁과 평화의 정치경제학,” 『이론』 제11호(서울: 새길, 1995 봄/여름), p.35.

으로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the Ontological Meaning of Peace)’와 구축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의 존재론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으로써 한반도 ‘DMZ 평화’ 구상을 분석하여 진정한 평화의 미래를 준비해 보고자 한다.

II.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 : 평화복합체론

1. 평화 개념의 새로운 접근 :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

남한과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을 1953년 7월 27일 ‘휴전’하기 위해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을 체결했다. 그리고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남한과 북한의 경계지대에 비무장지대라는 ‘DMZ (De-militarized Zone : DMZ)’를 설치했다. 그러나 남북한은 지난 60여 년 동안 대립과 갈등 속에 ‘준전쟁(Quasi-War) 상황’의 냉전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지대이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과 대결로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남북한 대결의 최전방인 DMZ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폭력을 막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적 상황 분석을 통해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⁴⁾ 평화의 존재론

⁴⁾ ‘존재론적 의미’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용어로서 그의 기본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이데거는 38세에 발표한 저작

적 의미란 단순히 전쟁이나 폭력의 부재 상태가 아니라 평화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조건이나 상태가 충족된 평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평화 관련 개념이나 이론들은 국가적 차원의 전쟁 방어나 지속 가능한 평화의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⁵⁾ 왜냐하면 전쟁이나 폭력은 일반적으로 생태적 문제, 경제적 문제, 문화적 문제, 정치군사적 문제 등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이나 폭력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영역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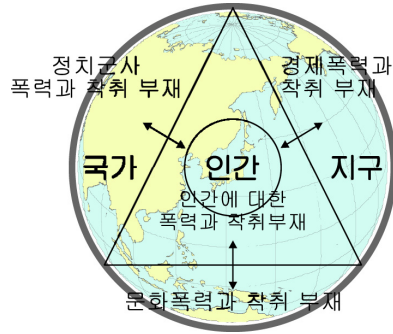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론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먼저 규명해야 한다.⁶⁾ 이를 위해서는 평화의 새로운 발명과 실현 이론이라 할 수 있는 ‘평화복합체론(Peace Complexes Theory)’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하는 것(존재자)’을 문제 삼아, 이것을 ‘존재적(ontisch)’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어떤 것의 의미를 해석하려면 존재하는 것의 존재, 그 기초적인 존재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존재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을 ‘존재론적’이라고 표현했다. 결국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現存在; 인간)의 존재, 그것의 존재방식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그의 기초적 존재론의 근본이며, 이러한 고찰 방법을 취하는 것을 존재론적이라고 표현했다.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서울: 중원문화, 2009) 등 참조.

- 5) 평화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는 장영권, 『지속 가능한 평화론』(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pp.23~35 참조. 또한 Immanuel Kant,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in Hans Reiss(ed.), *Kant’s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p.95~97. Stephen M. Walt,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5, no. 2 (1991), pp.211~239. Kenneth Boulding, *Unstable Pea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9) 등 참조.
- 6) 장영권, “DMZ 평화: 의미, 구축 전략, 과제,” 『통일전략』, 제12권 제1호(2012), p.97 재인용.
- 7) 평화복합체론, 지속 가능한 평화 등에 대해서는 장영권, 『지속 가능한 평화론』(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제2장; 장영권, “평화의 새로운 발명과 확장: 남북 ‘평화지대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1집 3호(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pp.108~113 등을 크게 참고, 재인용했다.

평화복합체론은 기존의 평화 관련 이론들이 갖고 있는 부분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필자가 새롭게 창안한 이론적 분석틀이다.⁸⁾ 평화복합체론은 기본적으로 영구평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존재론적 평화 조건들이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⁹⁾ 등 네 가지

〈그림 1〉 평화복합체적 평화 개념



지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다(〈그림 1〉 참조).¹⁰⁾ 이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평화의 의미가 단일체적 구성물이 아닌 복합체적 구성물로 고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8) 평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되고 있다. 하나는 국가안보 중심의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한 소극적 평화이론들이다. 여기에는 패권안정이론, 억지이론, 세력균형이론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국제규범 중심의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한 적극적 평화이론이다. 통합이론, 민주주의 평화론, 상호의존이론 등이 있다. 이들 연구 및 이론들은 평화유지에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나 평화회복과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에는 충분하지 않다.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서울: 박영사, 2004); 최영중, 『탈냉전기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정치변화』(서울: 오름, 2003) 등 참조.

9) 존재론적 평화의 한 조건이 되는 ‘정군평화(政軍平和: Polity Peace)’는 정치·군사 평화를 약칭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의 최후수단이 군사이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10) 필자는 당초 복합체적 평화의 조건으로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등 세 가지로 유형화했으나 최근에 지진, 기후 변화, 물 부족,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에 대한 생태환경의 위협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평화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즉 이는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보다 진화시켜 평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즉 평화복합체적 평화는 존재론적으로 평화가 생태평화 요인, 경제평화 요인, 문화평화 요인, 정군평화 요인 등 네 가지의 복합체적 평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들 네 가지 평화 요인이 존재론적 평화의 복합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이는 평화의 존재론적 조건인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등 네 가지가 모두 필요 충족되어야 지속 가능한 평화의 구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는 ‘자유·정의와 같은 천부적 권리에 따라 인간(생명)의 안전이 보장되고 공동체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국가(집단) 간에 생태적 위협, 경제적 이익 착취, 문화적 가치 대립, 정치적 주권 침해와 군사적 도발 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평화복합체론은 기존의 평화연구나 이론들이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이론이다. 과거의 평화연구는 단순하게 한 나라 또는 지역, 국가 간의 역사, 구조, 질서, 제도 등의 특성에 대한 단면적인 접근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일반적으로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 생태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확대 또는 축소된다. 이에 따라 기존 평화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존재론적인 평화복합체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2.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평화복합체론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존재론적으로 평화복합체적 경로(조건)를 통해 실현된다’. 이것이 평화복합체론의 이론적 근거와 핵심적 접근 경로가 된다. 이는 평화연구에 대한 기존의 국가 중심의 정군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평화는 정군적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평화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의미가 되는 네 가지 평화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물론 평화의 존재론적 영역은 이 밖에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평화조건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¹¹⁾

생태평화는 사람과 생태(생명, 자연)의 조화를 통해 생명의 공생을 유지하는 상태(생태환경의 상생과 지속적 보전)이다. 경제평화는 약탈적 경제구조 형성과 이를 통한 경제적 착취, 배분의 왜곡 등이 시정되어 모든 물질 토대가 정의롭게 배분되어 공유된 상태(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정의 배분)를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평화는 가치·역사·정체성 등의 왜곡·배척이 없는 공존의 상태(역사, 가치, 이념 등의 일체성)다. 정군평화는 국가 간의 주권침해나 정치적 탄압, 전쟁·군사도발 등이 없이 공영의 미래를 지향하는 상태(전쟁이나 폭력의 부재)를 말한다. 이는 세계적 평화학자인 갈통(Johan Galtung) 교수가 말한 직접적 폭력의 해소와 유사한 개념이다. 즉 소극적 평화에 해당된다.¹²⁾

세계체계에 속해 있는 모든 국가들은 평화의 상호의존(peace interdependence)이라는 지구적 네트워크에 얽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폭력

11) 이러한 영역적 분류는 전쟁의 발발 원인이 무엇이나에 따라 접근한 것이다. 전쟁의 발발 원인은 다양하다. 국제분쟁의 동기를 분석한 라이트(Quincy Wright)는 국제정치의 장래의 문제는 남북문제(경제문제)가 동서문제(문화문제)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레이니(G. Blainey)는 전쟁의 원인으로 경제적 동기의 전쟁, 이념적 차이의 전쟁,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전쟁 등으로 전쟁형태를 구분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쟁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논자마다 차이가 있다.

12) 갈통 교수는 평화를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평화로 구분하였다. 이 논문의 평화복합체론에 따른 평화의 존재론적 영역 분류는 갈통 교수의 분석 기준에 따르지 않고 평화의 실질적인 존재 영역에 따라 새롭게 접근한 것이다.

(전쟁)과 평화위협들은 원거리보다는 근거리, 즉 남북한 간에 발생하고, 단일한 평화조건보다는 복합체적 평화조건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불안은 종종 지리적 근접성 및 복합체적 평화조건과 관련된다.¹³⁾

따라서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 즉 지속 가능한 평화는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가 모두 조화를 이룬 상태이고, 이러한 평화를 추진해 나가는 지역 내 국가나 집단을 이루는 복합체적 집성체 또는 복합체적 동학을 ‘평화복합체(Peace Complexes)’라고 한다.

영구평화의 존재론적 평화조건인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중에서 선순환적 평화정책의 우선순위, 즉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의 순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갈등이나 대립관계가 있는 국가들은 생명의 전제가 되는 생태평화를 먼저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낮은 단계의 평화협력인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평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이를 통해 문화적 일체성 또는 정체성을 확립하여 문화평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평화들을 바탕으로 신뢰가 강하게 구축되어야 정군평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 번에 전체적으로 평화를 구축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남북관계에서 ‘선평화협정, 후평화구축’ 방식은 남북 및 미국 등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실현되기가 어렵다. 또한 평화협정을

13) Barry Buzan, “Regional Security as a Policy Objective: The Case of South and Southwest Asia,” in A. Z. Rubinstein(ed.), *The Great Game: The Rivalry in the Persian Gulf and South Asia* (New York: Praeger, 1983), chapter 10. Barry Buzan, et al., “Introduction,” in Barry Buzan, Ole Wæv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등 참조.

체결했다고 해도 이것이 곧바로 평화유지나 평화구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평화를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영역별로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남한과 북한처럼 심각한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¹⁴⁾

Ⅲ. 평화 구축의 구상: 한반도 ‘DMZ평화’

1. 한반도 DMZ 평화의 현황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DMZ의 평화가 최우선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¹⁵⁾ DMZ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의 휴전을 위해 1953년 7월 27일 전쟁 당사국인 유엔군 최고사령관과 북한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관 사이에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설정되었다.

¹⁴⁾ 현실의 평화구축은 존재론적 평화영역들을 완전히 분리하여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평화의 확대 과정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계적, 선순환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되 복합체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호 대립,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는 철저한 분리대응을 통해 평화가 축소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¹⁵⁾ 기존의 DMZ 연구 및 논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작은 손기웅 외, 『DMZ 총람-접경지역 평화적 이용과 접경평화공원의 국제적 사례』(서울: 코리아DMZ협의회, 2014), 손기웅 외, 『DMZ 총람-연표』(서울: 코리아DMZ협의회, 2013); 손기웅 외, 『DMZ 총람-환경·생태 현황』(서울: 코리아DMZ협의회, 2011); 손기웅 외, 『DMZ 총람-스토리텔링』(서울: 코리아DMZ협의회, 2012)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 김재한, 『DMZ 평화답사』(서울: 오름, 2006) 등도 있다. 또한 필자의 논문 장영권, “DMZ 평화: 의미, 구축 전략, 과제,” 『통일전략』, 제12권 제1호 (2012)에도 개괄정리가 되어 있다.

즉, 정전협정 제1조 1항에 의거하여 당시 양측의 군사적 대치선을 따라 동서 길이 248km의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이 만들어졌다.¹⁶⁾ 그리고, 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측과 북측 각각 2km씩, 폭 4km 지역에 무장을 금지한 DMZ가 휴전감시위원회의 감독 아래 설치되었다.¹⁷⁾

DMZ는 한국전쟁의 휴전과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설정된 특별지대다.

DMZ는 1953년 7월 설정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일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즉 DMZ가 한반도 평화 유지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것이다.

그러나 DMZ는 정전협정에 따라 쌍방 간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완충지대로서 설정되었지만 현재는 ‘중무장지대화’되었다.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 있고, 아직도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가 첨예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DMZ는 세계에서 오직 한 곳, 한반도에만 존재한다. 한반도의 허리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DMZ는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이자 60여 년 간 인간의 발길이 통제된 특별지대다. 모든 국가 간에는 국경선이 존재하지만 남북 한처럼 DMZ가 있는 곳은 없다.

DMZ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을 앞두고 아군과 적군이 한 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이로 인해 당시에 거의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다. DMZ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

16) 군사분계선은 서쪽으로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에서부터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김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 of 명호리에 이르는 248km (155마일)의 길이로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다.

17) 정전협정 제1조 1항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국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하여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리아 DMZ협의회 자료집 등 참고.

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DMZ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60여 년 간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하여 다양한 가치와 특성을 지닌 생명 지대로 전환되었다. 나아가 경제적, 문화적, 정군적 평화의 측면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지로 인식되고 있다. DMZ는 생물다양성, 세계평화, 지구촌 공동번영의 상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DMZ는 우선 생태평화의 측면에서 한반도의 마지막 청정지대이자 다양한 생태계가 보존된 생태계의 보고로 재탄생하였다. DMZ는 전반적으로 희귀 동·식물과 어류가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인간에 의해 희생되고 상처받은 수많은 동식물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DMZ 일원에는 사향노루와 산양 등 106종의 멸종위기 생물을 포함해 5097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반도 전체 멸종위기종의 43.1%, 전체 생물종의 13.4%에 이른다(〈표 1〉 참조).¹⁸⁾ 남북 동식물의 소중한 안식처이자 생명의 공간이었다.

〈표 1〉 DMZ 생태계 현황

※()안은 우리나라 전체 대비 비중

	전체종	멸종위기종
▶포유류	49 (39.5%)	15(75.0%)
▶조류	274 (52.5%)	55(90.1%)
▶파충류	18 (60.0%)	3(75.0%)
▶양서류	16 (72.7%)	3(100%)
▶어류	106 (8.9%)	10(40.0%)
▶무척추동물(곤충제외)	376 (6.1%)	0(0.0%)
▶무척추동물(곤충)	1930 (14.1%)	4(18.2%)
▶식물	1597 (30.5%)	13(16.9%)
▶균류	308 (9.1%)	0(0.0%)
▶지의류	71 (10.1%)	0(0.0%)
▶해안생물	352 (7.6%)	0(0.0%)
▶계	5097 (13.4%)	106(43.1%)

(자료: 환경부)

남북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DMZ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접점이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통로다. 이로 인해 DMZ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일 뿐

18) 『서울신문』, 2014년 10월 9일.

만 아니라 생태, 경제, 문화 등 모든 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학계는 물론 국외 학자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안해 왔다. 역대 정부도 DMZ 평화 구축에 관해 여러 가지의 한반도 DMZ 평화 구상을 밝혀왔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생태 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는 물론 정군평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접촉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부분적인 성과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큰 진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행히 남북한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시 제한적인 교류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과지로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DMZ는 여전히 남북한 간의 첨예한 대립과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준전쟁’ 지역이다.

2. 한반도 평화 구축 구상 : DMZ 평화

한반도에서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를 구축하기 위한 구상의 하나로 ‘DMZ평화’를 제시할 수 있다. 즉, 한반도 평화의 지속 가능한 존재론적 구축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구상의 하나가 ‘DMZ를 이용한 한반도 평화의 구축’이다. 이것이 DMZ평화이다. 즉 DMZ평화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남북한 간 지역적 수준과 평화복합체적 영역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¹⁹⁾

DMZ평화는 특수한 평화지대인 DMZ를 통해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을 막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단계적, 선순환적, 복합체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DMZ평화는 DMZ에 존재하고

¹⁹⁾ 장영권, “DMZ 평화: 의미, 구축 전략, 과제,”(2012). pp.94-101.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평화의 도구로 이용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모든 총체적 활동 또는 이를 실현한 상태를 의미한다.²⁰⁾

한반도 및 동북아와 세계라는 평화복합체에 속한 국가들이 먼저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모든 평화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DMZ 평화를 위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평화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평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DMZ를 ‘지속 가능한 평화지대(sustainable peace zone)’로 건설하여 평화의 조건들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²¹⁾ 평화복합체적 경로를 통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한반도 및 동북아와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구축에 매우 유용하다.

즉, 남한과 북한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전쟁 또는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지대를 건설하여 평화의 존재론적 조건들을 평화복합체적으로 이행하여 한반도의 통일이러는 남북한 간의 ‘평화통합(peace integration)’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²²⁾

특히 남한과 북한처럼 군사적 긴장이 높은 접경지역에 DMZ 평화구상을 통해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갈등 당사자들이 평화공원의 조성을

20) 장영권, “DMZ 평화: 의미, 구축 전략, 과제,” (2012). p.96.

21) 양병기, “이명박 정부와 남북한 관계: 현안 및 과제,” 『통일전략』 제8권 제2호 (부산: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p.201.

22)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남북합의서가 도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평화의 점, 선, 면을 만들고 이를 다시 남북 및 동서로 확대하여 한반도 전체를 평화공원화 내지는 평화지대화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반도 평화통합이 가능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전략에 관한 논문은 장영권, “DMZ 평화: 의미, 구축 전략, 과제”; 장영권,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참고.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평화공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과 분쟁 당사국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 그 자체만으로는 평화의 유지, 구축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평화 정착 방안을 모색하여 평화를 유지, 구축해 나가야 한다.

DMZ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도 평화의 회복, 유지, 구축 등 일련의 평화과정이 필요하다. 평화협정 체결은 당사국 간의 평화 회복에 핵심적 요소가 된다.²³⁾ 그러나 이를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 간에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의지적,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3. DMZ 평화구상의 제안 역사

남북한 관계에서 DMZ 평화구상을 제안한 것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²⁴⁾ DMZ 평화를 위한 최초의 연구 및 활동은 정전협정 체결 다음 해인 1954년에 남한 정부가 시작하였다. 이후 간헐적으로 생태학술 및 자연보존, 문화재 관리 등을 위해 몇 차례 실태조사가 실시됐다.²⁵⁾

23) 평화협정의 내용은 다양하다. 전쟁 종식 후 모든 것을 규정한 일반적 의미의 평화협정이 있을 수 있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를 합의한 내용도 넓은 의미의 평화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도 평화협정의 부산물이고, DMZ세계평화공원도 남북평화협정의 성과물이 될 수밖에 없다.

24) 김연철, “공원만 있고, 평화는 없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029233038&Section=05> (검색일: 2013년 11월 2일).

25) 김재한, “분단국체제 이탈자문제와 비무장지대,” 『통일전략』 제6권 제1호(부산: 한국통일전략학회, 2006), p.78.

DMZ 평화구상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1970년 미국 하와이대 교수인 페이지(Glenn D. Paige)는 처음으로 DMZ에 공원과 복지시설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²⁶⁾ 그리고 1971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 수석대표였던 로저스 소장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위한 4개 항을 제안했다. 비무장지대가 중무장지대로 변해가자, 애초의 비무장지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 2월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이 북한에 20개의 시범사업을 제안하면서,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3개 항을 포함시켰다. 즉 비무장지대 내 공동경기장 시설 건립을 통한 친선경기, 비무장지대 내 생태계 연구를 위한 공동학술조사,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완전 철거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평양 도로 연결, 설악산~금강산 자유 관광지대, 판문점을 통한 교류 등을 포함하면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제안이 7개나 된다. 전두환 정부는 당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시범사업을 제시했고, 그 중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19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DMZ 안에 ‘평화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일종의 평화를 회복, 구축하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등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DMZ를 바로 교류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²⁶⁾ 페이지 교수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정치학자로서 폭력과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세계적 비폭력주의 학자다. 그는 “비살생 사회는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화를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남과 북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했다. 그리고 이어 1992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DMZ에 대규모 '국제자연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1994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은 DMZ 자연공원화를 발표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7년), 유엔개발계획(1997~1998년) 등도 환경생태공원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등 DMZ 평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기도 했다.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DMZ를 가로지르는 소규모 평화지대들이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선언 등을 통해 DMZ 평화 관련 제안을 했으나 북한에 의해 거절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육지 DMZ 평화지대와 해양 서해평화지대를 모두 추진했지만 서해평화협력지대만 북한과의 합의를 도출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도 DMZ 평화적 이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만델라(Nelson Rolihlahla Mandela) 전 남아공 대통령은 2001년 3월 방한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손을 잡고 DMZ를 평화공원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접경 지역에 조성한 평화공원의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²⁷⁾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1월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DMZ 생태·평화적 관리'를 위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유네스코(UNESCO)·세계자연보호연맹(IUCN)과 함께 공동으로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권고문을 채택했다. 권

²⁷⁾ 만델라는 2004년 7월 15일 열린 DMZ포럼 국제회의에서 포럼 참석을 대신한 특별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문은 실행 4개 분야인 △보전·이용전략 △이해관계자 참여 △남·북한협력 △국제사회 지원과 관련한 10개 원칙을 제창했다.²⁸⁾

DMZ 평화구상을 위해 주목할 만한 제안을 한 학자는 평화학의 아버지인 갈통 교수이다. 갈통 교수는 2010년 12월 한국을 방문하여 “분쟁국인 에콰도르와 페루 사이에 평화공원 조성으로 인해 전쟁이 종식됐다”라고 하며 “DMZ를 중립적이고 비군사적이며 생태보존적 평화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²⁹⁾

IV. 평화의 구축 전략: DMZ 세계평화공원

1. 박근혜정부의 DMZ 평화구상(세계평화공원)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 8일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³⁰⁾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시절 및 인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 구상을 검토했다. 그리고 2013년

28) 『아시아경제』, 2010년 11월 16일.

29) 제6회 DMZ평화상을 수상한 요한 갈통 교수는 2010년 12월 시상식에서 “약 500 km²의 넓이로 DMZ의 절반 정도 크기에 불과한 평화공원 조성으로 인해 에콰도르와 페루 사이 전쟁이 멈췄고 1998년 이후 전쟁은 종식됐다”고 강조했다. 『강원일보』, 2010년 12월 30일.

30) 박근혜 대통령은 ‘DMZ 평화’ 구상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DMZ 세계평화공원(2013년 5월 8일, 미국 상하원 의회연설)’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다가 학계 등에서 DMZ를 생태·협력·평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2014년 9월 25일 UN총회 연설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DMZ World Eco-Peace Park)’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여기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DMZ 세계평화공원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5월 8일 미국을 방문하여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한반도 DMZ 평화구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밝혔고, 미국 의회는 이를 박수로 지지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6월 28일 한·중 정상회담, 7월 27일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사, 201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2013년 8월 유엔 사무총장 청와대 방문, 2014년 1월 신년사,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통일구상 발표, 2014년 9월 25일 유엔총회 연설, 2014년 10월 통일준비위원회 발언 등에 이르기까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다.³¹⁾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월 15일 발표한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³²⁾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우리 의식 속 전쟁 기억과 도발 위협을 제거"하며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평화를 만드는 것은 상호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해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구축해 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 목적과 관련 "이제는 남북한 간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

31)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은 남북 당사자 간의 합의도 필요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의 동의와 참여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중국, 유엔 등에 이를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책소식, "박근혜 정부 2년 통일업무 성과,"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15년 2월 16일) 참고.

32) 『국민일보』, 2013년 8월 16일.

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논의 모임을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 왔다.

정부는 “서부·중부·동부전선에서 각각 DMZ 세계평화공원 후보지가 검토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 입지선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는 파주를, 강원도는 철원·고성 지역이 각각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림 2> 참조)³³⁾.

<그림 2> DMZ 세계평화공원 벨트 구상안



33) 『연합뉴스』, 2013년 8월 13일.

정부는 후보 지역 중 한 곳에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지역에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으로 선정된 지역에선 남북한의 무장 병력과 장비를 모두 철수시키고 지뢰를 제거하는 한편 DMZ 내에 설치된 철책이 있으면 뒤로 뺀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DMZ 평화구상 제안은 과거 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과거 정부는 남북한 관계의 화해, 협력,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제시했다. 즉 1982년 전두환 정부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까지의 구상은 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현재까지 평화 구축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³⁴⁾

더구나 DMZ 세계평화공원에서 ‘평화공원’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비판 받을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평화도시로 접근했고,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소규모 평화지대(예를 들어 서부, 중부, 동부)’로 접근했다. 박근혜 정부의 평화공원이라는 개념은 평화도시나 평화지대보다 작은 하위개념이다. DMZ 평화구상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평화 설정의 범위가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어떻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비록 ‘평화의 작은 점’이라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막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환영하고 기대하는 분위기이다.³⁵⁾ 그러나 ‘DMZ 세계평화공원’은 잘못 추진하면 남남갈등은 물론 남북한 간의 또

³⁴⁾ 김연철, “공원만 있고, 평화는 없다”.

³⁵⁾ 남북한이 보다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평화적 이용이 향후 보다 깊고 넓은 신뢰구축과 협력확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작은 규모의 평화적 이용인 ‘DMZ 세계평화공원’이 더 실현가능성이 높은 면도 있다. 손기웅, “DMZ 세계평화공원 1년, 평가와 과제,” 『환경일보』, 2014년 4월 29일.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단계적, 복합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DMZ 세계평화공원'의 개념

먼저 '평화공원'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평화공원이 500여 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⁶⁾ 평화공원의 종류와 성격도 매우 다양하다.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공원도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성찰의 공간으로 조성된 평화공원도 있다.³⁷⁾

국가 간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를 구축한 대표적인 평화공원은 에콰도르와 페루 접경에 조성된 ‘코르디에라 델 콘도르 평화공원’이다.³⁸⁾ 양국은 아마존 강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170년 동안 이어진 분쟁을 1998년 평화협정을 맺어 종식하고, 접경지 1만 6425 km²에 평화공원을 조성·운영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1914년 100년 전쟁을 종식하면서 세계 최초의 평화공원인 ‘모로쿠리엔 평화공원’을 만들었다. 두 나라가 접경에서 각각 쌓아올린 18m 높이 평화기념비는 꼭대기에서 서로 화해의 손을 잡는 모양새다. 기념비 뒷면에는 ‘두 형제 나라에선 더 이상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36) 이 부분의 내용은 김연철의 글을 주로 참고했다. 김연철, “공원만 있고, 평화는 없다”.

37) 국제자연보호연맹은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600여 개의 국경지대 보호지구 중에서 25개 정도가 국제평화공원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워터턴-글레이셔 국제평화공원은 전 세계에 170여 개의 국제평화공원이 있다고 밝혔다. 손기웅 외, 『DMZ 총람-접경지역 평화적 이용과 접경평화공원의 국제적 사례』, pp.49-117.

38) 『조선일보』, 2015년 1월 1일.

과거의 폭력에 대한 기억과 성찰을 위한 대표적 공원으로는 일본의 히로시마(廣島) 평화공원과 나가사키(長崎) 평화공원이 있다. 이들 평화공원은 원자폭탄의 잔혹성을 알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와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간이다.

평화공원 중에는 환경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평화협력의 공간도 있다. 태국·캄보디아·라오스 3국은 국경분쟁 해소 차원에서 접경지에 ‘에메랄드 삼각 삼림보호지역’을 조성했다. 이곳에 사는 희귀 야생동물과 삼림을 함께 보존하자는 목적도 담았다.

그리고 한반도의 DMZ처럼 분쟁국 간 접경지역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도 있다. 유럽의 작은 섬나라인 키프로스에는 남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인 ‘녹색지대(Green Line)’라는 평화공간이 존재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충돌과 대립의 현장인 시아첸 협곡에 국제기구가 개입하여 평화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후 동·서독 국경 지대에 생태 보전을 위해 ‘그뤼네스 반트 공원’을 조성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공동으로 산호초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홍해 해양평화공원도 있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서해 해양평화공원은 일종의 해상 평화지대이다.³⁹⁾

군사적 대립지역인 접경지역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화해의 장소이고, 평화의 상징이며, 공영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어떤 장소에, 어떤 조형물을 짓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DMZ

³⁹⁾ 남과 북은 그동안 7·4 남북공동성명서 등 평화협정에 준하는 여러 가지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도 그중의 하나다. 그러나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평화공원이 조성도 되기 전에 좌초되었다. 남북 간에는 이처럼 합의·파기·갈등이라는 ‘불신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합의서를 유효화해야 하며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화구축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는 그 자체가 사실상의 평화공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개성공단도 공생공영을 위한 일종의 산업평화공원이다.”⁴⁰⁾ 영어로 ‘Industrial Park’이라고 공식 표기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지대 역시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관광평화공원이다. 남북한은 이처럼 이미 다양한 평화공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세계적 보물인 DMZ 평화공원을 방치해서도 안 되고,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DMZ 평화공원 조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평화공원의 목적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평화의 조성’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세계평화공원 역시 핵심은 ‘평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개념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존재론적 접근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내에 한반도 및 동북아와 세계의 존재론적 의미의 평화, 즉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 및 국제사회가 특정한 시설물이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사람들에게 관람, 참여시키는 제한적 공간”을 의미한다고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DMZ 세계평화공원은 존재론적 의미의 평화 구축을 위해 한반도 및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 다짐하는 평화의 공간(공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전쟁의 상흔을 치유, 승화하고 세계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남북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특히 DMZ 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지대로 만듬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

40) 김연철, “공원만 있고, 평화는 없다”.

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평화 창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⁴¹⁾ 이 같은 측면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에는 남한과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3.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축 전략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8월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북한 측에 공식 제안한 이후 정부는 최근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⁴²⁾ 이에 따라 추후 북한 측의 호응 여부에 따라 빠른 속도로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아직 실질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이 남북한의 경색을 해소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구축 전략이 요구된다. 남북한 관계는 그동안 지나치게 정군적 현안에 경직되어 다른 영역도 평화협력이 전면 차단되어 왔다.⁴³⁾

그러므로 남북한 관계가 정군적 요인에 관계없이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려면 존재론적 의미의 평화복합체적 접근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에

41) 김연철, “공원만 있고, 평화는 없다”.

42) 통일부 정책소식, “박근혜 정부 2년 통일업무 성과,”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15년 2월 16일).

43)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 ‘선 평화협정 후 평화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선 평화구축 후 평화협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의 회복, 유지, 구축이 어려워지고 있다. 보다 실용주의적, 실사구시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존재론적 평화에 따라 중국-대만처럼 영역별로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단계적, 복합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평화 구축의 존재론적 접근 전략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작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즉 평화를 구축하면서 평화가 중간에 단절 또는 파기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하고 이행하기 쉬운 분야부터 접근하여 제도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화의 존재론적 조건인 생태, 경제, 문화, 정군 평화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분야는 생태평화분야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도 거부감이 적은 국경선의 환경생태분야부터 접근하며 통일의 결실을 거두었다. 생태평화 협력을 토대로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1) 생태평화적 접근: 생명의 공생

남북한 간에 평화협력이 꼭 필요하고 접근이 가장 용이한 영역이 생태평화분야이다. 생태평화 영역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서 시작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존재론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다. “무기를 줄이자”라는 말보다는 “한 그루의 나무라도 함께 심어 평화를 가꾸자”라는 말이 더 북한을 움직이기 쉽기 때문이다.

생명만큼 호소력이 큰 것은 없다. DMZ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있다. DMZ 평화를 위한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모든 ‘생명의 공생’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공생의 대전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평화적 접근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은 DMZ 생태평화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평화협력 사업을 모색

할 수 있다. 즉, DMZ의 생태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생태체험관 △생명 교육 체험장 △생태평화공원 △남북공동 종자 및 식량자원 농장 △생물 보존 및 생물자원 단지 △생물다양성 보존 및 확장 사업단지 △신품종 개발 과수 영농단지 등의 조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생태평화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DMZ는 한국전쟁의 최대, 최후의 격전지로 인간은 물론 동식물 등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된 지역이다. 생명은 보편적 가치이자 본질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한국전쟁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경고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에 각종 종자 보존 단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인간의 근원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생명은 ‘존재의 시작(beginning of beings)’이다. 전쟁의 항구적 방지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역사적 교훈의 특별 지대가 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후 세대들에게 인간의 참혹한 전쟁을 경고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생명교육의 장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명과 인간이 가져야 할 본연의 가치를 잃어가는 현실을 극복하고 생명과 인간의 참된 의미를 복구하는 전당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DMZ 안팎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종자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생태평화사업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 남북한이 함께 ‘통일농사’를 지으며 평화협력의 마중물 같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생태적 통일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⁴⁴⁾

⁴⁴⁾ 통일부는 2014년 6월 4일 남북교류를 중단한 2010년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딸기 모종 대북농업지원 사업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이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제안에 언급된 농축산 산림협력,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남북한이 DMZ에 평화의 숲을 조성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 실제로 남북한 당국은 DMZ 평화의 숲 조성에 긍정적이다. 최근 북한의 한 장군은 평화의 숲을 조성해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호감을 나타내기도 했다.⁴⁵⁾

특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생태평화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 조사에서 한국인의 75%가 DMZ 내에 ‘생명의 숲’이나 ‘식물원 조성’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이들은 DMZ를 보존가치가 있는 ‘특별한(unique) 생태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DMZ 식물원을 통해 전쟁 당시 참혹했던 모습을 기억시키고 이들이 어떻게 부활하고 있는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식물원 건립이 오히려 생태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DMZ의 생태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어떻게 보면 DMZ 자체가 거대한 생태평화의 공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DMZ의 생태보존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각종 철새 도래지가 산재해 있고,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백두대간이 관통한다. DMZ는 신약의 약재 등 희귀식물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DMZ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⁴⁷⁾

중심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2014년 6월 5일.
45) 세계청소년 환경운동가 조너선 리가 한국방문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했다. 『서울신문』, 2014년 6월 3일.

46) 미국 델라웨어대학 식물원수목원경영 전공 신동아 씨의 석사논문 “DMZ 보전을 위한 연구교육문화기관으로서 식물원의 잠재적 역할과 기능”에서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CCZ) 내 식물원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2010년 9월 21일에서 11월 11일까지 약 두 달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한국인 426명의 답변을 토대로 분석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2013년 9월 18일.

47) ‘생물권 보전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골라 유네스코가 지정한다. 이

DMZ 생태평화를 위해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평화를 위한 평화의 파괴’ 행위이다. 토목적 측면의 ‘개발’을 강화한 나머지 DMZ의 생태평화적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DMZ의 생태보전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철도, 도로를 놓고 각종 인공물을 설치하여 생명들을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경제평화적 접근 : 분배의 공유

DMZ 평화를 위한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분배의 공유’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생명의 공생이 지속 가능하려면 불가피하게 생산과 분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은 독점이나 착취구조가 아닌 분배 정의에 따른 공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평화적 접근이 요구된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전쟁을 한 적대적 관계이다. 남한과 북한이 적대적 관계를 화해,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의 협력인 경제평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남북한 간에 경제평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공유경제적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과 분배의 공유가 중요하다.

남북한은 DMZ 경제평화 구축을 위해 다양한 평화협력 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 DMZ 경제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평화경협 기구 및 사무소 설치 △제2 개성공단 등 다양한 남북 경제평화협력 공간 △남북평화협력 경제특구 설정 공동개발 △평화경제공동체 시범마을 조성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은 개발 억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미 북한의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과 남한의 설악산, 제주도 등도 지정돼 실효성을 경험했다.

남북한은 경제평화협력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2013년부터 경제정책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북한 접경지역의 북측 지역에서 중요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동해안 지역에 ‘동해안 광역 관광특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안의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체제의 가장 중요한 상징사업이다.⁴⁸⁾ 북한의 동해안 특구 계획에는 금강산 관광의 국제화, 그리고 배후 도시인 원산의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나아가 서해안 지역에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 참조). 강령군 경제특구의 총면적은 505.546km²에 달하고, 계획 총 투자액은 500억 달러 규모다. 70만 명의 고용효과를 목표로 하고, 재정수입 100억 달러, 그리고 천 개의 산업 고리를 만들겠다는 어마어마한 구상이다.⁴⁹⁾

“강령군은 현대가 개성공단을 추진하기 이전에 한 때 공단 후보지로 검토한 곳이다. 강령군은 해주항을 항만으로 가진 일종의 임해공단으로서의 특성이 있다.”⁵⁰⁾ 북한의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이 실현되면, 북한 최남단 해군기지인 ‘등산곶 기지’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등산곶 해군기지가 경제특구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48) 김연철, “10.4 남북정상선언의 현재적 의미와 실천과제-서해평화협력시대와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 <<http://www.selfgo.org/news/articleView.html?idxno=477>> (검색일: 2014년 10월 7일).

49) 북한의 조선합영투자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중국해외투자연합회’가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홍보용으로 작성한 투자 계획에 이와 같은 구상이 담겨 있다. 김연철, 위의 글.

50) 김연철, 위의 글.

〈그림 3〉 북한 강령군 인근의 지리 현황



해주·강령특구는 해상물류 측면에서 남한과 중국 모두와 가깝다. 중국의 산둥반도, 남한의 인천과 인접해 있어서 일종의 해상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강령군은 서해의 군사적 신뢰구축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므로 당연히 정군적 평화 환경이 개선되어야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

특히 경제평화적 측면에서 남북 공영을 촉진하기 위해 제2, 제3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관문으로 DMZ 및 접경지역에 남북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들 남북 공동산업단지 대상지역으로 철원과 파주, 고성 등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⁵¹⁾

DMZ가 세계평화의 출발지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나 도로의 연결 및 통과가 중요하다. 이 같은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9월 푸틴

⁵¹⁾ 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여 DMZ 세계평화공원 후보지로 검토하기도 했다.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코-유라시아 철도(K-Eurasia Railroad)’는 DMZ를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DMZ로 접근하는 길을 다원화할 수 있다(<그림 4> 참조).⁵²⁾

<그림 4>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노선도



북한의 함경북도 나선 경제무역특구와 러시아 극동지역 도시 하산을 잇는 상업운행 철도 50여km가 5년간의 개·보수 공사를 거쳐 2013년 9월 22일 다시 개통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 및 경제 분야 협력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남한의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2)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2013년 9월 10일 러시아 제1의 국영 중공업회사인 UVZ 경영진이 현대로템 창원 철도차량 공장과 연구소를 방문, 대규모 러시아 철도사업에 대한 협력 및 기술 이전 방안 등을 협의했다. 『파이낸셜뉴스』, 2013년 9월 9일.

DMZ를 통한 남북한 간의 경제평화 협력의 확대는 북한은 물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⁵³⁾ OECD 국가 중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가장 빠르다. 한국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북한이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경제개방을 시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로 호혜적 경제평화 협력의 기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제평화적 접근을 통해 DMZ 평화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남한과 북한이 DMZ를 통한 경제평화 협력은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DMZ 경제평화 특구의 미래는 남북관계에 달려 있다. 남북한은 새로운 미래의 공동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회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문화평화적 접근 : 가치의 공존

DMZ 평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가치의 공존’이 필수적이다. 가치가 대립적, 파괴적 구조가 유지되면 평화는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DMZ 평화가 존재론적으로 항구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문화평화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문화평화의 의미는 전쟁이나 폭력에 대한 기억을 용서, 화해함으로써 치유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DMZ 문화평화 구축을 위해 다양한 평화협력 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DMZ 문화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이산가족면회소 △남북체육교류 시설 △영화제, 미술제 등 남북문화예술교류의 공간

⁵³⁾ 경제협력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년~17년 3.4%, 2018년~2030년 2.4%, 그리고 2031년부터 1%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DMZ 남북문화예술의 공동 창조 공간 △세계 평화생명 사상의 성지 △세계평화 창출의 시험무대 등의 조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은 먼저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통해 전쟁과 폭력에 대한 기억을 치유해야 한다. 폭력의 기억이 존재하는 한 DMZ의 평화, 남북한의 평화, 인류의 평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산가족 상봉장소 마련 등 다양한 문화평화의 모색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지구촌 평화의 발원지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은 특히 DMZ를 꼭 기억해야 할 ‘공존의 평화 성역’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DMZ가 한반도의 평화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전 세계 공동의 노력을 공감할 수 있는 공존평화의 장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장(공원)을 마련하여 세계를 향한 평화의 소중함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DMZ 세계평화공원은 한국전쟁 참전군인, 참전 21개국, 참전 세대, 전후 세대가 화해와 공존을 통해 하나가 되는 평화 미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전국은 물론 세계 각국과 다양한 문화평화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⁵⁴⁾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평화 콘텐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DMZ의 문화평화를 위해서는 문화적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창조적 문화 아이콘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파주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연결돼 있고 분단을 상징하는 판문점과 대성동 마을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인 철원에는 DMZ 내 궁예성터와 노동당사 등 고대와 현대를 넘나드는 문화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⁵⁴⁾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홈페이지; <<http://www.nakdongriver-peacefestival.or.kr>> 참고.

특히 DMZ 곳곳에는 미술, 영화, 문학 등 풍부한 문화평화의 자산이 내재되어 있다. 지난 2000년 남북간 합의에 따라 경의선 철로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분단의 아픔이 반영된 역사적 유물들, 이를 태면 지뢰, 철조망, 군인유해 등이 훼손되기도 했다.⁵⁵⁾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4) 정군평화적 접근: 미래의 공영

DMZ 평화에서 가장 힘든 완결적인 요건이 정군평화의 실현이다. DMZ에서 군사적 충돌과 방지를 위해 말 그대로 ‘비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DMZ 평화를 위한 정군평화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DMZ에서 정군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남북한의 평화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은 DMZ 정군평화 구축을 위해 다양한 평화협력 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 DMZ 정군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평화기구의 공동유치 △남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전쟁예방 협력 △지뢰 제거 및 무장 단계적 감축 △군축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한 공간 조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DMZ 정군평화 구축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DMZ에는 남측은 80~90개, 북측은 150~160개의 최전방 경계초소(GP; Guard Post)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정전협정에 따라 개인화기만 반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북한은 MDL 근처에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사거리 54~60km에 이르는 장사정포를 대거 밀집시켜 놓고 있다.

⁵⁵⁾ 경기대 강진갑 교수는 국제환경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신문』, 2014년 5월 29일.

DMZ는 우발적인 총격이 가해져도 즉각 응사하는 등 24시간 긴장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DMZ 내에 설치된 최전방 초소인 GP나 GOP(General Outpost; 일반전초)에서의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이 잦다. 201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성립 이후 2012년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약 3000건이었다. 이 중 대부분이 DMZ 내의 도발이었다.⁵⁶⁾

남북한 관계가 냉랭할수록 DMZ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 높아진다. 최근에는 북한군이 우리 군 최전방 진지를 점령하는 연습을 노골적으로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우리 군의 GP, GOP와 유사한 모형 진지를 구축한 뒤 포병부대가 이를 타격하고 이어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점령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DMZ의 평화적 이용을 제안했으나 김 위원장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MZ에 있는 남북 GP와 중화기를 철수해 평화지대로 만든 뒤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제안하자 김 위원장이 이를 반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간의 DMZ 정군평화를 위해선 현재 북한과 협의 중인 DMZ내 공동 유해발굴사업 등 낮은 수준의 군사적 평화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 지역과 DMZ 등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 3~4만여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은 보다 높은 단계의 군사신뢰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DMZ 내에 매설된 100만 개 이상의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 작업도 공동 추진해야 한다. 지뢰를 모두 안전하게 제거하려면 400년이 걸린다는 설도 있다. 특히 현무암 협곡지대가 많은 중서부전선은 지뢰 탐지

⁵⁶⁾ 『아시아경제』, 2014년 5월 5일.

가 더 어렵다. 북한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DMZ 평화를 위한 세계평화공원은 기본적으로 비무장지대 안에 조성되는 평화사업이다. 이로 인해 남북한 간 침예한 군사대치 상황을 감안할 때 정군적 고려사항은 이 사업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북한이 그동안 남한의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은 바로 정군적 고려 때문이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도 2013년 7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목적의 DMZ가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된다는 의미는 새로운 남북평화를 우리 손으로 이끌어내자는 의지”라고 밝혔다. 류 전 장관은 “국민적 공감과 협조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갖고 갈등을 풀어갈 때 DMZ가 진정한 평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⁵⁷⁾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은 분명히 정군적으로 경색된 남북한 관계 개선과 새로운 통일미래를 여는 통로가 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정군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접촉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생태평화나 경제평화, 문화평화 등 낮은 수준의 존재론적 평화영역부터 단계적, 복합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가장 긴장이 높은 DMZ에서 먼저 점, 선, 면 평화를 구축(소평화지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DMZ를 하나의 평화지대(중평화지대)로 만든 후 이를 남북 양측으로 확대하여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평화지대(대평화지대)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57) 『환경일보』, 2013년 7월 12일.

4.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축 과제

1) 남한과 북한의 평화협력

남한의 북한에 대한 DMZ의 평화적 이용 제안은 과거 역대정부부터 계속 있어 왔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다양한 제안을 해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북한의 거부로 논의조차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DMZ의 평화적 이용' 제안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평화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DMZ에 대해 정군평화의 문제로 인식하고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한이 호응해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남북한 간 협의를 본격 시작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직후 북한은 DMZ 세계평화공원 제안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민족 분열이 불행과 고통을 안고 사는 온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매우 거칠게 비난했다.

또한 2014년 4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문장'을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돈벌이 목적에 리용'하려는 것으로 격하시키기도 했다. 반면 북한은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서해 5도 지역을 '서해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역제의를 했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3년 8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방문 중에 미 의회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며 "북한 내부

전문가들이 DMZ 세계평화공원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⁵⁸⁾

이에 따라 남북한의 관계 개선에 따라 DMZ 세계평화공원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현실적 방안을 갖고 북한과 협의해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 왔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둔 2013년 9월 21일 행사 연기를 돌연 발표기도 했다. 이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인지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은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영역 등 평화협력이 용이한 영역부터 단계적, 복합체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령 DMZ 안팎에 생태평화적 접근을 통해 남북평화농장을 건설하고 친환경농업을 전개하면서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첫 단추를 꿴 데 용이할 것이다.

2) 국제사회의 평화협력

DMZ가 가지는 국제적 성격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UN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속에서 DMZ 평화 구축이 모색되어야 한다. DMZ가 좁게는 남북한, 넓게는 모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국제적 평화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DMZ는 남북한 및 인류의 자원에 대한 평화가치의 재발견으로 보고 새로운 평화보고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DMZ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평화협력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평화협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이나

58) 『노컷뉴스』, 2013년 8월 30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남북한 간의 평화협력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DMZ가 미국, 중국, 북한 간의 정전협정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평화협력이 중요하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 관광 등을 위해 남북 연결도로를 놓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사령부의 협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유엔, 중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제안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한국에 대한 지원을 결의했던 바로 그 미국 의회에서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천명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2013년 8월 23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DMZ 세계평화공원'을 위해 반 총장과 유엔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적극 돕겠다"고 밝혀 원칙적인 지지를 천명했다.

특히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적대국으로서 북한을 지원하고 싸웠던 중국의 협조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DMZ 세계평화공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북한에게도 잘 설명해줄 것을 요청까지 했다.

V. 결론: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DMZ

DMZ는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평화를 유지,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존재론적 조건인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 평화복합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DMZ 평화를 위해서 남한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다양한 구상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정군적 전략에 따라 이를 거부해 왔다. 다행히 2000년 6월 남북한은 6·15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등을 합의하고 추진해 왔다.

남북한 사이에는 현재 개성공단사업만 명맥이 유지될 뿐 다른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최근의 남북한 관계로 보아 조만간에 관계가 개선, 회복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DMZ 평화를 위해 비무장지대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남북한 상호 간에 신뢰가 쌓여 가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관계는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관된 정책적 의지를 갖고 꾸준히 대화를 유지해 나가며 신뢰를 구축해 나가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행된다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어떤 결과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준비는 하되,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문제 등과 관련한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부 당국의 기본 입장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적 규범이 통하는 남북

관계를 정립해 가겠다”고 말했다. 물론 꾸준한 대화를 통해 남북한 관계가 차츰 안정되고,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간다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물론, 그 이상의 일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DMZ 평화는 존재론적 평화 의미에 따라 단계적, 복합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한 목표의식을 갖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평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특히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것은 북한을 전혀 모르고 접근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도 DMZ 평화를 적극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DMZ 평화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은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접근, 조성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즉 평화협력이 가장 용이하고 남북한이 절실히 필요한 생태평화부터 시작해서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등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peace)’는 말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접수: 2015년 2월 23일 / 심사 : 2015년 5월 12일 / 게재확정: 2015년 5월 13일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 손기웅·김미자·강동완·오지영·정세희. 『DMZ 총람-접경지역 평화적 이용과 접경평화공원의 국제적 사례』. 서울: 코리아DMZ협의회, 2014.
- 손기웅·문광춘·최순미. 『DMZ 총람-환경·생태 현황』. 서울: 코리아DMZ협의회, 2011.
- 손기웅·문성묵·조정화·정세희 편. 『DMZ 총람-연표』. 서울: 코리아DMZ협의회, 2013.
- 손기웅·정세희·최윤희 편. 『DMZ 총람-스토리텔링』. 서울: 코리아DMZ협의회, 2012.
- 장영권. 『지속 가능한 평화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2009.
- 최영종. 『탈냉전기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정치변화』. 서울: 오름, 2003.
-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04.
- 현인택. “탈냉전과 평화.”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1992.

국문 논문

- 김성주. “마르크스주의의 전쟁과 평화의 정치경제학.” 『이론』 제11호. 서울: 새길, 1995년 봄/여름.
- 김재한. “분단국체제 이탈자문제와 비무장지대.” 『통일전략』 제6권 제1호(2006).
- 양병기. “이명박 정부와 남북한 관계: 현안 및 과제.” 『통일전략』 제8권 제2호(2008).
- 장영권.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전략-경제평화론적 접근.” 『평화연구』 제17권 1호(2009).
- 장영권. “DMZ 평화: 의미, 구축 전략, 과제.” 『통일전략』 제12권 제1호(2012).
- 장영권. “평화의 새로운 발명과 확장: 남북 ‘평화지대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1집 3호(2011).

영문 단행본

- Kenneth Boulding. *Unstable Pea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9.
-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영문 논문

- Barry Buzan, et al., "Introduction," in Barry Buzan, Ole Wæv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 Barry Buzan, "Regional Security as a Policy Objective: The Case of South and Southwest Asia," in A. Z. Rubinstein(ed.), *The Great Game: The Rivalry in the Persian Gulf and South Asia*, New York: Praeger, 1983.
- Immanuel Kant,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in Hans Reiss(ed.), *Kant's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Stephen M. Walt,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5 no. 2 (1991).

신문

- 손기웅. "DMZ세계평화공원 1년, 평가와 과제." 『환경일보』, 2014년 4월 29일.
- 『강원일보』, 2010년 12월 30일.
- 『국민일보』, 2013년 8월 16일.
- 『동아일보』, 2014년 6월 3일, 5일.
- 『서울신문』, 2014년 5월 29일, 10월 9일.
- 『연합뉴스』, 2013년 8월 13일, 9월 18일.
- 『조선일보』, 2015년 1월 1일.
- 『환경일보』, 2013년 7월 12일.

인터넷 자료

- 김연철. "공원만 있고, 평화는 없다"; <<http://www.pressian.com>>
- 김연철. "10.4 남북정상선언의 현재적 의미와 실천과제-서해평화협력지대와 강령
군 경제특구 계획"; <<http://www.selfgo.org>>
-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홈페이지; <<http://www.nakdongriver-peacefestival.or.kr>>
- 통일부 정책소식. "박근혜 정부 2년 통일업무 성과"; <<http://www.unikorea.go.kr>>

The Ontological Meaning and Building Strategy of Peace : Focused on 'DMZ Peace'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Jang, Young-Kwon (Institute of National Future Strategies)

Abstract

How should we sustain peace, and prevent it from being destroyed on the midwa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on peace in the way of 'the ontological meaning of peace.' The ontological meaning of peace is sustainable conditions or states of peace, satisfied to guarantee the practical existence of peace. Ontologically, peace consists of four conditions: ecological peace, economic peace, cultural peace, and political-military peace.

DMZ could be a gate opening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o open this gate, it is needed to recover, maintain, and establish the peace in accordance with the ontological meaning of peace. In particular, to make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sustainable and to prevent it being destroyed on the midway, it is desirable to pursue 'the peace complexes' consisting of four categories of the ontological conditions of peace: ecological peace, economic peace, cultural peace, and political-military peace.

To this day, South Korea has proposed diverse peace initiatives to North Korea in order for DMZ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North has resisted them. Meanwhile, between the two Koreas only G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is barely surviving, but other projects were all

shut down. Given the rec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hard to expect that the relationship would be improved and recovered in the near future. In this circumstance, Park Geun-Hye government has made a proposal of creating DMZ World Peace Park for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ried to make it realized. However, the realization of this project is yet to be known.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peace.’ To realize the success of DMZ World Peace Park, Park Geun-Hye government is required to come up with a strategy of ‘peace complex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ntological meaning of peac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tart with ecological peace, which is the most urgent and easiest way for peac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n build economic peace, cultural peace, and political-military peace in a stepwise way and a virtuous circle.

Key words: Ontological Peace, Peace Complexes Theory, Peace Initiative, DMZ, World Peace Park

장영권(Jang, Young-Kwon) —————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학, 평화학, 남북 및 동북아 관계이다. 현재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한국평화미래연구소 대표, 한국DMZ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2012), 『한반도 평화: 이론·구상·전략』(2011), 『지속 가능한 평화론』(2010), 『상생평화국가와 한국외교강국론』(2008) 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성훈 · 최재용 · 이윤호 (동국대학교)

국문요약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수요가 점증하면서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한 주민보다 높은 범죄율은 시급히 관리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목적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에 있음에도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은 미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 앞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존의 연구자료를 종합하여 실태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 사회유대이론, 긴장이론, 낙인이론, 이주이론/경제적 불평등이론, 일탈하위문화이론 등 주요 범죄학이론을 분석의 틀로 설정,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가해 가능성과 취약성에 집중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범죄율, 범죄학이론, 취약성, 범죄피해

I. 서론

1990년을 전후하여 북한의 중앙배급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남한¹⁾으로 유입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2년부터 북한당국의 국경통제가 삼엄해지면서 증가율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누적된 총 인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월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약 27,810명으로 추정된다.²⁾ 이는 본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1998년의 추정치인 947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2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현재의 증가 추세와는 별개로 북한의 상황은 언제라도 예기치 않게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관수(2010)는 북한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시기에 북한이탈 난민의 15%인 10만 명 정도가 북한을 떠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통제력을 상실하면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60만 명 규모의 북한이탈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³⁾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쟁점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단순히 규모의 증가 때문만이 아니다. 물리적 수의 증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지니는 몇 가지 특성들로 인해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해 나가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표현과 남한이라는 표현을 필요에 따라 혼용한다.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이지만 외국에서는 남한 또는 북한이라는 표현을 언론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통일부 정착지원과 통계, 2015.

3) 해당 논저에서는 북한 위기상황에서 발생될 난민 인구를 총 70만 명으로 예측하였다. 한관수, “북한 위기상황시 난민 규모 & 탈출경로 시뮬레이션,” 『신동아』, 4월호(2010) 참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범죄율은 10%에 달한다.⁴⁾ 이는 한국사회 전체 평균 범죄율 4.3%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범 비율 역시 우리나라 전체 재범 비율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율 또한 23.4%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사회의 적응에 있어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가능성 증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적 이질성과 한국사회 법제도에 대한 무지 등 북한이탈주민이 가지는 취약점은 범죄 가해 및 피해 유발의 주요 요인이 된다.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 범죄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유입될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국민의 정서적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사회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범죄학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가능성과 원인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론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미흡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일반에 대한 통계자료는 기존 문헌 및 논문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장준오·이정환(2006)에서 활용된 설문조사 원자료를 2차 활용해 빈도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했다.

4) 김운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책임연구 보고서)』(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7). 이 수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도 있다. 자세한 것은 각주 11번 참조.

II.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주민을 연령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2012년 기준 24,201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에 20대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이는 범죄사회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이 유입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경찰청의 공식집계를 살펴보면 국내 전체 범죄자의 연령 구성은 20대와 30대에 약 40.8%가 집중되어 있다.⁶⁾ 대한민국의 일반적 범죄 가담 연령이 신체적·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이 전제되는 20대에서 3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인구 구성에서 20대 및 30대의 비중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은 범죄 노출 비중 역시 높을 것이라는 연역적 추론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평균 70% 이상을 웃도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이후 여성이 생계주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취업 및 혼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탈북을 결심한 결과로 추측된다.

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 편람』(서울: 통일부, 2012).

6)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표 1〉 북한이탈주민 현황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3월 (잠정)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4	51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241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6	292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6%	78%	83%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592	1,508	2,236	1,924	1,171	441	308	8,180
여	593	1,789	5,410	6,143	3,275	990	870	19,070
합계(명)	1,185	3,297	7,646	8,067	4,446	1,431	1,178	27,250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부양	봉사분야	예술체육	전문직	비대상 (아동 등)	기타	계
남	341	622	3,541	2,988	69	72	198	301	48	8,180
여	107	95	6,891	10,027	997	164	420	271	98	19,070
합계(명)	448	717	10,432	13,015	1,066	236	618	572	146	27,250

출처: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 사망, 말소,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제외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경력단절 및 고용불안으로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겪으면서 다양한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20대에서 50대 탈북 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여성 8명 중 1명은 국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 및 유흥업소 종사에 대한 비율은 각각 4.3%와 11.4%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권유를 받은 비율 역시 30%라는 낮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유흥업소 성매매피해 인구가 약 2%인 것과 비교하여 성매매 종사경험은 두 배, 유흥업소 종사경험은 약 다섯 배

가량 높은 수치로, 탈북여성의 성 관련 범죄노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⁷⁾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 당시 직업 유형 역시 고려될 만하다. 2012년 10월 입국자 기준으로 그들의 재북 직업 유형은 무직부양(48%)과 노동자(3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⁸⁾ 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고자 탈북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직업지위를 누리던 북한이탈주민 역시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직업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북한이탈주민의 비중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북한의 직업지위가 한국사회에서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마땅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위협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생계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로 소득은 104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51~100만 원 이하의 비중이 34.5%에 달했다.⁹⁾ 이는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된 결과라고는 하나, <표 2>에 따르면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므로, 여전히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생계를 이유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돈과 관련한 범죄에 쉽게 현혹되어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7) 김재엽 · 김희진,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서울: 여성가족부, 2012).

8)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9)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표 2〉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인구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율(%)	실업률(%)
전체(명)	396	190	171	19	206	48	43.1	10
수도권(명)	263	116	104	12	147	44.1	39.5	10.3
지방(명)	133	74	67	7	59	55.6	50.4	9.5
일반국민 (천 명)	40,803	24,538	23,684	853	16,265	60.1	58	3.5

출처: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2. 북한이탈주민 범죄 관련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그에 동반되는 문제들은 범죄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경찰청 부설 치안연구소는 1998년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중 20%에 해당하는 1,687명이 범죄 경력자로 집계되었다.

〈표 3〉에 따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 8885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899명이 각종 형사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비율은 한국사회 전체 평균 범죄율인 4.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6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절도 64건, 상해 58건, 문서 위·변조 46건, 사기 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⁰⁾ 이는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경제적

¹⁰⁾ 이 통계수치에 대해 경찰청과 통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범죄 발생률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수치를 합산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범죄율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른 형사범죄 가운데 11% 정도를 차지하며, 그 시작은 단순 사기행각이었으나, 점차 전문화·조직화 되어가며 보조금, 또는 보험금을 이용하는 집단적 사기행태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사기 혹은 폭력과 같은 범죄 외에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약물 관련 범죄율이다. 그들은 자체적인 연결망을 통해 마약 거래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의 마약 공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개 중국을 통하는 탈북 과정에서 마약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¹¹⁾

〈표 3〉 북한이탈주민 범죄현황

계	형법범									특별법범	
	소계	살인	강간	상해	폭력	절도	사기	문서위조 변조	기타	교통 사범	기타
1,687	899	5	12	58	603	64	36	46	75	603	185

출처: 경찰청 보안국, “북한이탈주민 범죄 및 피해예방 대책,” 2007년 2월.

나아가 2009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죄자들 1인당 평균 재범 전과 건수는 0.3건에서 0.7건을 나타내고 있다.¹²⁾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재범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재범 비율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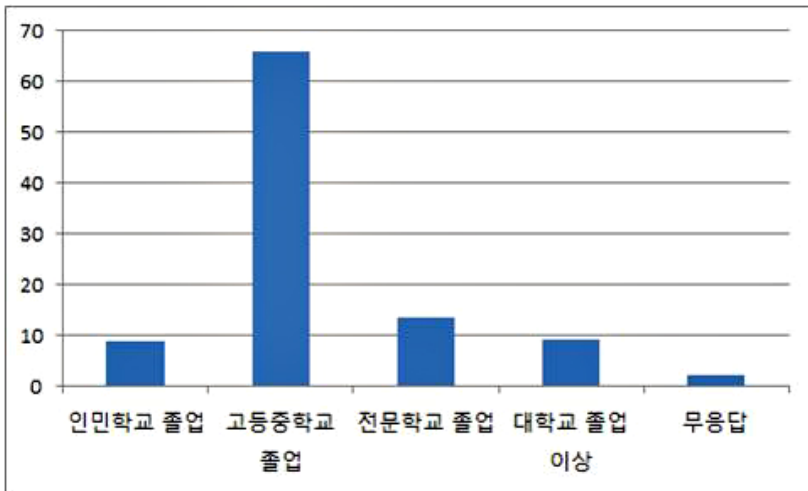
11) 장준오·고성호, 『북한이탈주민 범죄 실태 및 대책』(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2) 우리나라 전체 범죄자 중 동종·이종 전과를 구분하지 않고 살인은 평균 0.5건, 폭력 0.4건, 상해 0.7건, 절도 0.46건의 재범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범죄 가담과 동시에 범죄 피해율 역시 심각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율은 23.4%에 달한다. 피해율 역시 국내 평균치보다 5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이 범죄 피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간의 범죄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연결망 내부에서도 그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의 일반 국민 및 같은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과 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이 모두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내재적 특성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재북 학력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2011).

본 연구에서는 주로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문제를 이론을 통해 구조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문제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내재적 특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상당수는 당 간부 등 고위층보다는 주로 함경도를 비롯한 국경지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프에 따르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70% 이상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 졸업생이었고 앞서 <표 1>이 보여주었듯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주된 직업유형은 무직부양(48%)과 노동자(3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탈북 동기를 통해서도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012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밝힌 탈북동기(복수답변)는 ‘식량부족과 경제난’이 52.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자유를 찾아서(32%)’, ‘북한체제가 싫어서(23.6%)’,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19.0%)’, ‘가족을 따라서(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¹³⁾

위의 두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바는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남한사회에서 상대적인 저학력으로 특별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며 탈북 과정 역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부적응 문제를 겪는 것은 물론 문화적 차이나 제도, 사회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바도 크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사회에서 적응력이 낮았던 ‘일탈자’적 특성 때문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추가

¹³⁾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pp.82-83.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표 4〉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종사상 지위

구분		사례수(명)	2011년 북한이탈주민(%)	일반국민(%)
임금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1563	45.4	42.3
	임시직 근로자	524	15.2	21.3
	일용직 근로자	1107	32.2	7.6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고용원 없음)	176	5.2	17.2
	고용주(고용원 있음)	43	1.2	6.3
	무급가족 종사자	27	0.8	5.3
모름/무응답		98		
계		3538	100	100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2011).

위의 자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직업 종사상의 지위를 나타낸 표이다. 일반 국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4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구조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비중, 근속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2011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19,386명 가운데 46.7%인 9,045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 취업자의 경우에도 직장 적응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는 평균 근속 기간이 15.8개월로 남한 상용근로자의 74.4개월(6.2년)의 20% 정도 수준에 그쳐 매우 짧았다.¹⁴⁾

게다가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당수가 국내 입국 전 다양한 경로로 범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탈북 당시 각종 범죄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었던 경험과,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 속에서 겪은 범죄 역시

14) “국감심윤조 ‘탈북자 절반 기초생활수급자,’” 『뉴시스』, 2012년 10월 8일.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 대대적 손질,” 『서울경제신문』, 2012년 6월 20일.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높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200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 6월 말까지의 기간 중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4080명 가운데 10.7%인 436명이 북한과 중국 등 국내 입국 전 제3국 체류 시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¹⁵⁾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들의 미약한 사회적응력은 범죄문제를 심화시키는 내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북한이탈주민과 최근 국내 경제가 발전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들을 구별하는 요소가 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경험하는 범죄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불가항력적인 환경적 요인에 영향 받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범죄에 노출된 채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과, 흔히 북한이탈주민 범죄 문제를 다룰 때 함께 이야기되는 이주노동자 문제는 그 대안 제시에 관해서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Ⅲ. 선행연구

본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 연구를 크게 현황연구와 정착지원 연구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현황연구는 경제적 지표 혹은 삶의 질 지표와 같이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착지원 연구는 정책지원이라는 제도적 측면이라는 접근과 적응지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 내부 측면에 대한 접근으로 나뉜다. 다시 말해, 정책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경제

¹⁵⁾ 범죄유형은 살인 10명, 인신매매 23명, 강간 및 강절도 151명, 마약 밀매 및 복용 10명, 폭력 98명, 공금횡령 21명 등이다.

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적용지원 역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서 고립되고 정신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밝혀 그들의 수월한 정착을 돕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북한이탈주민 수요 증가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연구가 여러 기관에서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를 포함한 북한관련 기관을 비롯하여 사회학회 및 심리학회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연구가 제공되기도 한다. 그러한 연구 중에서도 특히 비중이 높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및 정책 연구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의 대전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수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들에 대한 전략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주를 이룬다.

조동운·김용태(2011)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논저는 하나원을 통한 사회적응 교육, 정착비와 주거지원비 및 취업지원, 취득장려금과 사회보장지원과 신변보호를 아우르는 현행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행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과제로 가치관과 문화적 이질성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및 심리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김연희·전우택·조영아(2010)에서는 2007년 입국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우울과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같은 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 우울 및 불안 유병률이 약 48%에 이른다는 점을 밝히며, 북한이

탈주민이 일반 국민보다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요인은 주로 가족의 상실과 같은 관계 상실 요인과 더불어 실제 폭력, 생명의 위협, 인신매매 등의 범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및 문화적 고립 등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사실이 있으나 조영아·전우택·유정자·엄진섭(2005) 등을 통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입증되었고 이후 더욱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져 왔다. 이에 덧붙여 그들의 사회 적응도 하락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심리적 측면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과 우울 및 외로움 등의 문제에서 경제적인 지표는 중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김연희·전우택·조영아(2010)는 응답자가 본인의 초기 근로능력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정신건강에 부(負)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당시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 적응도가 떨어지게 되고 적응도가 떨어지면 스트레스 증가 등의 요인과 더불어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 볼 점은 현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그들의 원활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정착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고찰은 비교적 적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한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범죄에 대한 노출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머물게 될 경우 범죄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 이질성을 극복하

지 못할 경우 한국 사회의 법제도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범죄피해의 대상이 되기 쉽고 반대로 범죄 노출로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범죄 가해 및 피해 경험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대상이 아닌 다른 범죄 연구에서도 그러하듯이 범죄 가해에 대한 자료는 경찰청과 같은 기관이 아닌 이상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수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가해를 저지른 원인도 매우 다양해,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숨기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어 언론보도 등 표면적인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즉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원자료 수집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자의 범죄에 대해 밝히는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경험적 연구보다는 문헌 연구를 이용한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한계가 생긴다.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실증 연구는 장준오·이정환(2006)이 시발점이 되었다. 이 논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범죄피해 의식 및 실제 경험 등을 조사하고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는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인구집단으로 사회의 적응과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이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보탬이 되는 자료의 축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장준오·고성호(2010)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범죄 가해자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연구에서는 2010년

6월 22일자로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모든 북한이탈주민 재소자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재소자에 대한 기록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재소자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문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당시 표본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범죄연구와 구별된 새로운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 연구는 당시 이 논문이 유일했으며 이전까지는 북한이탈주민 표본 몇 명을 선정하여 면담조사를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시도된 이후 경찰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한 김윤영(2007)의 연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연구자가 본인이 필요한 자료의 형태를 구성하지 못하고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만을 활용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에는 1차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터넷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윤홍희(2010)의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 연구가 있다. 윤홍희는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태를 밝히고자 하였다. 마약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사회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면담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고, 면담조사가 가능할지라도 대체로 눈덩이표집을 활용한 방식에 의존하게 되기 쉬우므로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 자료를 이용한 연구방법은 일정부분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자료 자체의 근본적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범죄관련 연구는 누적된 실증자료의 부족과 면접방법 및 기존 언론보도 자료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연구 역시 북한이탈주민이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외부, 내부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방법론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또 다른 연구 경향이 주목되는데, 그것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에서도 여성 관련 범죄의 연구 비중이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재엽 외(2012)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한 다양한 범죄 피해 경험을 다루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 4월에서 6월까지 두 달여간의 기간을 두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도출될 수 있는 오류를 심층면접이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비교적 높다. 이처럼 최근에는 설문자료를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국한된 자료이므로, 북한이탈주민 전체로 확대한 연구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범죄 연구의 경향은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피해상황과 원인을 밝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재고해야 한다는 논지의 연구는 많이 있으나 범죄와 관련해서 전개한 연구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조동운·서기주(2012)와 이창무·김주찬·한상철·신현주(2010) 등 최근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로 김윤영(2009)을 비롯하여 신변보호와 관련된 보안(경찰)기관의 대응방안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문들이 여러 편 등재되어 있다.

이들 논저의 전반적인 흐름은 기존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마저도 북한이탈주민 범죄를 주로 다루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인권과 정착에 비중을 두고 있다. 고성호(2005)와 장준오·이정환(2006), 장준오·고성호(2010) 등이 북한이탈주민 범죄 전반을 다루려고 시도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전체 수에 비하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실제로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될 위험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범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범죄는 실제로 사회적인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진단은 미흡하다.

IV. 이론과 현황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해마다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비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탈북을 하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이 탈북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하여 북한 사회에서 누리지 못했던 권리들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분포한 위치는 높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사회유대의 약화와 긴장의 고조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1. 유대이론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은 허쉬(Hirschi Travis)가 주창한 범죄이론이다. 이 이론은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사회에 순응하는 이들에 중점을 둔다. 어떠한 차이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인간상을 만들어내는가가 그의 관심사였다. 그가 설정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질서와의 유대가 깨졌기 때문에 개인은 자유로이 일탈행동을 하는 것이다”¹⁶⁾

허쉬는 애착, 관여, 참여, 신념 등의 사회유대의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면서 이 유대의 정도가 강하다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유대의 정도가 약하다면 더 많은 일탈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네 가지 요소 중 애착은 부모나 학교 그리고 배우자 등 타인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 자신이 애착을 가지는 존재들이 본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걱정해 범죄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강혜영(2009)에서는 남한에 입국한 지 5년 이상 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적 생활양상을 설문조사하였다(〈표 5〉 참조).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을 살펴보면 총 응답자 193명 중 독신이 55명(28.5%)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상당수가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통 오랜 시간 하나의 사회에 정착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독신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유대의 끈을 형성하고 있다. 그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도 관계 맺을 대상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가까워서 유대의 끈을 제공할 가족이 부재하다는 점은 일반 국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큰

¹⁶⁾ Hirschi Travis,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파급 효과를 미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애착이라는 유대 요소가 약화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다시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표 5〉 북한이탈주민 가족구성원

구분	N	%
독신	55	28,5
독신, 배우자	35	18,1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36	18,7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이상	30	15,5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4	2,1
본인, 배우자, 부모	1	0,5
기타	32	16,6
합계	193	100

출처: 강혜영, 『입국 후 5년 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연구』, 2009.

사회유대의 또 다른 요소인 신념은 전통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라는 특수한 법질서 하에서 오랜 기간 사상교육과 정신교육을 받았으므로 대한민국 사회의 준법규범을 내면화하는 것이 비교적 어렵다. 그리고 이는 사회유대의 요소인 '관여(commitment)'와도 연결된다. 관여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관행에 대한 개인의 투자 및 순응 정도를 통해 얼마나 당사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뜻한다. 즉 사회적 관습의 내면화와 그것을 통해 기대하는 이해관계의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사회와는 전혀 다른 남한사회에서 관여를 통한 투자를 모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표 5〉와 같이 독신으로 생활하는 비중이 높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적법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비합법적 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줄인다. 전통적인 활동이나 규범적 생활 등이 적법한 활동에 해당된다.

북한이탈주민 적응 실태 연구를 참조한 <표 6>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여가활동의 약 70% 이상이 독서, TV시청, 컴퓨터 등 실내에서 혼자 하는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친구를 만난다는 응답은 사실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므로, 그 외의 북한이탈주민은 혼자서 여가활동을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윤인진(2007)에 따르면 2005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실태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을 조사한 결과, 가장 자주 하는 여가활동은 역시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시청과 같은 대중매체 이용으로 소극적 소일거리형 여가활동이었다. 반면 취미 및 그 외 여가 활동,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 활동, 학습 활동 등 적극적 자기개발형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은 5% 미만이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여가가 혼자 하는 활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삶의 질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의 활동에서 유대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6> 북한이탈주민 여가활동

	빈도	유효퍼센트
독서	106	16.8
TV시청	287	45.5
컴퓨터	118	18.7
영화	5	0.8
친구만남	58	9.2
기타	48	7.6
여행	9	1.4
합계	631	100

출처: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 실태연구』, 2003.

사회유대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사회에 입국한 후 새롭게 적응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낯선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선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은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이다. <표 7>에서 보듯,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조사 설문자료에서 단체 활동 참여 여부 문항을 빈도분석 한 결과 반수에 가까운 43.9%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활동이 전무하다고 밝혔고 또한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남한 사람 종교단체에 참여한 경우가 36.2%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북한 출신 친구 모임은 14.8%로 사적인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간의 교류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표에서 북한 출신 관련 모임 참여율을 합치면 53%로 남한 사람 관련 모임의 46.9%보다 높지만 북한 출신 친구 모임 이외에 종교 모임이나 사회단체 모임은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수한 친목 모임보다 사회유대형성 기능이 떨어진다. 본 자료를 통해서 모임의 반복참여 횟수, 마지막으로 참여한 날짜 혹은 참여의 만족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으나, 근본적으로 남한 주민보다 사회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의 참여율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유대형성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간의 집단 교류도 비교적 적다는 사실을 보면 그들이 사회에서 고립될 우려도 있다.

유대이론에 따르면 아직 남한의 사회관습을 내면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적응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도기에 그들은 그들과 비슷한 문화적 배경과 정서를 지닌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우선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표 6>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유대가 오히려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여겨져 온 남한 사람과의 활동보다 빈도수가 더 낮고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북한이탈주민 단체 활동 참여

정기적인 단체 참여 여부	빈도	퍼센트
있다	120	56.1
없다	94	43.9
합계	214	100
참여단체	빈도	퍼센트
북한출신자 사회단체	37	24.8
북한출신 친구모임	22	14.8
북한사람 종교단체	20	13.4
남한사람 종교단체	54	36.2
남한사람 사회단체	16	10.7
합계	149	100

출처: 장준오·이정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연구』, 2006.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간 교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탈주민들의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유지된다면 그들이 참여하고 애착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동시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새롭게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보의 교환과 유대를 통한 심리적 안정은 남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범죄 유혹이나 가능성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2. 긴장이론

#1. 2003년 겨울 탈북한 A(42·여)씨는 이듬해 7월 남한에 입국했다. 그러나 남한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정부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북한과 달리 치열하게 경쟁해야 돈을 벌 수 있었다. 정착 이후 3년간 생활보호자 신세를 면치 못한 A씨의 선택은 놀랍게도 ‘마약 밀매’였다. A씨는 중국을 통해

북한계 필로폰 1억 6,000만 원 어치를 들여오려다가 적발돼 구속됐다.¹⁷⁾

#2. 북한이탈주민 B(32·여)씨. 지난해 1월 전문 브로커의 도움으로 입국했다. 정부 정착금이 나오면 거액의 사례비를 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정착 교육을 받고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B씨 수중에는 단 한 푼도 남지 않았다. 브로커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B씨는 다른 탈북 여성 3명과 함께 강원 춘천의 유흥업소에 취직,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¹⁸⁾

긴장이론(Strain theory)은 성공에 대한 기대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수반되는 스트레스나 좌절 또는 긴장 등이 규범 위반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이다. 긴장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앞서 제시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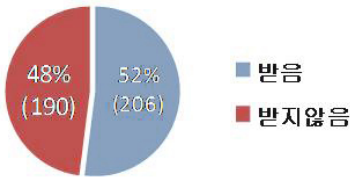
특히 머튼(Robert Merton)은 긴장이론 중에서도 열망과 기대 간의 격차에 주목한 이론을 제시했다. 모든 사회 안에는 승인된 가치와 목표가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허용된 규범과 제도화된 수단은 제한된다. 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표 8〉을 보면(2010) 북한이탈주민 396명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생계비를 수급 받는 경우가 52%로 절반을 넘는다.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 위치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9〉를 보면, 그들은 기초생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취업해서 받는 급여보다 생계비를 받으며 임시직으로 일하는 것이 편하고 전체 수입이 많기 때문(20%)이라고 하였다. 이는 가족에 환자나 학생이 있어서(40%)라는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17) “탈북자 5명 중 1명, 범죄수령에 빠졌다,” 『한국일보』, 2008년 7월 29일.

18) 위의 글.

〈표 8〉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생계비
수급 여부



〈표 9〉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구분	N	%
취업해 받는 급여보다 생계비 받으며 임시직로 일하는 것이 편하고 전체 수입이 많으므로	30	20
취업을 하여 생계비를 못 받으면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7	4.7
생계비를 오래 받는 것이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풍토 때문에	3	2
취업한 곳에서 퇴사하게 되면 살 길이 걱정되어서	28	18.7
가족에 환자나 학생이 있어서	60	40
기타	22	14.7
합계	150	100

출처: 〈표 8〉 강혜영, 『입국 후 5년 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연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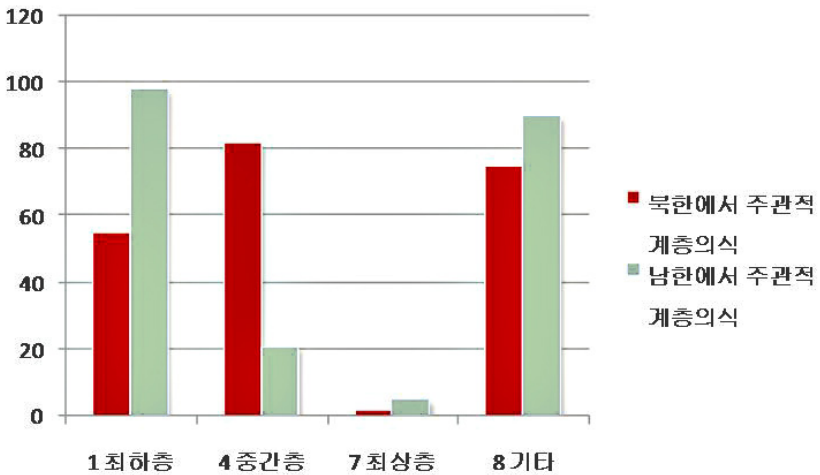
〈표 9〉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2011.

〈표 10〉과 〈표 11〉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탈북이유를 빈도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가난 및 돈 벌기 등 경제적 원인으로 탈북을 결심한 비율은 약 55%로 절반 이상이다.¹⁹⁾ 그러나 북한과 남한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오히려 남한에서 자신을 최하층으로 인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최상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을 제외하면, 북한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탈북으로 얻고자 하는 경제적 안정이 충족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지속되어 긍정적인 자극이 사라지면 개인

¹⁹⁾ 물론 본 자료는 2006년 자료이므로 현재 상황과는 달랐을 가능성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소외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들이 여전히 경제적 원인을 이유로 탈북을 감행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더 나아가 사회의 긴장을 증대시켜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표 10〉 탈북 이후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



〈표 11〉 탈북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 가난	81	37.9	37.9	37.9
2 돈벌기	36	16.8	16.8	54.7
3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	20	9.3	9.3	64
4 직장문제	4	1.9	1.9	65.9
5 정치적 박해(사상적 문제)	41	19.2	19.2	85
6 가족문제	6	2.8	2.8	87.9
7 가족 따라서 그냥 왔음	20	9.3	9.3	97.2
8 기타	6	2.8	2.8	100
합계	214	100	100	

출처: 장준오 · 이정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 실태 연구』, 2006.

사회유대이론과 긴장이론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처지와 범죄의 관계를 조망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단의 부재, 차별 문제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범죄학 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범죄 가능성에 영향을 높게 미친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 언제 북한이탈주민의 급격한 유입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들이 초래할 인구 구성학적 변동 과정은 또 다른 화두를 제기한다. 다가올 사회 변화 속에서 이들이 차지하게 될 위치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범죄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우할 것인지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별과 편견이 야기하는 폐해를 사회적 맥락의 틀 안에서 다루보겠다.

3. 낙인이론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개인을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응해서 변화하는 존재로 상정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탄넨바움(Tannenbaum, 1973)에 따르면, 행위는 본래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사회적 맥락 안에서 모든 행위들이 다르게 판단된다고 한다.²⁰⁾ 때문에 낙인이론은 처벌이 오히려 일탈행동을

²⁰⁾ Frank Tannenbaum, "The dramatization of evil," E. Rubington and Martin S. Weinberg, eds., *Deviance: The Interactionist Perspective* (London: Macmillan, 1973).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본다. 타인들에 의해 범죄자로 인지된 개인은 그 자신 또한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탈행동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베커(Becker, 1963)가 지적했듯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은 국외자로 규정되기 쉬우며 일탈 집단으로 오인 받는 경향이 있다.²¹⁾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낙인이론은 처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이들이 사회적 집단이 정의하는 규칙에 의해 낙인이 찍히는 현상을 지적한다. 낙인이론이 나아가 경계하는 것은 이렇게 낙인이 찍힌 이들이 낙인찍힌 바대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한다는 점이다.

레머트(Lemert, 1951)는 “어떤 사람이 행동의 결과인 사회적 반응 때문에 발생한 드러나거나 숨겨진 문제에 관해 방어, 공격 혹은 적응의 수단으로 일탈 행동이나 그 역할을 시작할 때, 그 일탈은 이차적이다”²²⁾라고 기술하였다. 다시 말해 낙인이 찍힌 이들은 이차적 일탈의 과정을 통해 일탈 행동을 강화하므로, 이 구조 안에서는 이들이 일탈자라는 낙인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표 12〉를 보면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국민이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낙인이론을 접목하여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범죄의 실행 유무를 떠나 일탈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쉬우며, 이들에게 낙인이 찍힌 후에는 스스로가 정체성을 그

²¹⁾ Howard S. Becker,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The Free Press, 1963).

²²⁾ Edwin M. Lemert, *Social pathology: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theory of sociopathic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1951).

방향대로 형성해 이탈자라는 분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표 12〉 일반 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응답률	2007	2008	2009	2010	2011
친근함	36	36.2	36.3	42.5	40.9
친근하지 않음	63.8	63.8	63.3	57.5	58.9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의식조사』, 2012.

사회심리학자 쿨리(Cooley, 1902)에 따르면 사회의 구성원은 자신의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아닌 이질적인 집단에 대해 배타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²³⁾ 같은 이해관계와 동질성을 공유하는 집단 간에는 강력한 유대가 발현될 수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반발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를 겪으며 한 사회 내에서 이질적인 다른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규범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질서와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즉, 사회적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새로운 소수집단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면, 그들을 차별함으로써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나타날 변화를 잘 수용하는 새로운 사회규범과 적절한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에 회의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긍정적 인식 제고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²³⁾ Charles Horton Cooley,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2)

고 이러한 규범과 인식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공동체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새로운 인식 체계가 필요해졌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조화롭게 융합되지 못하고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리되어 여겨지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는 좁혀지기 힘든 거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주류 공동체인 한국 국민과 소수 공동체인 북한이탈주민을 결정적으로 분리하는 기제는 차별에 있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북한이라는 배경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을 본인보다 낮은 위치의 집단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이므로, 차별기제는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된 이미지로 인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가해진다면 그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차별이 범죄와 연결되는 이유는 차별이 차별을 가하는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별을 가하는 주체는 주변에서 비롯된 학습 등의 요인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게 그들이 차별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력히 부여하게 된다. 또한 차별을 받는 주체는 본인을 차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주체에 대해서 강한 반발심과 억울함 등의 감정을 품을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두 공동체 간에 갈등을 일으킬 긴장이 증폭된다는 뜻이다. 이는 더 나아가 두 집단 간에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배경이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집단 크기가 일반 국민에 비해서 작다는 사실 자체도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처럼 동일한 사회문화적 성장배경을 공유하는 소규모 집단의 경우에는 그들의 내부 결속력이 강해질 수 있다.

이것은 범죄의 가해 및 피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해의 경우에는 소수의 집단일수록 집단 내에서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빠르

고 단체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단체 보험사기 사건²⁴⁾을 살펴보면 그들이 한국 사회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고 기댈 곳이 북한이탈주민 상호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릇된 정보와 판단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내부 결속력이 증가하면 자신과 다른 속성을 띠는 집단에 대해서 배타적 성향도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역시 한국 사회를, 자신을 보호해주는 새로운 삶의 터전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차별·배척하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리는 긴장을 더욱 고착화하고 강화한다. 피해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정보에 어두운 소수집단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내부의 연결망 규모는 작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가족 내부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들을 주변 인물이 거의 없는 북한이탈주민은 그만큼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4. 이주이론/경제적 불평등이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범죄에 노출되는 근본적 배경에는 경제적 원인이 있다. 따라서 범죄와 직결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내

24) “생계 막막해서...’ 새터민 집단 보험사기,” 『부산일보』, 2012년 8월 23일.

적, 외적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 대표적으로 남한 노동 시장으로 유입되어 적응하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이주이론/경제적 불평등이론(Immigration/Economic inequality theory)을 통해 살펴보자.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 입국 동기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물질적으로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경제적 이유나 정치적 확대를 피해 피신한 정치적 망명의 성격, 혹은 자녀에게 보다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사회적 이유 등이 있다.²⁵⁾ 그러나 근본적인 탈북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정치적, 사상적 자유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상적 자유만으로는 만족을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며 결국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준오·이정환(2006)에서 실시된 설문 가운데 탈북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가난’, ‘돈벌기’, ‘직장문제’ 등 경제적 원인과 관련된 답변을 한 사람은 전체 214명 가운데 121명으로 약 57%였다.²⁶⁾ 탈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이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치면 북한이탈주민은 일종의 아노미(anomie)를 겪을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매우 힘들다는 것이며, 여전히 수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적 성취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늠할 수 있다.

장준오·고성호(2010)는 이와 같은 논지의 배경을 국제이주의 경제적

25) 장준오·고성호, 『북한이탈주민 범죄 실태 및 대책』.

26) 장준오·이정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 실태 연구』.

적 거시이론을 통해서 찾고 있다. 국제이주는 방출과 유인 요소로 설명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국제이주의 한 형태라고 가정한다면, 경제적 측면의 방출과 유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낮은 삶의 질과 경제난이 방출 요소로 작용하고 북한 내부에서 얻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 및 그에 대한 기대와 동경이 유인 요소로 작용한다. 즉 북한에서의 생활과 비교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대가 탈북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²⁷⁾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기대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 북한이탈주민은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노동시장 진입 자체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써 지속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장기적인 삶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을 가졌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1년 이상 장기근속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둔 비율이 61%에 달했다.²⁸⁾ 즉,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외적 요인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차별 문제는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집단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차별은 노동시장 내에서도 존재한다. 밑바탕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한국 국민보다 능력이 뒤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27) 장준오·고성호, 『북한이탈주민 범죄 실태 및 대책』.

28)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이전에 품었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적인 갈등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갈등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통해 스스로가 차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순간 그 갈등의 폭과 깊이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갈등 구조가 반복·재생산되고 고착화된다면, 한국 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두 공동체가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을 배울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앞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국제 이주 이론에 근거하여 특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기대를 가지고 있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안정적 정착에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나는 관계의 측면이다. 경제적인 원인을 이유로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일반 국민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더 제한된다고 판단한다면 일반 한국 국민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커질 수 있다. 게다가 함께 생활해 나가면서 문화, 인식 측면의 갈등마저 깊어진다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 집단적으로 남한 사회에 반발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자체가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생계유지가 불안해지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주목할 점은 돈과 관련된 범죄 수법에 피해를 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다는 것이다. 장준오·이정환(2006)에 따르면, 범죄 피해에 대한 설문문항에서 총 응답자 49명 가운데에 45명의 응답자가 '사기' 피해경험이 있음을 밝혔다.²⁹⁾ 이는 총 조사자 수 214명에 대해서는 20% 정도에 그치지만, 전체 범죄 피해자들의 수를 고려하면 일

²⁹⁾ 장준오·이정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 실태 연구』.

등히 높다. 북한이탈주민이 피해자인 경우 ‘사기’ 범죄는 특히 경제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수집단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나, 가진 돈을 몇 배로 불려준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사기 수법이나 범죄 양상에 대한 교육과 정보가 잘 갖추어진 일반 사람들에 비하여 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혹은 교육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범죄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노동시장에 첫 진입할 때 저임금의 고용 환경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다. 저임금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가 쉽지 않다. 분절노동시장 가설에 따르면 노동시장을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파악하는데, 노동시장이 분절된 구조이면서 그 구조가 위계적 질서를 띠면 북한이탈주민 집단은 주로 하위 집단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적다면, 그들의 범죄 가해 혹은 피해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 역시 어려워진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기회 불균등 및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일탈하위문화이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 포기율 역시 어두운 미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학교 적응 문제, 특히 학교 중도 탈락 문제이다.³⁰⁾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중도 탈락률은 중학교 9.0%, 고등학교 14.2%에 달하고 있어서 학교중도 탈락

30) 오명도 외,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 뜻하는 단기적,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적응 문제가 우려된다.³¹⁾

학교는 청소년이 가정과 이웃관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이차집단으로, 학습과 학교생활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문화가 전승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독립된 사회인의 역할, 동료 사회구성원 간의 협조 및 연대의식 등을 학습하고 개성을 형성하는 곳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은 장래 사회생활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학습한다. 즉 학교 교육은 형식적인 사회규범과 문화적 요소를 내면화하고 동시에 반사회적인 요소에 대한 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코헨(Albert Cohen, 1955)은 일탈하위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비행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³²⁾ 즉 학교를 지배하는 가치관은 중류층이나 상류층의 가치관이며 학교 교육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목표를 성취할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하류층 청소년들에게는 지위 좌절이나 분노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이들의 미래 욕구나 충동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반발 대상이 될 뿐이며, 결국 자신들의 가치관을 인정해 주는 하위문화는 학교 밖에서 형성된다.

나아가 학교에서 동료들이나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청소년은 이들에 의한 낙인 때문에 비행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 낙인은 주로 학교 성적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학교 성적을 중요시하고 이를 학생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풍토에서는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주류가 되는 자신들만의 문화, 즉 하위문화를 형성하는데 더욱 골몰하게 된다. 결국 무단결석이나 등교 거부 등의 비행적 행

31) 위의 글.

32) Albert K. Cohen,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Glencoe, Illinois: Free Press, 1955).

동양식으로 변화한다.³³⁾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이다.

6. 소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안정적인 정착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고찰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와 이에 대한 대응은 현상에 불과할 뿐 정작 어떠한 이유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이론적인 고찰이 부족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논문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북한이탈주민 연구 자료를 종합해 실태와 현황을 진단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범죄학 이론에 비추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가해 가능성과 취약성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13>와 같다.

33) 김준호·노성호,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표 13〉 범죄학 이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발생 원인

이론적 틀	관련 내용
사회유대이론	애착, 관여, 신념 등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현실태를 분석하면, 그들은 유대를 형성하기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음.
긴장이론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품고 있었던 기대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노미적 갈등이 유발됨.
낙인이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낙인이 일탈을 조장할 수 있음.
이주이론/경제적 불평등이론	노동시장 진입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과 진입 이후에 발생하는 불평등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일탈하위문화이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많으며, 그들에게서 비행적 생활양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첫째, 사회유대이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애착, 관여, 신념 등의 요소가 범죄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현실태를 분석하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비중이 매우 높아 가족과 애착을 형성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가치를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신념을 형성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었다. 여가 활동의 형태, 교류의 형태 역시 혼자 보내는 방식의 비율이 높았고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유대 정도가 약하며 이들의 범죄 가능성을 억제할 만한 요소도 부족하다.

둘째, 긴장이론은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품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는 한국 사회에서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주관적 계층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있을 때보다 남한에 와서 사회적 위치가 하락했다고 인식한 이들이 많아 상대적인 박탈감 역시 증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목

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괴리에서 비롯된 아노미적 상황에 이르면 따라야 할 도덕적인 잣대가 부재하게 된다.

셋째, 낙인이론은 낙인 자체에서 빚어지는 문제와 더불어 이로 인해 형성되는 자아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과 낙인을 갖고 있는 이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들의 실증적 자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을 사회화의 고충을 가늠하게 한다. 이러한 차별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재정의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남게 해 일탈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이주이론/경제적 불평등이론은 경제학 이론 중 하나로서 노동시장 진입과 진입 이후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노동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자체가 범죄를 빚어 낼 수 있다. 또한 진입 이후에 발생하는 불평등과 갈등도 또 다른 범죄를 초래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탈하위문화이론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하위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일탈행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학교 중도 탈락률은 중학교 9.0%, 고등학교 14.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일탈하위문화이론이 지적한 바, 주류 문화에 섞이지 못하고 그들만의 비행적 생활양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V. 결론

북한 정부의 강력한 국경 통제로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어 가는 하였지만, 여전히 매 년 수천 명 단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에서도 통일 의지를 일관되게 내비쳐 온 만큼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을 다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를테면 범죄와 같은 사안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 유대 관계의 부재 등은 모두 그들의 범죄 노출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워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범죄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이러한 특성과 그들이 겪는 제반 문제들이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기존의 범죄학이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 가능성과 취약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먼저,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을 통해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의 사회유대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로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들이 사회적으로 유대를 형성하기 취약한 구조에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그 다음, 머튼의 긴장이론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 당시 품었던 기대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아노미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베커와 레머트의 낙인이론을 통해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낙인이 일탈을 조장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주/경제적 불평등 이론을 통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과정과 진입 이후의 경제적 불평등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코헨의 일탈하위이론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제도권 교육에서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음을 근거로 하여,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논문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북한이탈주민 연구 자료를 종합해 실태와 현황을 진단했다. 또한 이를 기존범죄학 이론에 비추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가해 가능성과 취약성을 살펴보았다. 물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까지 다다르지 못한 점은 본 논문의 한계이다. 이는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래의 통일 한반도 시대에 해결해야 할 사회통합 문제를 생각하면,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범죄 연구가 향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접수: 2015년 3월 22일 / 심사 : 2015년 5월 12일 / 게재확정: 2015년 5월 13일

【참고문헌】

국문단행본

- 강혜영. 『입국 후 5년 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연구』. 서울: 통일부, 2009.
- 김윤영.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기관의 대응책』.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9.
-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7.
- 김재엽 · 김희진.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2012.
- 김준호 · 노성호.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 오명도 · 박순용 · 양희창 · 박형동 · 조명숙 · 채혜성 · 김신동.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8.
- 이금순 · 강신창 · 김병로 · 김수암 · 안혜영 · 오승렬 · 윤여상 · 이우영 · 임순희 · 최의철. 『북한이탈주민 적응 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이창무 · 김주찬 · 한상철 · 신현주.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 방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 장준오 · 고성호.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장준오 · 이정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국문논문

- 고성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와 이탈.” 정영철 · 고성호 · 최봉대.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
- 김연희 · 전우택 · 조영아.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문제 유병율과 영향요인: 2007년

- 입국자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2010). pp.141~174.
- 설동훈.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새로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사람』 제34호(2009). pp.53~77.
-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착지원 방안.” 『아세아연구』 제50권 2호(2007). pp.106~143.
- 윤홍희.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실태와 대책.” 『마약이 아닌 건강을 생각하세요』. 마약퇴치운동본부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2010년 6월 24일). pp.75~119.
- 조동운·서기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제9권(2012). pp.71~92.
- 조동운·김용태.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신성장 산업발전과 문화거버넌스』. 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2011년 6월 17~18일). pp.447~467.
- 조영아·전우택·유정자·엄진섭.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2호(2005). pp.467~484.

영문 단행본 및 논문

- Becker, Howard Saul.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The Free Press, 1963.
- Cohen, Albert Kircidel.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Glencoe, Illinois: Free Press, 1955.
- Cooley, Charles Horton.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2.
- Lemert, Edwin McCarthy. *Social pathology: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theory of sociopathic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1951.
- Tannenbaum, Frank. “The dramatization of evil.” Earl Rubington and Martin S. Weinberg. eds. *Deviance: The Interactionist Perspective*. London: Macmillan, 1973.
- Travis, Hirschi.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신문 및 정기간행물

- 한관수. “북한 위기상황시 난민 규모 & 탈출경로 시뮬레이션.” 『신동아』 4월호(2010).

“[국감]심윤조 ‘탈북자 절반 기초생활수급자.’” 『뉴시스』. 2012년 10월 8일.
“‘생계 막막해서...’ 새터민 집단 보험사기.” 『부산일보』. 2012년 8월 23일.
“탈북자 5명 중 1명, 범죄수렁에 빠졌다.” 『한국일보』. 2008년 7월 29일.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 대대적 손질.” 『서울경제신문』. 2012년 6월 20일.

기타

경찰청 보안국. “북한이탈주민 범죄 및 피해예방 대책.” 2007년 2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 편람』. 서울: 통일부, 2012.

The Theoretical Review on Cause and Real Condition of crimes by North Korean Defectors

Kim, Seong-Hoon · Choi, Jae-Yong · Lee, Youn-Ho (Dongguk University)

Abstract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ntering to South Korea has progressively increased,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ir maladjustment have also been growing. Especially, relatively higher crime rate of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swiftly controlled, but meaningful studies on this area are not yet fully proceeded. Although the purpose of previous studies was to promote North Korean defectors' stable settlement, there have been only few studies with the approach on the potential problems from situations in which their stable settlement cannot be accomplished. Therefore, in this study prior to preparing practical countermeasure I diagnosis North Korean defectors' real condition by synthesizing pervious studies under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cause of their crimes. Through on this process, I apply several criminal theories such as social bonding theory, strain theory, labeling theory, immigration/economic inequality theory, delinquent subculture theory as an analytic framework, and try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Crime Rate, Criminological Theory, Victimization, Saeteomin

김성훈(Kim, Seong-Hoon) _____

동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북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과정
정에 재학 중이다.

최재용(Choi, Jae-Yong) _____

동국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
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청소년 지위비행 원인의 성별비교: 일반범죄이론들을
중심으로”(공저), “미디어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Mean-World View와 공명가
설을 중심으로”(공저) 등이 있다.

이윤호(Lee, Youn-Ho) _____

Michigan State University 에서 범죄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동국대학교 교수 및 사회과학
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현대사회와 범죄』, 『범죄, 그 진실과
오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상활동과 범죄피해”(공저) 등이 있다.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북한 정권의 대응*

강동완 · 김현정 (동아대학교)

국문요약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물론 관련 제품들의 유통과 연계되며 북한 사회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내 남한 영상물 유통 및 시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군대 내 불법 외래 영상물 시청 실태를 살펴보고 북한 당국의 검열과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내 남한 영상물 시청과 유통에 대한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및 단속 실태를 북한의 공식 내부 문건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북한 군대에서 외래 영상물을 누가, 어떠한 경로 및 방법을 통해 시청하는지, 이러한 비법행위의 단속을 지시한 김정은의 '비준과업'과 북한 당국이 작성한 '대책 의견'을 토대로 단속과 검열 주체, 방법 등을 살펴본다.

주제어: 외부 정보, 북한 한류, 북한군, 북한 사회 변화, 남한 영상물 시청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내부 정세는 권력 이양을 위한 사상 통제가 엄격히 이루어졌다. 북한 당국은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결속력 및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상 학습을 강도 높게 진행하였다. 주로 김정일 시대부터 특히 강조되었던 “외부사조에 대한 단속과 제국주의 사상문화침투 봉쇄”를 강조하며 김정은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사상 통제에 주력하였다.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던 남한 영상물 및 외부사조 단속을 위해 별도의 단속소가 운영되고, 북한 내 유입 통로인 국경 밀수를 엄격히 차단하는 조치 등이 취해졌다.

그럼에도 북한 내에서 시장화와 연계된 조직과 뇌물로 인한 뇌주기 현상 등이 만연하면서 남한 영상물 시청과 유통에 대한 단속은 한계가 있었다. 간부부터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북한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복사한 사례도 북한 내부 문건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었다.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물론 관련 제품들의 유통과 연계되며 북한 사회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내 남한 영상물 유통 및 시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북한 내 지역, 계층, 세대, 성별 등으로 구분하여 남한 영상물 시청과 확산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도 하였으며, 인간 행동과 체제 변화라는 거시적 수준까지 확대하여 북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살펴보기도 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더해 북한 군대 내 불법 외래문화 단속 및 검열과 처벌, 나아가 북한 당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내 남한 영상물

시청과 유통을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및 단속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선군정치로 대변되는 북한에서 군인들의 기강 해이는 체제 변화 및 내구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연구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체류 북한 주민 등을 면접조사하거나 북한의 공식 매체인 노동신문을 분석한 것과 달리, 북한 군대에 배포된 공식 문건을 입수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당국의 공식 문건을 통해 북한군 내 자본주의 대중매체의 유입 상황 및 이에 대한 대응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매체를 접하면서 제한적이거나 체제의 이질성,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체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게 요구되며, 행동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주어지는 군대 내 외부 매체의 유입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물론 북한군 내부의 정보 통제와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엄격하고 비판적인 학습과 감시 상황을 고려하면 외부 대중매체의 유입만으로 이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부 매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의 군대 내부까지 유입·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변화이며 북한 체제 유지에 도전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고 김정은 시대 4년차로 접어들면서 체제 내구력 및 변화 여부는 북한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체제 유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북한군의 기강 및 의식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차원이 아닌 조직과 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

한국을 비롯한 외래 문물의 북한 유입 현상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며, 본문에서 분석할 공식 문헌을 해제한다. 3장은 분석 자료를 토대로 북한군 내에서 불법 외래 영상물을 누가, 어떠한 경로 및 방법을 통해 시청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어서 4장에서는 북한 군대 내 만연한 불법 외래 매체에 대해 경계한 김정은의 ‘비준과업’ 지시와 북한 당국이 지시내용을 따르기 위해 작성한 ‘대책 의견’을 토대로 단속 및 검열 주체, 단속과정 등을 분석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공식 문건을 통해서 본 북한군 내 외부 문화 침투 실태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본다.

II.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북한 사회 내 외부 문화 유입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창현(2000)의 ‘탈북자들의 남한 방송 수용과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이주철(2003)의 ‘북한 거주 당시 대북방송(RFA)을 경험한 탈북자들의 방송 수용 특성’에 관한 분석, 이민규·우형진(2004)의 ‘탈북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 따른 남한 사회 현실 인식에 관한 연구’ 그리고 성숙희(2005)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방송 수용’에 관한 저서, 곽정래·박승관(2006)의 ‘새터민의 대중매체 이용과 사회 적응’ 연구와 이창현·우민규(2008)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방송 수용 특성과 미디어 교육의 방향’ 등이 초기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후 이교덕 외(2009)의 연구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문화와 관

련한 소식 및 정보를 접하는 경로에 관한 연구¹⁾ 및 윤인진(2012)의 ‘북한 이주민의 문화 변용과 사회 적응’ 그리고 이미나·오원환(2013)의 ‘북한 및 제3세계에서의 한류 수용 경험과 한국 문화 적응’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 거주 시 외부 문화 접촉 및 수용에 의한 사회 적응 관련 연구로 심화되었다.

북한 사회 내 한국 문화의 유입을 다룬 연구는 강동완·박정란(2010)의 ‘남한 영상 매체의 북한 유통 경로와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되어 미디어 유통의 이해관계자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이르렀다.²⁾ 또한 외부문화 접촉 후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다룬 박정란·강동완(2012)의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像)³⁾’ 그리고 박정란·강동완(2013)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의 논문에서 북한 내부 주민의 의식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해 왔다. 이상의 선행연구물들은 공통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심층면접 연구방법론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일반 북한 주민 대상의 외부 문화 접촉 혹은 나아가 의식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⁴⁾

이외의 북한 내 외부문화 침투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전미영(2014)의 연구에서 미디어 유입에 관한 폭압정치를 통해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 당국도 정책 변화로 압박을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객관적 도구로 검증하는 시도를 했다. 북한 정부가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수호를 위해 공식적

1) 이교덕·임순희·조정아·이기동·이영훈,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9), p.101.

2)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2010), p.107.

3)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像),”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2012), p.239.

4)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 『북한학연구』 제9권 제2호(2013), p.208.

으로 외래문화의 유입을 불허하고 있으나, ‘세계적 추세’를 고려한 당국의 선택적 문화 도입을 통해 괴리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을 분석하였다.⁵⁾

지금까지의 북한 내 한류 현상⁶⁾ 및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 주민의 증언을 통해 주로 일반 주민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북한 내 다양한 계층을 세분화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북한 체제의 핵심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북한 군인을 특정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교덕(2011)의 연구는 북한 군인들의 외래문화 이용 실태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 군대 내 기강 해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일부 북한군인의 외래문화 접촉 실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⁷⁾ 이 연구는 김정일 시대 북한 군대 내 기강 해이를 지시이행 태만, 군수물자 착복, 대민피해, 탈영, 기밀누설, 서구풍조 및 남한 문화 만연 등으로 유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계량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 공식 문건 자료를 통해 북한군 내 남한 대중매체의 유입 상황 및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남한 영상매체를 접한 북한 주민들의 경험 여부 혹은 체제의 이질성,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 수용 여부, 인지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을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가장 엄격하게 외부문화를

5) 전미영, “북한의 외래문화 수용 실태와 문화전략: 북한 텔레비전 방송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2014), p.129.

6) 북한 내 한류 현상에 관한 연구 동향에 대한 세부 논의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부분은 아래 논문을 참조함.

임석준·강동완·김현정, “북한의 한류연구: 동향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10권 제2호(2014).

7)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1).

차단할 것으로 예측되는 북한 군인의 외래문화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특히, 이전 연구가 진행하지 않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군대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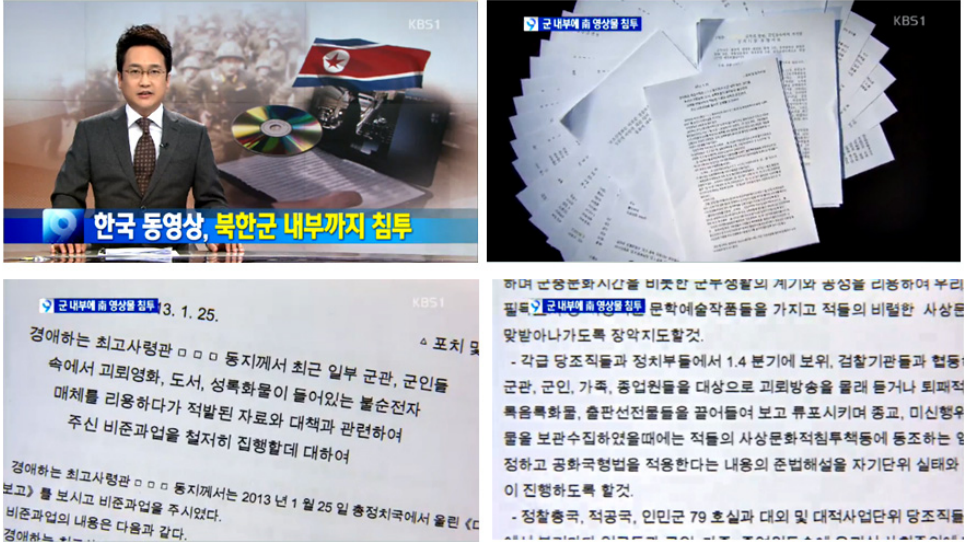
아울러 북한에서 작성된 공식 문건 혹은 언론보도의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측정한 선행 연구 사례가 있었으나, 본 연구는 최근의 북한 군대 내 공식 문건에서 외부 매체 단속 내용, 적발 대상 적시 및 이에 대한 제재와 교시가 자세히 첨부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해당 문건은 외래문화의 차단을 지시한 김정은의 과업지시와 북한 당국이 일선 군대에 하달한 명령서의 내용을 담은 북한의 공식 내부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남한 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한 매체 및 이동, 보관 수단, 매체 종류 등이 직접 확인된다.

2. 연구 방법 : 북한 공식 문건 해제

한국공영방송인 KBS는 지난 2014년 10월 20일 저녁 9시 뉴스를 통해 “북한 군대 내 남한 동영상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북한 군대 내 한국 동영상 시청 실태와 북한 당국이 어떻게 단속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 기사의 출처가 바로 북한 군대에 배포된 내부 문건이었고, 그것을 입수하여 내용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사진 1〉 북한 군대 내 한국 동영상 시청 실태를 보도한 KBS뉴스 화면



북한 연구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의 북한 언론매체나 북한원전을 살펴보는 문헌 분석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면접조사 등으로 이루어진다.⁸⁾ 최근 북·중 국경지대의 경비가 허술해지고 뇌물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내부 문건이 유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북한 내부 문건은 KBS 뉴스에서 보도한 문건과 동일한 것으로, 연구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직접 입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북한 공식 문헌 자료는 2012년 작성된 것 3건과 2013년에 작성된 것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헌의 작성일 및 문건의 종류,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면 〈표 1〉과 같다.

8) 북한 연구의 방법론 및 북한 공간 문헌 분석의 의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류길재, “김일성, 김정일의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49 참조.

〈표 1〉 북한 군대 내 분석 대상 문헌자료 해제

연번	문헌작성일	문건분류	문헌 제목
1	2013.1.25.	포치 및 조직 사업 문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최근 일부 군관, 군인들 속에서 괴뢰영화, 도서, 성록화물이 들어있는 불순전자 매체를 리용하다가 적발된 자료와 대책과 관련하여 주신 비준과업을 철저히 집행할데 대하여
2	2013.1.31.	포치 및 조직 사업 문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색적인 사상문화화 생활풍조의 뿌리를 들추어내기 위한 조직 정치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비준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3	2013.4.3.	포치 및 조직 사업 문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원수님께서 79호 실사업 장악지도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비준과업을 철저히 집행할데 대하여
4	2012.	당강습자료	문용수 제3군단 봉화산 235 군부대 보위부장의 당강습자료
5	2012.11.18	포치 및 조직 사업	경애하는 ○○○동지께서 주체101(2012)년 11월 18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하신 말씀
6	2012.상반기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문건	남조선영화를 비롯한 불순록음 록화물들을 짓밟개 버릴데 대한 당의 방침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공식문건은 ‘포치⁹⁾ 및 조직사업 문건’, ‘당강습자료’,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문건이다. 북한의 ‘학습제강’과 ‘강연자료’는 북한군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에게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일

9) 포치(布置, 鋪置): 무엇을 벌려놓거나 넣어놓는다는 뜻으로 ‘어떤 사업에 앞서 일정한 사람이나 집단 또는 단위들에 분공을 주고, 사업의 목적과 의의, 하여야 할 일의 내용, 그 수행방도 등을 알려주어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짜고드는 것’을 이르는 말.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참조.

종의 ‘정치사상 학습지침서’라 할 수 있다. 본 문건들은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마련한 지침서로서 최고지도자의 지시와 교시 이행은 북한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표 1〉의 연번 1번 문건은 ‘포치 및 조직사업’에 관해 작성한 내용이다. 해당 문건들은 자본주의 외래문화 적발 사례를 적시하며, 이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김정은의 교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준과업’ 내 적발 사례는 적발 대상자, 적발 매체의 세부 종류, 상습성, 불법 행위 기간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진 ‘대책의견’은 적발 대상자에 대한 처분, 검열 체계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등장하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김정은의 교시 사항이 적시되었다.

〈표 1〉의 연번 2번 문건은 이전 보고 사항에 대한 김정은의 지시사항, 즉 비준과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연번 3, 5번 문건은 주로 적발 방법, 대책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적발을 담당한 기관, 단속 및 적발을 위한 방법, 단속의 주요 시기, 단속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표 1〉의 연번 4번 문건은 앞서 문건과 달리 제3군단 봉화산 235 군부대 보위부장 문용수의 당강습자료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해당 개인의 긍정 사항 및 부정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는데, 부정 사항 중 문용수 보위부장이 관리해야 할 대상자(부하)가 남조선 TV 연속극을 시청한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표 1〉의 6번 문건은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문건으로 2010년 12월 17일 김정일의 비준과업에 따른 상세한 적발 사항과 당의 방침집행 정형 총화 및 새로운 개선 대책을 보도 형식으로 구성한 내용이다. 입수한 해당 문건 내에는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명박 정권에 대한 언급, 내용 중 이전 사항에 대해 기술된 날짜, 그리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과도기 호칭으로 미루어 2012년 상반기 문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확산에 따른 북한 당국의 사상 통제는 김정일 정권 때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본 문건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뒤 권력 이양 과정에서 체제 결속과 정권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상 통제 차원에서 특별히 고양된 당교양사업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의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행위자 및 매체 접근 및 이용 방법과 도구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Ⅲ. 북한군인의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현황

1. 누가 주로 시청하는가?

1) 1번 문건(2013년 1월 25일 작성) 내 적발된 자

본 연구 대상인 해당 문건을 통해 먼저 북한 군대 내에서 누가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다 단속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1번 문건 내에서는 제목에서와 같이 일부 군관, 군인들이 남한 영상물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남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단속 기간, 단속 기관, 단속 대상물 및 단속 대상 3인은 다음의 <표-2>와 같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발사례를 보면 인민무력부 지휘부 소속의 군인과 부관 등이며 총참모부 지휘정보국 직속 부대의 군인 등이다.

〈표 2〉 1번 문건(2013년 1월 25일 작성)의 단속사항

단속기간	2012년 1월 12일 ~ 20일
단속기관	인민군 109연합 검열조의 ○○○ 소재 부대, 군분대 검열
단속대상물	괴뢰영화, 도서, 성록화물이 들어있는 불순전자매체 리용자
피적발자	- 인민무력부 직속 제3호 지휘부 A - ...의 부관 B - 총참모부 지휘정보국 직속 제10통신련대 5통신결소속 C

2) 4번 문건(2012년 작성): 문용수 제3군단 봉화산 235 군부대 보위부장의 당 강습자료

해당 문건은 문용수 제3군단 봉화산 235 군부대 보위부장의 당강습자료이다. 우선 해당 자료는 북한군 조직이 부대 내 대상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구조를 엿볼 수 있다. 대상자인 문용수 보위부장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나누어 상세히 기술한 점이 흥미롭다. 문건은 해당자의 조직 내 경력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4.25 문화회관 관리중대 대원 사관장 7년 9개월, 보위대학(보위일군조) 3년 졸업하고 37대대 보위지도원 3년 4개월, 12군단 300군부대 보위부지도원 3년 9개월, 지구사령부 보위부 2부지도원 2년 8개월, 236 군부대 304련대 보위부장 2년 3개월, 군단사령부 보위부 2부지도원 2년 10개월, 군단사령부 보위부 2부장을 하다가 2007년 11월부터 현직에서 사업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문건 내에는 대상자의 성격, 업무 처리 능력 정도, 혁명화 정도, 경제 및 가정생활의 도덕성, 취미, 건강, 음주 및 흡연 정도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대상자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술된 내용 중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관리 대상자(부하)에 대해 미흡하게 대처했던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긍정 내용이 일반적 사항, 대체적인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반면, 부정적 내용은 주로 특정 사례를 일시별로 서

술하였다. 즉 이러한 사례는 적발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부하 군사들에 대한 관리에서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사항이나 군대 내 돌발 사항에 대처가 미흡했던 점 등이 나열되었다. 이 중 부대 내 군관의 한국 미디어 시청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2011년 9월과 10월 316련대 2대대 한 중대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정에서 남조선 TV연속극을 시청하는 현상과 315련대 3대대에서 한 중대장이 사회성원들과 공모하여 마약거래하는 현상을 제때에 장악대처하지 못하였다.

이 문건을 보면 대대급의 중대장이 자신의 가정에서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군부대 보위부장인 문용수가 이를 단속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3) 6번 문건(2012년 작성추정) 내 적발된 자 및 외부 미디어 접근이 의심되는 집단

앞서 본 문건이 남한 영상물 시청과 단속에 대한 개인별 사례를 제시했다면, 6번 문건을 통해서는 군부대 내의 집단 시청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문건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영화를 비롯한 불순록음 록화물들을 짓밟개 버릴데 대한 당의 방침 집행정형 총화에 대하여

해당 자료는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문건이다. 동 문건은 2010년 12월 17일 김정일의 비준과업에 따른 상세한 적발 사항과 당의 방침 집행정형 총화, 개선대책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자료는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당시 보고(혹은 공지)의 기능을 띤 자료로 전반적으로 많

은 수의 적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실명이 기재된 피적발자로는 검열에 소홀하여 적발된 2인과 직접 외래문화를 접한 11인의 인적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표 3〉 6번 문건(2012년 작성추정)의 단속사항

단속대상 집단	군부대안의 모든 일군들과 군인, 가족, 종업원, 특정하여 언급된 연대로는 613연대 와 포병연대를 비롯한 일부 단위 정치일군들 / 315연대 및 316연대
피적발자	① 당위원회 사업계획에 비상설조 검열과 관련한 사업내용들을 반영하지 않고 김정일의 6월18일 비준과업집행과 관련한 조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자 - 316연대 포대대 경비분대장 리수향 - 613연대 1대대 경비분대 대원 한설경 ② 외래문화를 접한 자 - 316연대 2대대 화력부 중대장 박경옥을 비롯한 녀성군관 - 315연대 1대대2중대 부중대장 전경섭 - 316연대장 박영남 - 613연대 작전상급참모 옥추봉을 비롯한 3명 군관 - 1대대 정치지도원 로철웅 - 사단 훈련부과장 길영남 - 사단 중기계참모 최명환 - 315연대 직속 기관포소대장 전영남 - 316연대 3대대 7중대 부중대장 김성이 - 315연대 참모장 허동성 - 포병연대 대령서기 장원철

본 문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언급된 단속 대상이 군부대 안의 모든 일군(일꾼)들과 군인, 가족, 종업원이 포함되며, 피적발 언급 사례만 하더라도 일반 군인에서 그들의 가족, 나아가 사단지휘부 소속자들, 심지어 단속 주체인 정치지도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개별적 적발 사례와 함께 몇몇이 함께 외래문화를 향유하다 적발되는 등 북한군대 내 외래문화 침투 실태가 일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탈북 군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 연구¹⁰⁾ 결과를 보면 부대 내 서구 풍조나 남한 문화가 들어와 있는 정도가 “매우 심했다”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9명으로 전체의 19.5%였고, “거의 없었다”고 유입을 인정하지 않은 비율이 31.0%였다. 이 응답을 계급별로 보면 장교나 부사관보다 병사들이 훨씬 부대 내 유입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1년에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김정일 시대 북한 군대의 실태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연구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장교와 병사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 빈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본 연구에서 살펴본 문건은 지휘관급 장교들 중 다양한 계급과 직책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북한 군 내 장교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 서구풍조 및 남한 문화 유입 정도에 대한 계급별 인식

		매우 심했다	어느 정도 있었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적은 편이었다	거의 없었다	전체
계급	병사	0.5%	4.7%	5.8%	1.6%	0.5%	13.1%
	부사관	2.6%	9.4%	12.0%	23.6%	24.1%	71.7%
	장교	1.0%	1.6%	1.6%	5.8%	5.2%	15.2%
전체		4.2%	15.7%	19.4%	30.9%	29.8%	100%

출처: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1), p.163.

¹⁰⁾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1), p.163.

2.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 북한 군대 내에는 다양한 계급층과 가족들, 종업원들에게서 남한 영상물 시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속되는 외래문화는 정확히 무엇이며, 이들을 어떤 매개로 보관,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시청 전파하는지 살펴보자.

문건을 통해 확인한 적발물들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한국의 것이 적발된 경우 대부분 ‘괴뢰’라는 용어를 붙이는데 ‘괴뢰영화, 괴뢰색정전자도서, 괴뢰 TV연속극, 괴뢰 음악, 괴뢰화면음악(뮤직비디오)’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문건에는 ‘외래 국가 적발물로 미국영화, 일본성록화물’ 그리고 ‘남조선 번역판 중국예술영화, 불법유통 중국영화 및 중국TV극’까지 포함되어 있다.

〈표 5〉 문건 내 기록된 적발 사항 (대상자, 외래미디어, 이용한 매체)

피적발자	소속 및 직위	적발물	이용매체
A	인민무력부 직속 제3호 지휘부	괴뢰영화와 < > ¹¹⁾ 외 1편, 일본성록화물 6편, 괴뢰 TV연속극 < > 외 7편, 미국영화 < > 입력, 보관	외장하드
B	...의 부관	괴뢰색정전자도서 < > 1-3권, 괴뢰 미신자료 < >, < > 외 20개	노트형컴퓨터
C	총참모부 지휘정보국 직속 제10통신련대 5통신결소속	괴뢰영화, < > 외 1편과 괴뢰 TV극 < > 외 2편, 괴뢰화면음악 < > 53편, 괴뢰음악 30곡, 괴뢰전자도서 < > 외 27개	티카드 손전화
리수향	316련대 포대대 경비분대장		
한설경	613련대 1대대 경비분대 대원	<등불>, <소중히 하자>, <세월아 가지말아> 노래 가사	수첩 메모
박경옥 및 녀성군관	316련대 2대대 화력부 중대장		

전경섭	315연대 1대대 2 중대 부중대장	비법복사한 영화	소형 TV
박영남	316연대장	-	소형 TV
옥추봉 및 3명 군관	613연대 작전상급 참모	통로 고정 없이 1년 이상 TV 사용	가정 내 TV
로철웅	1대대 정치지도원	무단 만수대 TV 시청	가정 내 TV
길영남	사단 훈련부과장	등록 및 고정 절차 무시 만수대 TV 시청	가정 내 TV 소형 TV
최명환	사단 동기계참모	등록 및 고정 절차 무시	가정 내 TV
전영남	315연대 직속 기 관포소대장	-	자체조립 라디오
김성이	316연대 3대대 7 중대 부중대장	-	자체조립 라디오
허동성	315연대 참모장	남조선 번역판 중국예술영화 <태 공천사>	-
장원철	포병연대 대렬서기	수십 장의 사회풍 가족사진	컴퓨터

또한 수첩에 불법 노래의 가사를 기재한 사실까지 적발되었다. 적발된 <등불>, <소중히 하자>, <세월아 가지마라>는 출처 불명의 노래로 간주되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우리 일군들부터가 자본주의사상과 생활풍조와의 투쟁을 수령결사옹위 전, 조국보위전, 치렬한 계급투쟁으로 보지 못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지 않아 이 사업이 부대적인 사업,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출처불명의 노래와 외곡된 노래**를 부르고 미신행위에 밀려 드는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에서 금지된 가족사진 촬영 및 보관과 사진 촬영 시 ‘우리 식’ 즉 정해진 자세가 아닌 자유로운 포즈를 취한 ‘사회풍’을 검열하고 있음을 다음의 문건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1) 해당 문건에는 모두 남한 영상물로 언급되는 제목을 < >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포병연대 대령서기 장원철은 컴퓨터에 수십장의 가족사진들을 입력시켜 놓은 것을 비롯하여 우리식이 아닌 행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현상과 사회 풍을 끌어들이 부대, 구분대의 진전한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건 내에서는 남한 및 외국의 영상물이 어떻게 유통되는가에 관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즉 어떤 도구를 적발하였는지를 통해서, 어떤 매체로 유통되었는지를 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된 매체는 CD, 외장하드, USB, DVD, 노트북컴퓨터, 컴퓨터, 티카드(T-Flash card), 손전화(휴대폰), 가정 내 TV, 소형 TV, 자체 조립 라디오(라디오) 등으로 다양하다.

우선 2013년 1월 25일 연번 1의 문건에는 피적발자 C가 티카드와 손전화를 이용해 외부 미디어를 시청하였다고 나오며, 유통 경로와 시청 수단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 총참모부 지휘정보국 직속 제10통신연대 5통신결속소 ...은 지난 1월 초 평양 제 2 병원 구급과 ...으로부터 괴뢰영화, < > 외 1편과 괴뢰 TV극 < > 외 2편, 괴뢰화면음악 < > 53편, 괴뢰음악 30곡, 괴뢰전자도서 < > 외 27개가 들어 있는 티카드를 받아가지고 91훈련소 후방부 군의부 ...의 집에서 그의 딸과 함께 손전화로 보다가 적발되었다.

위의 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적발자 C의 경우 불법 영상물의 구입 경로인 전달자, 영상물 관람 장소, 함께 본 가족 등이 전체적으로 드러나 단속 범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북한에서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손전화를 이용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손전화를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영상물 시청이나 카메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2013년 4월 3일 작성된 3번 문건 상에는 구체적인 불법 외래문화 접근

방법으로 인터넷과 위성 텔레비전이 언급되었다. 북한 내에서 방영하지 않은 중국 영화, TV극의 불순 녹화물(목란비디오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대상 이외의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2012년 상반기 작성 추정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문건, 연번 6의 내용에서는 포괄적인 단속 매체가 등장한다.

당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이색적인 사상과 생활풍조의 침습을 막기 위한 검열요강》에 준하여 비상설검열조성원들을 위한 실무강습을 조직하여 그들이 높은 계급적 안목을 가지고 비상설조 검열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지난해만도 **중국산 소형텔레비존 3대와 자체로 조립한 반도체 라디오 1대, 중국산 소형녹음기 3대, USB를 맹목시키지 않은 DVD녹화기 10여대, 불순녹음녹화물들을 수록하였거나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CD와 DVD원판 300여개를 회수처리**하였으며 이사업에서 심중하게 제기된 5명의 대상들을 당검열위원회에서 30여명의 성원들을 해당 당세포들에서 비판각성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단속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외래 불법 영상물 특히 한국 영상물의 확산을 막는 것이 여의치 않았음을 시사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남조선영화를 비롯한 불순녹음 녹화물들을 몰래보거나 류포시키는 현상들을 철저히 짓몽개 버릴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사업에서는 적지 않은 결함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한국을 비롯한 외래 영상물의 유통, 확산이 광범위하고 유통 도구가 외장하드, USB, CD, DVD, 티카드 등으로 다양하여 검열로써 단속이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둘째, 불법 영상물 시청 도구가 다양하고 교묘해졌다는 것이다. DVD 녹화기, 노트북컴퓨터, 컴퓨터, 손전화, 가정 내 TV, 소형 TV, 자체 조립 라디오까지 다양하

므로, 이는 물리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영상물의 유통 확산이 어떤 식으로든 저장·보관되어야 한다면 적발 대상이 확정된다 할 수 있으나 컴퓨터, 손전화, 가정 내 TV, 소형 TV, 자체 조립 라지오를 이용하면 저장하지 않고도 시청할 수 있는 까닭에 사실상 전체를 검열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등록 및 통로(채널) 고정 절차를 무시한 가정 내 TV 혹은 소형 TV를 통해 만수대TV¹²⁾ 혹은 외래 방영물을 시청한 사례는 사실상 군부대 내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본 문건의 내용을 보면 단속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북한 당국 스스로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북한 사회 일반은 물론 북한 군 내부에서도 남한 영상물 시청이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 영상물의 시청 및 단속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뇌물을 주고 봐주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확산되면서 한국산 제품과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상행위는 모두 불법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을 주는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장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뇌물을 주지만, 비사회주의의 행위 양식이나 제품들을 사고팔다 적발되었을 때도 뇌물을 주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¹³⁾ 체제 결집과 충성도를 위한 단속이 아니라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단속은 결국 뇌물수수 및 봐주기 현

12) 만수대TV는 평양 시민과 평양시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2차례에 걸쳐 러시아·쿠바·중국 등 구 동구권영화 위주로 문화예술 및 스포츠 콘텐츠를 방송하며, 평양시에 국한된 지역 방송이지만 인접한 남포시와 평안남도·황해남도·황해북도의 평지 일대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13)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 주민 의식조사,” 『북한학보』, 제39집 2호(2014), p.45.

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군인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에 따른 기강 해이와 사상 통제 약화는 물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 부정부패와 단속의 한계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13련대 정치부에서는 검열요강에 준하여 검열통제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여야 하겠으나 전기사정에 빙자하면서 검열사업을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련대 작전상급참모 옥추봉을 비롯한 3명의 군관 **가정세대들에서 TV를 새로 구입하여 1년이 지나도록 통로도 고정하지 않고 리용하는 현상**과 1대대 정치지도원 로철웅동무는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서 앞장서야할 정치일군인 자신부터가 **TV통로를 개봉하고 만수대TV를 보다가** 사단 검열에서 제기되는 심중한 결함들이 제기되었습니다.

… 중략 … 훈련부과장 길영남동무는 지난해 4월 조선인민군 훈련일군대회에서 받은 **선물 TV와 소형TV를 6달이 지나도록 등록 및 고정도 하지않고 만수대 텔레비존을 보다가** 수차 검열에서 제기되어 지적을 받았으며,

중기계참모 최명환동무를 비롯한 10여명의 일군들속에서는 **새로 구입한 TV를 등록 및 통로그정도 하지 않고 리용**하다가 사단 비상설조 검열에서 제기되어 월마지막주 당생활총화에서 집중비판을 받는 한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부 프로그램 시청을 막기 위해 텔레비전은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며, 만약 단속이나 검열 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문건을 통해 확인한 등록 및 고정 절차를 무시한 가정 내 TV 혹은 소형 TV 및 손전화의 사용은 이용자가 어떠한 범위까지 시청을 한 것인지 추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대로 검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 내에는 현재 전국망을 갖춘 조선중앙TV, 평양지역 방송인 만수대TV, 대남전용 방송으로 개성TV와 룡남산텔레비전방송(구, 조선교육문화TV)이 있으며, 만수대TV는 시청 지역 범위를 넘어선 사례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외국 방영물을 기기조작을 통해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단속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IV. 북한 당국의 대응과 단속

1. 김정은의 지시 사항

분석 대상 자료 중 연번 2번 문건은 이전에 보고된 사항에 대해 김정은이 지시한 비준과업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연번 6번 문건에서는 김정은이 불법 외래문화에 대해 경계하여 지시한 내용을 인용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1) 2013년 1월 31일 문건 내 김정은의 비준과업

해당 문건은 2013년 1월 31일 총정치국에서 올린 대책보고¹⁴⁾에 대해 김정은이 지시한 비준과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건에 적시된 제목은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생활풍조의 뿌리를 들추어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비준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비준과업에서는 불법 외래문화를 “사회주의 사상문화와 배치되고 우

¹⁴⁾ ‘2013년 1월 31일 총정치국에서 올린 대책보고’란 2013년 1월 25일 작성된 연번 1번 문건 내 ‘대책적 의견’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리 제도를 쪼먹는 불건전한 사상요소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적 의견’은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2013년 1월 31일 문건 내 김정은이 제시한 ‘비준 과업’

번호	‘비준 과업’ 내용	
1	전군적 사상공세	인민군대를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심리모략 책동을 무집하게 짓몽개버리기 위한 전군적인 사상공세를 벌리도록 할 것
2	검열통제 방법 지시	적들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더욱 공세적으로 벌리도록 할 것
3	피적발자에 대한 처리 지시	사회주의 선군문화에 배치되고 우리 제도를 쪼먹는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
4	중장기적 단속을 위한 장악지도 지시	적들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일관성 있게 내밀도록 장악지도할 것

(1) 전군적 사상공세

첫 번째 지시사항은 불법 외래문화 차단을 위한 전군적 사상공세에 대해 매우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우선 1·4분기에 사상투쟁을 집중할 것과 2월 중 일군들과 군인, 가족, 종업원들 속에 빠짐없이 김정은의 교시를 전달침투하고 학습토론을 진행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를 인식시키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모든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2월에 상급정치부일군들의 지도 밑에 자체검토를 빠짐없이 하게 한 다음,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대대 이상 당 및 청년동맹조직들은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당세포들과 청년동맹초급단체들은 총회에서 사상투쟁을 벌이도록 지시하고 있다.

특히 비준 과업의 내용 중에는 결속을 위한 특정 지역 및 단위, 대상 범위가 언급되었다. 황해남도 과일군, 룡연군 인민군대 안의 공장, 기업소, 농목장, 가족, 종업원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게 3월에 취급하는 정치학습을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비준 과업 내에서 언급된 정치학습을 위한 강연 자료 및 각급 정치부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

〈표 7〉 2013년 1월 31일 문건 내 김정은의 비준 과업 내용

강연자료	- 《혁명군인다운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날데 대하여》 - 《적들의 심리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총포성 없는 전쟁으로 여기고 끝장을 볼 때까지 더욱 강도높게 벌려나가자》
각급 정치부 노래	-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 《사회주의 지키세》 - 《이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또한 전군적 사상공세를 펼치기 위한 주체 기관으로 경찰총국, 적공국(적군와해공작국), 인민군 79호실과 대외 및 대적사업단위 당조직들, 정치부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분기마다 일군들과 군인, 가족, 종업원들 속에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대상별, 단위별 특성과 사상동향에 맞게 진행하여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대상자들이 말려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기본을 두고 창작가, 배우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전을 웃단위 일군들의 지도 밑에 분기 1차 1~2일 간 진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더불어 총참모부 ‘대렬보충국’에서는 신입 병사의 입대 시 이색적인 사상과 생활풍조를 없애기 위한 교양사업을 맡는다고 명시한다.

위 문건에서 언급된 ‘각급 정치부 노래’인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사회주의 지키세〉,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등은 김정은 시대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모란봉악단 공연에서 연주되며 북한의 ‘목란비디오’를 통해 제작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보급되었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결성된 악단이며,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의미 있는 행사나 기념일에 공연하였다. ‘음악정치’로 대변될 만큼 북한에서 음악은 사상결속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이번 문건에서 언급된 노래들 역시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¹⁵⁾

(2) 검열통제 방법 지시

비준 과업의 내용 내에는 검열통제사업의 강화를 위한 통제방법이 상세히 지시되고 있다. 해당 연도 2월과 3월에는 “전군적으로 당책임일군 및 정치, 보위, 검찰일군들과 ‘109연합검열조성원’들이 총동원하여 불순 전자매체와 출판선전물, 이색적인 생활풍조에 대해 일대섬멸전을 벌리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열 및 수색에 대한 광범위성, 여러 기관의 연관 개입 및 조직적 운영 상황을 미루어 현재 북한 군대 내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래문화 영상물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유포, 시청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검열 및 통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2절에서 분석한다.

(3) 피적발자에 대한 처리 지시

비준과업의 내용 내에는 피적발자를 처리하는 담당기관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김정은의 교시가 적시되어 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 보위, 검찰기관에서 “외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발견 포착 시 이를 이적행위 및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대논쟁, 사상투쟁, 공개투쟁을 강하게 벌린 다음 강금, 강직, 출당, 철직, 제대, 추방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교시의 내용이다.

¹⁵⁾ 김정은 시대 모란봉악단의 공연 배경 및 의미에 대해서는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한다』(서울: 선인, 2014) 참조.

더불어 각급 단위 정치, 보위, 검찰일군들이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 책동 사업을 장기적으로 벌이며, 당적·법적으로 엄하게 대책하는 한편, 피적발자를 배후두둔하거나 (적발증거)자료를 약화시키는 행위, 정실안 면관계(친분)에 따라 처리하는 행위, 돈과 물자를 받아 묵인하는 행위 또한 동조하는 위험 행위로 간주 강하게 검열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본 문건에서 주목할 점은 단속 시 뇌물을 주거나 친분에 의한 봐주기 현상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북한 내 한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북한에서 한류가 확산되는 근원에는 정치적 내용이나 종교 관련 선전물이 아닌 단순 시청자의 경우 대부분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한다. 그런데 북한 군대 내에서도 남한 영상물 시청 단속 시 ‘돈과 물자를 받아 묵인하는 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중장기적 단속을 위한 장악지도 지시

중장기적으로 불법 외래문화, 즉 “적들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기 위한 김정은의 대책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단, 여단 이상 정치부들에서 당위원회 전원회의와 군정간부회를 비롯 ‘아랫단위 책임일군’들이 올라올 때마다 사상문화와 이색 생활풍조를 없애기 위한 사업정형을 총화할 것,

둘째, 보위국을 비롯한 각급 단위의 정치, 보위기관들에서는 월 1차 ‘적들의 사상문화와 생활풍조’에 대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상호 교환하는 체계를 세울 것, 마지막으로 연대 이상단위 정치부 책임일군들이 ‘109련 합검열조’를 당적, 계급적 원칙이 강하고 수준과 능력이 있는 대상으로 꾸려 문제들을 책임있게 장악 지도할 것

이와 같은 것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2) 연번 6번 문건 내 김정일의 ‘불법외래문화 경계’ 언급 사항

해당 문건 ‘남조선영화를 비롯한 불순록음 록화물들을 짓뭇개 버릴데 대한 당의 방침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내에는 불법 외래문화의 확산을 경계하는 김정일의 교시가 직접 인용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짓부셔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지지를 튼튼히 다질 수 없으며 나가서는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정일의 ‘비준과업’ 및 김정일의 교시는 즉각적으로 당과 군에 전달되어 북한 당국의 불법 외래문화 단속 주체 기관, 단속 및 검열, 수색 체계로서 구조화된다. 다음 2절에서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단속 형태에 대하여 문건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 북한 당국의 단속 형태

1) ‘적들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 섬멸을 위한 조직 체계

김정일의 ‘비준과업’ 지시에 대해 응답하는 내용의 ‘대책적 의견’ 내에는 ‘적들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 섬멸을 위한 교양사업, 단속 및 검열 그리고 처벌 기관과 이행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대책적 의견’은 ‘비준과업’ 지시 사항에 대해 군단 정치부가 정리하여 군대 내에 지시하는 사항이다.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헌 내용에는 불법 외래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 기관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들의 업무 영역은 교양사업, 단속 및 검열, 출판물 감정, 신고 및 협조, 취조, 처벌, 비판 작성 등으로 세부화되어 있다.

〈표 8〉 북한 군대의 교양사업, 단속 및 검열 그리고 처벌 기관

업무 영역	주체기관
교양사업	- 정찰총국, 적공국, 인민군 79호실 - 대외 및 대적사업단위 당조직, 정치부들 군단예술선전대, 인민군대 안의 예술단체 총참모부 대렬보충국
단속 및 검열	- 인민군 109연합검열조와 총참모부, 인민무력부/국, 부 109연합검열조 - 사회 109연합지휘부 협동
출판물 감정	출판검열국 79호실, 국가안전보위부
신고 및 협조	사, 려단 정치부들은 각급 단위 지휘관, 참모부, 정치부, 보위, 검찰기관과 협조
취조	인민군 보위국
처벌	인민군 검찰국
비판 작성	당검열위원회 (심중) 당세포 (경미)

북한 당국은 이들 간의 협조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 즉 단속 및 검열의 주체기관인 ‘인민군 109연합검열조’에만 책임을 강조하지 말고 스스로 신고하고 검열하여 공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련대 단위 정치부 차원에서 매일 비상설조검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한편, ‘인민군 109연합검열조’와 ‘사회 109연합지휘부’가 협동하여 검열단속통제를 강도 높게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적들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 적발을 위한 단속, 검열 형태

우선은 단속 및 검열 기관과 연대 단위 정치부 등이 군관 및 군인 등 개인이 소지한 불순 전자 매체를 단속하는 데에 집중한다. 즉 유통 도구가 되는 외장하드, USB, CD, DVD, 티카드 등의 소지를 단속하며, 둘째, 불법 영상물 시청의 이용 도구가 될 수 있는 DVD 녹화기, 노트북컴퓨터, 컴퓨터, 손전화, 가정 내 TV, 소형 TV, 자체 조립 라디오 등 매체성 기구와 함께 위성 텔레비전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접촉 혹은 접속, 자료조사 및 열람 등을 광범위하게 검열한다.

특히 문건 내 해당 영역에서는 손전화의 확대를 통해 외래문화가 급속히 전파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부들에서 1.4분기안으로 보위, 검찰기관들과 협동하여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손전화기를 빠짐없이 회수처리하며 몰래 가지고 불순자료들을 보는 현상이 나타났을때에는 적들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류포시키는 주범으로 락인하고 당적, 법적으로 엄하게 처리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도록 할 것

북한 사회 변화의 주요한 양상 중 하나는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미디어 매체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알판'이라 불리는 CD나 DVD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영상 매체가 급속히 진화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녹화기라 불리는 재생 장치가 아닌 중국산 DVD플레이어는 북한에서의 외래문화 이용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¹⁶⁾

16)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p.173.

통제되고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외부 정보가 다른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유통된다는 점은 북한 체제의 결속력과 사상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 시청 용도가 아닌 유통 도구로 외장하드, USB, CD, DVD, 티카드 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 영상물 시청의 이용 도구가 될 수 있는 매체성 기구와 함께, 위성 텔레비전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시청도 기존 방식과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검열 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검열 주관기관인 109연합검열조에만 책임을 방임하지 말고, 당위원회적인 사업, 부대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중지도, 검열, 판정, 지도사업을 조직하도록 주문하고 있으며,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부, 보위부들에서 모든 군관, 군인들과 동, 인민반, 핵심군중을 통한 장악 및 신고 체계를 철저히 세워 자기 단위와 주둔 지역에서 이색적인 록음록화물을 감찰하고, 유포시키는 대상, 출처 없는 노래를 부르거나, ‘우리 노래’를 왜곡하여 부르는 대상, ‘우리식’이 아닌 춤, 종교, 미신 행위들을 색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해당 의견 내에는 수색 및 검열에 대한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지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불심검열, 야간 및 교차검열, 수색전 등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군중, 군단(그와 같은 단위) 정치부 책임일군들이 2월중에 109연합검열조들의 지난해 활동정형을 경험과 교훈적으로 분석하고 불의검열, 야간검열, 교차검열과 수색전, 탐색전, 추격전을 근기있게 벌려 뿌리를 끝까지 들추어 내도록 장악지도할 것

이상과 같이 북한 당국은 사, 려단 정치부의 교양사업의 시행과 함께 집중적인 사상전, 검열통제사업투쟁을 각급 단위 지휘관, 참모부, 정치부, 보위, 검찰기관 간 배합과 협동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비준

과업 내 해당내용을 련대(3급 공장, 기업소) 이상 단위 당위원회와 해당 부서과 집행대장에 등록하고 집행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3) 검열기관 및 단속조: '109그루뻘'에서 '7.27상무조'까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의 지시사항 중 “정치부 책임일군들이 ‘109련합검열조’를 당적, 계급적 원칙이 강하고...”라는 내용이 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지시이행을 위해 ‘109 그루뻘’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단속조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 불법 외래문화 침투 및 자본주의 생활 풍조를 막기 위한 기존 방침은 첫째, 북·중 간 국경을 물리적으로 통제함과 둘째, 자본주의 풍속 단속을 위한 시청각 기기를 통제하는 것으로, 이를 제재하는 대표적 통제 기구로는 ‘109상무(109그루뻘)’로 알려져 왔다. 이 기구는 “외색 자본주의 사상을 척결하라”고 하는 김정일의 교시날짜(10월 9일)를 따서 이름 지어진 특별단속그룹이며 외국 영화, 노래, 출판물, 방송 등을 접하거나 유통시키는 주민들을 색출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이 기구는 주로 DVD, USB, 라디오, 출판물, 중국산 휴대전화 등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압수한 매체들을 다시 조직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자 김정은 집권 이후 ‘114상무’¹⁷⁾가 조직되었고, 검열 조직의 부패나 불법 행위 등을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조직 내 견제 및 감시가 일상화되도록 조치하였다.¹⁸⁾

최근에는 군인들로 구성된 검열 조직인 7.27상무까지 등장하여 강력

¹⁷⁾ 114상무 또한 불법 출판물과 녹화물을 단속하라는 김정은의 교시(1월 14일)을 딴 명칭이다.

¹⁸⁾ 통일부 공식 블로그, “2013년 북한의 한류열풍, 어디까지 왔나?; <<http://blog.unikorea.go.kr/3937>> (검색일: 2015년 4월 19일).

하게 남한 매체에 대한 단속을 펴고 있다고 전해진다. '7.27 상무조'는 기존의 '109그루뻘'을 통한 단속이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로 인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109그루뻘'까지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남한 영상물 시청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단순히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사업, 단속 및 검열, 출판물 감정, 신고 및 협조, 취조, 처벌, 비판 작성 등으로 업무가 세부화 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V. 결론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군대에 공식적으로 하달한 내부 문건 분석을 통해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과 단속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밀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브로커에 의한 조직적 탈북이 가능해지면서 북한 내부 문건이 유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부 문건은 김정은 시대 북한 군대의 외래문화 접촉 실태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었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내 남한 영상물 접촉 실태에 대한 논의는 주로 북한 주민들이 외래문화를 수용하면서 어떠한 의식변화를 겪는지, 한국 영상물이라는 매개체가 북한 내부에서 어떠한 인적, 물적 연결망을 형성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 사회의 변화 여부와 속도를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늘 한계로 지적되었던 것은 북한 내 다양한 계층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른 북한 체제 변화 여부를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선군정치로 대변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체제 유지의 핵심 계층이라 할 수 있는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충성도와 결속력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에서 군대의 역할은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고 체제 수호를 위한 최전선의 혁명 계급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주민들과는 당연히 구별되는 강도 높은 사상 통제와 정치학습을 통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야 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따라서 북한 군인의 사상교양과 충성도는 북한 체제를 전망하는 주요한 지표라 하겠다.

체제 안정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선군정치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면 군의 사상 교육이 완벽해야 한다. 북한은 사상진지가 무너지면 강대한 경제력과 군사력도 맥을 추지 못하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도 파멸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 보위의 보루인 군대의 사상을 매우 중요시한다.¹⁹⁾ 북한 군인의 기강은 북한 체제 유지 및 변화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군인들이 남한의 외래문화를 접하고 의식과 행위양식이 변화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이며 썩고 병든 자본주의”로서 가득한 적대감으로 보는 남한의 모습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남한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래문화의 접촉은 군인의 기강 해이는 물론 체제에 대한 충성도와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남한 영상물을 단순한 흥미와 재미 위주로 시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단순 시청이 곧 체제 변화라는 거시적 행위 양식의 변화까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투’를 엄격히 봉쇄하기 위한 사상 통제와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19)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1). p.89.

에 대한 처벌이 강도 높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군대 내에서 남한 영상물 시청과 확산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은 북한 당국의 군대에 대한 통제와 장악력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북한 체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철저한 명령체계에 기반을 두어 유기적인 체계로 작동한다면 그 내구력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상통제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단속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을 단순히 흥미와 재미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된 주요 사항을 통해 북한 체제 내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 군대 내에 다양한 계급과 보직자들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사상문화침투 책동을 분쇄”하고 “군 사상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군대 내 다양한 계급들이 단속되었으며 심지어 군대 내에서 이들을 감시할 정치보위원들도 적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적발된 군대 내 계급을 보면 ‘경비분대장, 중대장, 정치지도원, 훈련부 과장, 사단 중기계참모, 기관포소대장, 참모장, 대렬서기’ 등이다. 단속자들의 대부분은 지휘관급 장교들로서 사병의 단순 시청 행위와는 분명 구별된다. 또한 군인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단속된 사례도 있었으며 군인 가족과 종업원 등이 함께 시청하다 적발된 사례도 언급되고 있다.

군대가 아닌 민간인 경우 엘리트나 상층부에서 남한 영상물을 먼저 시청, 소비하고 이러한 경향이 일반 주민에게까지 내려오는 위계질서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 과거와 같이 단순한 시청자, 소비자의 영역을 넘어 상층부와 결탁하여 남한 영상물을 밀수하거나 북한 내에서 장마당을 통해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자로 확대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상층부가 먼저 시청하고 나중에 하층 주민까지 확산되었던 현상과 달리, 군대의 경우 초기에는 일반 병사나 하층 계

급에서 먼저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였다. 하지만 본 문건에서 확인한 바로는 군대 내 간부급 등의 상층부에서 시청 및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민간과 비교된다. 물론 남한 영상물이 시청되고 있는 위계적 특성을 근거로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하고나 전망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세력으로서 군대 내 간부들의 사상 이완은 체제 내구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북한 군대 내에서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매체의 진화는 남한 영상물 시청 속도와 확산 범위를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단순한 시청용을 넘어서 북한 장마당을 통해 거래가 됨으로써 물건을 통한 인적, 물적 연락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역 간 이동에 제약을 받고 지역별 감시체계가 명확히 이루어진다면 북한 체제 내구력은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품 유통을 위해 지역 간 이동이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인들이 국경을 비롯하여 뇌물을 받고 지역 간 이동을 무마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문건에서는 손전화기, 노트형 컴퓨터, 외장하드, USB, DVD, 위성TV, CD, 인터넷 등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가 직접 언급되고 있다. 단속의 대상 매체도 영화, 전자도서, 미신자료, 연속극, 화면음악(뮤직비디오), 음악, 성녹화물 등 다양하다. 이러한 상품들은 군인들과 조직적으로 연계된 장마당 상인들에 의해 북한 사회에 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북한 당국이 “제국주의 사상문화 봉쇄”를 제시하며 단속반을 가동하지만 문건을 보면 스스로 단속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건 내에서는 단속 기관으로 ‘인민군 109 연합검열조’, ‘사회 109연합

지휘부', '총참모부', '정찰총국', '적공국', '인민군 79호실', '출판검열국 79호실' 등 당, 정, 군 모든 기관이 망라되어 남한 영상물 시청과 확산을 단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체가 다양화되고 뇌물을 통한 봐주기 현상이 생겨나 단속에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부터 수직적 통제 기제가 원활히 작동했던 기존의 북한 체제에 일정 부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본 문건에서 김정은의 직접 교시와 과업 등을 관철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관련 조직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한 영상물 시청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북한체제의 근간인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 주민의 직접 면접이나 증언이 아닌 북한 당국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통해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의 시청 및 단속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북한군의 장교급 이상 현직 군인들을 직접 면접할 수 없다는 제약과 북한이탈주민 중 김정은 시대 군인으로 복무했던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문건 분석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번 문건은 북한 당국의 시각에서 남한 영상물의 시청과 단속 실태를 상세히 언급했으므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오늘'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군정치로서 군부의 위상과 권력이 막강한 북한 체제에서 북한군의 남한 영상물 시청과 외래문화 접촉에 따른 기강 해이는 '오늘의 북한'이 향후 어디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인정하는 단속의 한계 상황이 어떠한 속도와 범위로 이어질지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 강동완·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들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1.
- 강동완·박정란. 『한류, 통일의 바람』. 서울: 명인문화사, 2012.
- 이교덕·임순희·조정아·이기동·이영훈.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교덕·정규섭·이기동.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류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3.

국문 논문

-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2014). pp.167~202.
-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2010). pp.107~140.
-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 주민 의식조사.” 『북한학보』. 제39집 2호(2014). p.45.
- 곽정래·박승관. “새터민의 대중매체 이용과 사회적응.” 『한국언론학보』. 제25권 3호(2006). p.415~504.
- 김창희. “북한 사회의 시장화와 주민의 가치관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52집(2009). pp.81~101.
- 류길재. “김일성, 김정일의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3.
- 박승인. “한류의 현재와 미래: 외국 유학생을 위한 교양교육.” 한국교양교육학회·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3년 춘계전국학술대회 논문집』. 2013. pp.395~404.
-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像).”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2012). pp.239~270.
-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 『북한학연구』. 제9권 제2호(2013). pp.199~235.

- 오양열. “북한 내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한 영향과 전망.” 『플랫폼』, 제26호(2011), pp.16~23.
- 윤선희.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사회 변화.”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2011), p.435~501.
- 윤인진. “북한이주민의 문화변용과 사회적응.” 『한국학연구』, 제41호(2012), p.1~54.
- 임석준 · 강동완 · 김현정. “북한의 한류연구: 동향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10권 2호(2014), pp.83~111.
- 이미나 · 오원환. “북한 및 제3세계에서의 한류 수용 경험과 한국 문화 적응.”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32호(2013), p.75~101.
- 이주철. “북한 주민의 남한 방송 수용 실태와 의식 변화.”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0호(2002), pp.257~282.
- 이창현. “탈북자들의 남한방송 수용과 문화적응: Q방법론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선호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4권 2호(2000), p.151~186.
- 전미영. “북한의 외래문화 수용 실태와 문화전략: 북한 텔레비전 방송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2014), p.129~155.
- Zhou Yu bo. “중국 영상 문화에 끼친 한류의 영향: 영화와 드라마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연구보고서 『아시아의 재발견: 동아시아 국가간 TV 프로그램 교류의 의미』, 2005, pp.95~113.

인터넷 자료

- 통일부 공식 블로그. “2013년 북한의 한류열풍, 어디까지 왔나?”; <<http://blog.unikorea.go.kr/3937>> (검색일: 2015년 4월 19일).

A Study on Influence of South Korean Visual Media in The North Korean Army and North Korea's Management Capability

Kang, Dong-Wan · Kim, Hyun-Jung (Dong-A University)

Abstract

In the closed society, North Korea, the influx of the external information into the internal territories has critically played a role as a primary factor to change the attitude of its citizens, and consequently its society. As the Korean wave - the Hallyu - penetrates through North Korea, the world's most reclusive country, academic interest in this phenomenon has follow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cedures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for crackdown, censorship on, and punishment for illegal foreign cultures. While previous research has studied on watching and distributing the South Korean visual media for civilians by surveying defectors from the North, this research is very distinctive as focusing on its influence upon the North Korean Army based on official internal document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Under the situation that Sun-Goon (military-first) Politics is a critical way to accomplish the national goal in North Korea, the soldiers' indiscipline has developed the regime change, and weakened its durability.

Key words: external information, Korean Wave (Hallyu) in North Korea, North Korean army,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강동완(Kang, Dong-Wan)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이다. 주요 논저로는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2014),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와 전망: 모란봉악단 공연 분석을 중심으로”(2014),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2013) 등이 있다.

김현정(Kim, Hyun-Jung)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대학교 교육혁신원 조교수이다. 주요 논저로는 “체험인지형 지역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부산, 경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2015), “통일교육의 로컬리티 관점 개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2015), “북한의 한류 연구: 동향과 과제”(2014) 등이 있다.

연대과학기술대학의 비전과 실제

: 국제성, 민족성,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박명규 · 임수진 (서울대 사회학과)

국문요약

연대과학기술대학은 탈냉전과 국제화가 열어놓은 기회의 공간 속에서 '국제적 민족대학'이라는 독특한 꿈과 비전이 구체화되고 실현된 실체이다.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연대과학기술대학은 급변하는 국제화의 격랑 속에서 독특한 개성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학 제도가 어떻게 구축되고 형성되었으며 현지 사회의 거대한 흐름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적응해 가는지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연대과학기술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해준 시대·사회적 흐름과 개인 및 공동체 비전의 형성 과정, 그리고 대학의 설립 비전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그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던 연대과학기술대학의 세 가지 특성—국제화, 민족 중심, 통합적 공동체—이 급변하는 중국 사회와 조선족자치주의 변화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상생과 통합의 요소로 작용하였던 국제화와 민족 중심이라는 가치가 대학 내외의 변화에 따라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통합적 공동체의 단절과 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상황을 극복하고, 긴장 쟁점들을 넘어선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은 동북아 역사에서 의미미한 역할을 담당하는 역사적 공동체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연대과학기술대학(연변과기대), 대학공동체, 국제화, 조선족, 통합

I. 서론

교통과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국적, 민족, 인종의 개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 상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도 이런 흐름의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지역과 사회에서 온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의 공존 현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가 초래하는 이런 다문화 상황이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분리와 차별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야기하는 새로운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경의 높이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정보의 흐름이 확대되면서 문제와 기회가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연대과학기술대학(이하 연변과기대)은 동북아 지역에서 이런 세계화 흐름이 시작되던 시기에 설립되어 오늘까지 이 변화와 함께 존속해온 대학이다. 이 대학은 탈냉전과 국제화가 열어놓은 기회의 공간 속에서 독특한 꿈과 기대를 자임하면서 모험적 실험을 감행했다. 전지구적 ‘코리아 디아스포라 연결망’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중국 조선족의 발전 및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꿈의 폭과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갈등과 단절이 지속되는 남한과 북한, 또 협력과 긴장이 함께 커져가는 동북아 국가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며 연변과기대를 되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독자적인 지향과 통합적 공동체성을 표방하는 국제적 대학캠퍼스가 대학 외부의 변화와 어떻게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주목한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직면한 안팎의 긴장, 즉 국제화와 민

족 정체성의 관계, 구성원 간의 통합 역량과 공동체성의 유지, 그리고 지역화의 진전 등 긴장을 일으키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민족대학이라는 공간이 국경을 넘는 화해와 교류, 평화의 진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점검해본다.

II. 이론적 논의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와 대학이 맺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이론적 자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교육과 연구를 비롯한 대학운영의 틀이 국제적인 형태로 바뀌는 상황에 주목하는 고등교육 국제화 이론(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이다. Knight(1995)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이 “교육(teaching), 연구(research), 서비스 기능을 다국가·다문화 차원과 통합시켜 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교육기관의 활동(activity), 능력(competency), 정신(ethos), 절차(process) 등에서 다국가 간, 다문화 간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려는 대학 당국의 결정이 강조된다.¹⁾ 실제로 이러한 교육의 국제화, 특별히 대학 캠퍼스의 국제화는,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려는 대학 주체의 전략적 대응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 사회를 예로 들어본다면 1980년대 말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유입을 시작으로,²⁾ 1990년 이후 가시화된 국제결혼의 증가, 한국 기업의

1) Knight, Jane, and Hans de Wit,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Historical and Conceptual Perspectives,” Hans de Wit, ed.,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msterdam: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1995).

세계시장 진출 등으로 다민족, 다인종 인구가 유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학 캠퍼스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전국의 대학들에 중국 유학생을 필두로 한 다국적 학생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위한 교육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런 캠퍼스의 국제화가 학교의 재정과 위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학교의 핵심 기능으로 강조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대학별로 ‘국제화’를 중요한 운영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늘어났고, 대학의 평가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외국인 교수 채용, 영어 강의 개설,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와 배려 등이 대학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것도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둘째는 대학보다는 사회 자체의 통합에 주목하는 고전적인 사회통합이론(Theory of Social Integration)이 있다. 사회통합이론은 공동체적 삶이 가능한 통합 기반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³⁾ 통합의 단위는 조직일 수도 있고 작은 지역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집단, 문화집단, 지역집단, 계층집단들이 어떻게 공존하고 통합하는가가 핵심적 과제다. 중요한 제도들, 예컨대 종교, 기업, 학교 등의 역할도 이런 관점에서 분석되는데 특히 다문화적 요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치나 문화, 제도의 형성을 중시하게 된다. 전형적인 다문화, 다종족 사회인 미국에서 ‘멜팅 팟(melting pot)’ 기능이 강조되고 대학에서 소수자들을 위해 입학과 강좌의 배려를 제도화했던 것은 그런 맥락이었다. 이후 멜팅 팟이 사실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샐러드 볼(salad bowl)’ 모델이 그 대안으로 강조되었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개개인들을 보호하고 통합시켜야

2) 설동훈,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역사와 미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엮음, 『노동인력의 세계화』(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pp.225~248.

3) Blau, Peter M., “A Theory of Social Integr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5, no. 6 (1960), pp.545~556.

한다는 기본적 관심은 유사하다.⁴⁾ 한국의 사례에서 보면 1990년대 이래 한국의 다문화화가 진행되면서 학교나 언론 등에 새로운 역할이 기대되었다. 정부는 다문화 교육과 다종족적 가치를 교육 정책에 새로이 추가했고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단일민족적 가치, 민족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특별히 중시하는 정책이나 움직임이 체계적으로 부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⁵⁾

세 번째로는 대학 자체가 보편적 이념을 지향하는 사회 내 독자적인 공동체임을 특별히 주목하는 관점이 있다. 근대 이후 대학이 국가의 주요 기구로 간주되고 국민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단적 기능이 중시되긴 했지만 본래 대학이 표방하는 지식, 진리, 가치, 기술 등은 전 인류 차원의 보편성을 지닌 것이다. 국가의 정치적 압력이나 시장의 경제적 유인이 대학의 가치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위 '상아탑 정신'이 자리 잡은 것도 대학 제도의 이런 독자성, 보편성, 고유성을 강화시켰다. 미시적으로 학교공동체 이론은 학교라는 제도가 공동체적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Lounsbury와 DeNeui(1996), Sergiovanni(1994), Gail Fruman(2002) 등은 산업화, 정보화에 따라 지역이나 국가에 기반을 둔 공동체 의식은 약화될 수 있지만 학교 단위의 공동체 의식은 독자적으로 정립 가능하고 나아가 이를 촉진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⁶⁾ 특히 학교 구성

4) Deborah E. S. Frable, "Gender, Racial, Ethnic, Sexual, and Class Ident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8 (1997), pp.139-162.

5) 박미희·홍백의,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사회학연구』 제20권 3호(2010), pp.27-50; 김미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 농어촌특별전형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1권 5호(2014), pp.269-302.

6) Anthony S. Bryk, Valerie E. Lee and Peter B. Holland, *Catholic Schools and the Common Goo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원 내부의 ‘공동체 의식(a sense of community)’은 일반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독특한 공동체 의식, 정체성, 통합력이 형성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에서도 대학은 사회 일반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제도나 공동체로 인식된 측면이 강하다. 한국의 대학 설립 초기, 대학은 보편적 문명, 서구적 가치, 근대적 과학기술을 담지하는 조직으로 간주되었기에 민족주의자들은 대학설립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 서구화, 과학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민간의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억제했다. 서양 선교사들은 교육 기능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와 문명의 요소가 한국 사회 내에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내면화될 것을 기대했다. 각각의 관점은 다르지만 대학이 독자적인 문명과 정신의 담지체로서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했던 것이다. 한국의 대학 공동체와 관련하여 류승아(2014)는 McMillan & Chavis(1986)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⁷⁾ 즉,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 욕구 충족,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학교공동체 의식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여, 대학 공동체 의식이 개인과 사회의 안녕에 영향력을 미침을 주장하였다.⁸⁾ 김범규·주철안(2006)은 한국 학교공동체의 독특한 개념 요인을 정리하였는데, 연대, 헌신, 이해·존중, 소속감, 다양성, 협력, 책임, 평등, 배려의 가치들이 학교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였다.⁹⁾

연변과기대는 이 세 차원에서 모두 접근해볼 수 있다. 1980년대 말 이래 연변 지역을 비롯한 동북아의 거대한 변화와 이 대학의 역사는 뿔 수

7) David W. McMillan and Davi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1986), pp.6~23.

8) 류승아,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촉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8권 2호, pp.43~60.

9) 김범규·주철안, "학교공동체의 개념적 요인 탐색," 『지방교육경영』 제11권 (2006), pp.1~20.

없이 연결되어 있다.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대학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시기에 따라, 또 보는 관점에 따라 사회의 변화가 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대학의 독자성이 더 부각되기도 했다. 연변과 기대 20여 년은 급변하는 국제화의 격랑 속에서 국제 캠퍼스, 독특한 개성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학 제도가 어떻게 스스로의 보편성을 지키면서 다문화 상황에 대처하고, 또 현지 사회의 거대한 흐름에 적응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역동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특별히 교육행위를 계획하고 제도화하는 주체로서 학교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회-대학 연계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대과학기술대학의 공식적 문헌과 홈페이지 자료, 언론을 통해 전해진 대학의 활동, 또 부분적으로는 필자들이 현지에서 관찰 및 인터뷰한 바를 종합하여 작성된 것이다.

Ⅲ. 시대적 물결과 세 주체의 결합

1. 시대적 조건: 탈냉전과 세계화

연대과학기술대학은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구에 있는 중외합작대학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소수민족 특별지역구인데, 1991년 중국 최초로 중국 대학과 외부 교육기관이 협력한 중외합작 교육기관으로서 연대과학기술대학의 건립을 결정했다. 연변과기대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전지구적 탈냉전과 세계화, 그와 맞물린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동구권의 해체가 가시화하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선언되며 세계가 하나의 단위로 연결되리라는

예측이 붓물 터지듯 쏟아지던 시대적 상황이 없었더라면 연변과기대의 설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 특히 연변이 위치한 동북3성과 남북한 접경지대는 1990년대 이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탈냉전, 개방화, 세계화의 격랑이 기존 사회에 미친 영향력의 규모나 깊이에서 이 지역을 능가할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1980년대 말까지 중국 내의 인구가동은 크지 않았고 동북3성은 조선족이 다수 거주하는 조선족 자치지구였다. 냉전 하에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다. 남한과 북한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일본의 재일조선인,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 사이에도 상호작용이나 연계가 거의 없었다. 1980년대까지 이 지역은 국가 권력과 국경,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그어놓은 선에 의해 단절되어 있던 곳이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탈냉전, 세계화가 중국의 본격적 개혁개방과 이어지면서 이 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¹⁰⁾ 불과 30년이 되지 않는 시기에 연변을 비롯한 동북3성의 모습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변했다. 우선 연변을 포함한 조선족자치구역에도 대규모의 변화가 나타났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오던 조선족 자치단위, 농업 중심의 마을공동체는 급속히 해체되었다. 연변자치주가 설립된 1950년대 총인구의 50% 이상을 점했던 조선족의 비율은 현재 약 36%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졌고, 이 지역을 오가는 한국인 및 외국인의 숫자는 증가하였다.¹¹⁾ 지방의 조그만 공항에 불과했던 연길공항은 여름 기간 하루 수십 차례 국제선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국제공항으로 변모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대남·대북 관계 역시 변화

10) 이재하·김석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역성 변화에 관한 세계체제론적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4호(2007), pp.461~475.

11) 위의 글, pp.461~575; “中 연변자치주 조선족 인구 계속 감소…비율은 상승,” 『연합뉴스』, 2015년 3월 10일.

하였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비롯한 경제난이 장기화되자 전통적인 북·중 간 교류·협력은 약화된 반면, 중국과 한국의 교류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이동의 양상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많은 조선족이 중국 내 타지로 이동하는 대신 한국으로 이동했다. 또한 한국인들이 연변으로 진출하여 여러 형태의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¹²⁾ 이러한 추세는 중국 정부 차원의 동북3성 개발 계획과 맞물리게 되면서 연변지역의 국제화, 개방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¹³⁾

이런 변화의 시기, 남북한 관계 역시 호전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1991년 기본합의서에 조인했고 유엔에 동시가입을 결정했다. 또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이 약속되기도 했다.¹⁴⁾ 민간 차원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등 북한의 혹독한 경제난을 계기로 탈북자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들을 도우려는 민족주의적 동포애가 조성되며 연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공식적이지는 않으나 북한 주민, 조선족 사회, 그리고 남한 주민 사이의 다양한 연계가 나타나기도 했고, 물자와 정보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교류되기 시작하였다.¹⁵⁾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뒤이은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가 확대되면서 이 지역은 남북

12) 김화선, “조선족 농민의 비농화와 국제이주: 연길시 M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제36집(2012), pp.149~186;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집 5호(2006), pp.258~298.

13) 권오국, “중국의 대북 접경지역 개발전략이 갖는 지정학적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3권 1호(2011), pp.229~69; 이충배·박선영, “중국 동북3성 기점 국제복합운송루트 개발과 발전 방안,” 제23집 4호(2007), pp.91~114.

14) 황지환,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한반도 리더십 변수의 재검토,” 『국제관계연구』 제18권 1호(2013), pp.39~65.

15) 박형중,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개념과 원칙,”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2호(2011), pp.3~9.

한을 잇는 실질적인 교두보로서 성장하였다. 지구화의 긍정적 효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커지던 시기에 연변과기대가 출범한 것이다.

2. ‘중외합작’이라는 메커니즘

연변과기대는 중외합작대학(中外合作大學)이다. 행정적으로 ‘중외합작’이라고 표방되는 이 설립 메커니즘은 국제화하는 시대 상황을 활용하는 동시에, 또한 적극 대처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여기서 ‘외(外)’라는 말은 외국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 외국인, 외국 기술과 같은 다양한 외부 행위자를 포괄한다. 이 ‘중외합작’이라는 메커니즘을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외부인은 중국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얻고, 중국은 외부의 자원과 기술, 인력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삼았다.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에 대하여 정리한 구자역 외(2012)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외합작대학 추진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 중국 개혁개방에 따른 내부적 환경의 변화, 2) 중국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시장화 및 시장개방에 따른 내부 사회의 경제화 및 국제화, 3) 중국 정부의 국제사회 진입, 4) 중국 정부의 교육 자원 확충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대내외 상황에 따른 중국의 중외합작 교류는 역사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1978년부터 1981년의 ‘회복단계’로서, 1967년부터 10년 동안 지속된 문화혁명 때문에 빚어진 교육 체계 단절의 극복 및 대학입시 제도의 회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해외 국비유학생 파견을 확대하는 등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해외 유명 학자를 초빙하는 등 외국 교육 자원의 유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중국

¹⁶⁾ 구자역 외,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6(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내 대학과 해외 대학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배경을 마련하였다. 둘째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의 ‘발전단계’로서, 중외합작학교의 운영을 시작하여 중외합작교육의 시발점이 된 시기이다. 이후 2001년부터는 ‘심화단계’로서,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 교류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룬 시기라고 평가된다. 특별히 2003년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를 통해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합작 대학 상호간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한다.¹⁷⁾

중국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공식자료에 따라 주요 도시와 각 성(城)별 중외합작기관 및 프로그램의 개수를 정량적으로 살펴보면, 합작대학 2곳과 프로그램 39개를 보유한 지린성의 합작현황은 평균 정도라 볼 수 있다. 연대과학기술대학이 연변대학과 계약한 합작년도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공식적으로 기록된 중국 교육부에 나타난 중외합작기구 53개 중 최초의 중외합작대학으로 볼 수 있다.¹⁸⁾ 연대과학기술대학은 1988년 연길시 정부가 현재 연대과학기술대학의 총장인 김진경 총장을 대신하여 학교 설립 투자 계획서를 연변주 당위와 주 정부에 제출하고, 연길시 정부와 김진경 총장 개인이 중국연변조선족 기술전문대학 설립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이 확정되었다. 1990년 2년제 중국연변조선족 기술전문대학을 4년제 기술대학으로 변경하고, 1991년 중국 지린성인민정부 및 중국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직업기술학교 개설을 각각 비준 받는다.¹⁹⁾ 1992년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개칭되었으나, 1996년 연변대학에 병합되며 현재의 연대과학기술대학으로 최종 개칭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연

17) 위의 책, pp.32~34.

18) 합작년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몇몇 대학은 제외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중외합작관학(中外合作辦學), “教育部予以資格認定的中外合作辦學單位: 延邊大學科學技術學院”(2015); <<http://www.crs.jsj.edu.cn/index.php/default/approval/detail/389>>.

19) 연대과학기술대학, “연혁,” (2012); <http://www.yust.edu/ysm/kr/static_state/history>.

변과학기술대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약어의 경우 연변과기대로 통용된다. 다른 합작대학이 대부분 2000년대 이후 합작을 추진한 사실을 고려할 때, 연변과기대의 설립은 중국 교육 당국이 초창기 실험적으로 고등교육 국제화를 추진한 대표적인 선례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교육기관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초보 단계에서 추진했던 중국 정부가 연변과기대의 설립을 통해 많은 제도를 구비한 다음, 이를 선례로 하여 이후 중외합작대학을 지속적으로 설립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세 주체의 합류

시대적 환경이 긍정적이라 해도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는 주체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연변과기대의 설립을 가능케 한 데에는 다음 세 주체가 협력적으로 결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탈냉전과 함께 전 지구에 산재해 있던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부각되고, 이들 사이의 연결망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비전을 지닌 주체가 등장했다. 20세기 한반도 역사의 애환과 맞물려 있는 각 지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탈냉전의 환경에서 비로소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찾고, 고향을 방문하며, 새로운 생활 기회를 찾을 가능성을 보았다. 1990년대 이후 러시아 고려인과 중국 조선족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되었고, 일본의 재일조선인,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 사이에 소통과 연계가 강화되었다. 낡은 민족감정과는 구별되지만 뿌리와 고향, 조국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등장하고 정체성에 대한 갈망이 분출했던 것도 이 시기이다. 연대과학기술대학의 설립을 추동한 김진경 총장은 스스로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런 꿈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또한 그는 다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서와 기대가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연변과기대의 설립 당시 조선족의 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민족대학을 표방하였고, 이에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한국과 재미한인 사회에서부터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음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⁰⁾

둘째로는 중국 정부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탈냉전의 시점에서 고등교육 국제화와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추진했다. 연변과기대는 중국이 외국대학과 합작을 추진함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기술 수용 및 학문 현대화 의지가 담겨있었다. 연대과학기술대학의 제도적 위치 및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교육 당국의 중외합작대학 제도 설립의 추진 역사와 배경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혁명이 종료되고 교육기관의 회복과 발전을 추진한 중국 정부는 낙후된 교육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중외합작 교육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소규모 학술교류 프로그램부터 시작한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는 현재 중국 내 외국 학술기관과 연계하여 설립된 합작대학으로는 총 50여 곳,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850여 개를 보유한 대형 프로젝트로 성장하였다.²¹⁾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해외합작대학을 설립한 지역은 상하이(上海)시이며 이곳에 총 9곳이 설립되어 있다. 합작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170개 프로그램을 설립한 헤이룽장(黑龍江)성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변과기대가 위치한 지린성의 경우, 경영학과 정보과학을 중심으로 한 지린-램톤대학

20) 허련순, 『사랑주의』(서울: 흥성사, 2012); 『연합뉴스』, 1993년 9월 9일; 『연합뉴스』, 1994년 2월 28일.

21) 중국인민공화국 교육부 중외합작관학(中外合作辦學), “학부 중외합작기구 및 프로그램(本科中外合作辦學機構與項目[含內地與港台地區合作辦學機構與項目名單]” (2015); (<http://www.crs.jsj.edu.cn/index.php/default/approval/orglists/2>).

(吉林大學萊姆頓學院)과 공학 및 과학기술, 경영학을 포함한 연대과학기술대학까지 2곳의 중외합작대학이 존재한다.

셋째로 중국 조선족 사회의 주도적인 변신의지가 또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은 중국 내의 거대한 인구 이동을 초래했고,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동반했다. 전형적인 농촌 사회의 모습을 지녔던 조선족 자치주는 이 거대한 변화를 거치면서 외부 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게 되었다. 연변의 조선족 공동체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해체에 가까울 정도의 변화를 겪었는데 다수의 청년들은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전역의 도시로, 또 많은 조선족이 한국의 노동시장으로 진출했다. 연변과기대가 조선족의 자기발전, 국제화된 인재양성을 표방하면서 설립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조선족 공동체의 변신의지, 발전을 향한 열망이 담겨있었다.

이런 주체적 조건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세 개의 서로 다른 꿈이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회한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과 민족 통합의 계기를 찾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중국 정부의 관점에서는 외부의 자본과 기술, 정보와 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개혁개방의 동력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었다. 그리고 연변자치주 조선족에게는 연변 지역의 발전, 조선족 공동체의 국제화, 특히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한 제도 창출의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이 세 주체의 꿈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연변과기대라는 독특한 대학이 출현할 수 있었다.

IV. 설립비전의 구체화와 전략의 수립

1. 제도화의 과정

1989년 공식적인 설립준비를 시작하여 개교, 교명 변경 등의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갖추어지기까지 연변과기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다. 연변과기대의 대내외 조직구성과 변화를 고려하면, 연변과기대의 역사는 크게 설립기, 정착기, 발전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설립기는 1989년에서 1996년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연변과기대가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 및 교육 당국과 설립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학부 교육 체계를 정비하며, 연변대학에 편입되어 현재 연변과기대의 체계를 정비한 시기라 볼 수 있다. 1988년 김진경 총장은 대외문화교류중심을 통해 학교 설립 의향서를 검토 받은 후, 주 당위원과 주 정부에 제출하였다.²²⁾ 이를 통해 1989년 2월 4일, 연길시 정부가 갑(甲), 김진경 총장이 을(乙)로서 합작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연길시 정부는 학교 부지 제공, 도로, 전기, 수도 등의 건설을 담당하였고, 김진경 총장이 학교 건축비 및 학교 운영비 등 재무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도록 규정하였다. 학교 수업 언어는 한국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고,²³⁾

22) 연대과학기술대학, 『대학요람 2011-2012』(연길: 연대과학기술대학, 2011); 허련순, 『사랑주의』, pp.141~147.

23) 연변과기대의 조선어/한국어의 표기와 관련하여, 한국어(韓國語)와 조선어(朝鮮語)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다. 학과 역시 조선어과(朝鮮語系)가 아닌 한국어과(韓國語系)로 표기된다. 延邊大學科學技術學院, 『大學要覽 2010-2011』(延吉: 延邊大學科學技術學院, 2010); 서정섭, “중국 연변 조선어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16권(2005), pp.205~230 참조.

중국어와 영어를 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설립 비준 허가서는 종합대학이 아닌 기술학교 설립 비준 허가서로서 1991년 최종 취득하였고, 그 다음 연변자치주 정부를 거쳐 지린성 정부의 허가를 받아 1992년 ‘직업기술학교’에서 ‘과학대학’으로 개칭된다.

이러한 문서상의 절차 외에 실제 캠퍼스의 건축은 1989년 중국 연길시 정부와 기술전문대학 설립 계약을 체결한 직후 본부동과 학사동이 착공되며 시작되었다.²⁴⁾ 이후 대학 식당과 기숙사동의 건축을 착공하고, 1992-93년 사이에 대학 내 주요 건물의 건축이 완성되었다. 건축 완성 직후 1993년 연변과기대 4년제 본과(本科) 및 2년제 전과(專科)가 정식 개교하였다. 이 설립 시기, 설립 자금 대부분은 한국과 미국 등지의 모금 활동을 통해 후원금 형식으로 지원되었는데, 한국의 학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대학 설립 추진 위원회 및 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를 통해 이사회가 선출되어 자금을 관리하였다.²⁵⁾ 설립 과정에서 볼 수 있듯, 한국과 미국의 인적·물적 자원이 많이 투입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연변조선족 기술대학의 재단 설립 및 법원 등기는 미국에서 이행된 반면, 중국 연변조선족 기술대학 후원회의 승인은 한국 외무부에서 사단법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립에 필요한 주요 외적 기반 자원, 토지, 수도, 전기 등은 중국 정부에서 제공받았고, 학교 설립 내부 기반시설은 해외 자원을 통해서 구성되었다.

초기 상학부와 공학부 2개 학부 내 대외경제무역학과, 경영정보관리학과, 전자전산학과, 기계공학과, 석유화학공학과 5개 학과로 설립된 연변과기대는 첨단 과학기술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어 설립되었다.²⁶⁾ 4년제 정규대학과는 별도로 산하에 2년제 전문대학과정으로 실용영어학과와

24) 연대과학기술대학, “연혁” (2012); <http://www.yust.edu/ysm/kr/static_state/history>.

25) 『연합뉴스』, 1993년 9월 8일; 허련순, 『사랑주의』, pp.155-203.

26) 『연합뉴스』, 1993년 9월 8일.

실용무역학과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이후 4년제 대학 내로 통합되었다. 초기 연대과학기술대학은 국내의 동포들의 성금으로 설립되었음을 강조하고, 중국 내 조선족자치주에 설립된 해외민족대학이라는 특성이 크게 부각되었다.²⁷⁾ 한국, 미국, 중국 내의 다양한 대학교와 교류협력을 체결한 연변과기대는 1996년 최종적으로 연변대학에 편입되며 ‘연대과학기술대학’으로서 현재의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연변과기대는 종합대학인 연변대학교 내 하나의 학원(學院: 단과대학)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다음으로 제2기 발전기는 1997-2004년의 시기에 해당한다. 1996년에 연변대학 내 한 학원의 지위를 갖게 되었지만 대내외적으로 연변과기대는 독자적인 정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했다. 1997년 4년제 본과 1회 졸업식이 거행되고, 중국 정부에서 임명한 리주석(李柱石) 원장이 부임하며 연변과기대는 보다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중국 측에서 파견한 원장이나 부원장, 당서기 등은 주로 2~3년을 주기로 사임하거나 부임하였는데, 1997년에 임명된 리주석 원장은 2002년까지 약 6년간 재임함으로써 대학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대외협작을 통한 교육기관의 설립이 가속화된 2000년 전후의 시기를 고려하면, 당시 국가 전반적으로 외부 교육 체계에 우호적이었던 사회분위기 역시 연변과기대의 안정적인 발전과 양적 팽창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연변대학과도 협력적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 한국어과가 신설된 이래, 기계설계제조 및 자동화, 간호학, 독일어, 통신공정학과 등이 신설되며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한 학과가 개설됨에 따라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또한 이화생활과학연구소, 등소평연구소 등 학부 외 연구소가 설립되며 연

27) 『연합뉴스』, 1993년 9월 9일; 『동아일보』, 1993년 1월 27일; 『매일경제』, 1991년 10월 31일.

구기반시설도 확충된다. 이렇게 기관이 확장되자 적극적인 해외 교수초빙이 다양한 국가에서 가속화되어 교직원 역시 대폭 증가하게 된다. 학생 기숙사와 교직원 기숙사가 다수 신설되고, 교직원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보살필 수 있는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는 등 학교 내 교직원의 생활편의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학교공동체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²⁸⁾

한편 2005년도 이후 정착기로 설명할 수 있다. 2005년도 이후 연변과기대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국제적 학술 교류를 증진하고 정기적인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며 보다 국제적인 특성을 강화하였다. 2004년부터 매년 유스트 국제 심포지엄(YUST International Symposium)이 개최되었고 국제적 학술 행사를 통해 학술적 연결망을 강화했다. 또 심포지엄을 통해 수집된 논문을 바탕으로 2012년 국제 학술지를 창간하며 국제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다.²⁹⁾ 국제 학술 교류의 경우 중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몽골, 캄보디아, 가나, 독일, 프랑스 등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다양한 대륙 내의 교육 기관과 함께 학술 교류 협정을 맺었다.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해외 자매결연 기관은 총 24곳 남짓인데, 이 중 19개 기관이 2005년 이후에 교류협력을 체결하였다. 2007년 연변과기대는 중국 교육부에 의해 중외합작기구로서 재비준을 받고 중외합작관학 허가증을 받게 됨에 따라, 중국 내 가장 오래된 중외합작대학의 위상을 지켰다. 초기 40명 정원의 학생으로 시작하였던 연변과기대는 2005년 이후 매년 400명 정도의 신입생이 등록하는 연변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2012년 개교 20주년을 맞았던 연변과기대는 현재 학부 9개, 학과 14개, 연구소 40여 개를 보유한 학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졸업생 5천여 명을 배출하였고, 현재 천 8백여 명

²⁸⁾ 연대과학기술대학, 『대학요람 2011-2012』(연길: 연대과학기술대학, 2011).

²⁹⁾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 Engineering and Management"; <<http://www.ijgreen.org>>.

의 학생들이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다.³⁰⁾

2. 캠퍼스의 전략: 국제화, 민족성, 통합 공동체의 추구

연변과기대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율적 대학공동체로서 성장하고 또 주변에서 인정받기 위해 독자적인 정체성을 강조했다. 이는 연변과기대만의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다른 대학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조된 연변과기대의 독자적 특성으로 국제성, 민족성, 통합적 공동체성을 들 수 있다.

첫째는 국제적 특성이다. 연변과기대는 설립 초기부터 캠퍼스의 국제화를 강조했다. 설립 당시부터 교수진, 사용 언어, 교육방식이 모두 국제적임을 강조하였다. 10여 개 국가에서 초빙된 다양한 국적의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학교의 공식 언어 역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가지였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러한 연변과기대의 특성은 주로 학교 홍보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나는데, 캠퍼스의 가장 대표적 특성으로 연변과기대가 세계화 발판이 될 수 있는 국제적 캠퍼스라는 점을 홍보한다. 홈페이지에 서술된 학교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이런 국제화 전략을 잘 보여준다.

“세계화의 발판: ... 세계 13개국에서 3백여 명의 우수한 교직원 ... 학생들 역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고에서 유학 음에 따라 다국적 성격 ...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본교는 중국어와 영어, 한국어 등 3개 국어를 캠퍼스의 공용언어로 사용...”³¹⁾

30) 연대과학기술대학, “주요현황: 재학생 현황”; (http://www.yust.edu/ysm/kr/static_state/status).

연변과기대는 개교 당시부터 이러한 국제적 특성이 학생들의 취업 현실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교 당시 학교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끝난 4년제 정규대학의 첫 신입생 선발과 관련, 모집 정원 2백 명에 모두 652명이 지원, 평균 약 3.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대외경제무역학과와 의 경우 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다”면서 “산업기술훈련학교 졸업생들도 국내 회사에 취직했거나 해외 취업 확정, 또는 상급 학교 진학 등으로 전원 취업했다”고 강조했다.³²⁾ 이러한 학교의 국제성과 실무성은 보도자료, 책자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이런 국제성은 중국의 대부분 대학이 문화혁명의 여파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낙후해 있던 시기에 특히 유효하고 두드러진 것이었다.³³⁾

두 번째로 연변과기대가 활용한 전략은 조선족을 위한 민족대학을 표방하는 것이었다. 연변과기대는 설립 당시부터 조선족을 위한 민족대학의 건립임을 언급하였다. 개교 당시 학장은 인사말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은 뜻있는 우리 국민과 해외교포들의 성금으로 해외에 세워진 최초의 민족대학”이라고 강조하고 “본 대학의 설립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조선족 교포들의 교육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그리고 한중 우호협력 증진과 남북관계 개선 등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³⁴⁾ 연변이 조선족자치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민족대학이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은 보다 확장된 것이었다. 이는 단지 연변의 조선족

31) 연대과학기술대학. “학교특색” (2012); (http://www.yust.edu/ysm/kr/static_state/specific).

32) 『연합뉴스』, 1993년 9월 8일.

33) 『동아일보』, 1997년 7월 3일; 『연변일보』, 2012년 9월 14일; 지역주민 문답, 2014년 7월 15일.

34) 『연합뉴스』, 1993년 9월 9일; 허련순, 『사랑주의』.

을 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한중 우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었다. 또한 동일한 차원에서 전 세계에 퍼져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의 연결망을 자산화하는 데에도 민족이라는 상징은 적극 활용되었다. 실제로 연변과기대는 대부분의 설립 자본과 교육 과정, 인적 구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외국인 교수진 역시 외국 국적을 보유한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적이 다양한 디아스포라 코리안의 존재는 흥미롭게도 국제성과 민족성이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어 언어 능력의 강조로도 이어졌는데, 협력 기관인 연변대학의 경우 수업 내 조선어 사용이 10% 미만인 데에 비하여 연변과기대는 전 수업 과정의 50% 이상이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이는 연변과기대가 민족성을 숨기거나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학의 독자적인 정체성으로 강조하였으며, 그것이 이 대학의 적극적인 전략이었음을 감지하게 해 준다. 또한 조선족 소수민족 대학으로서 중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연변대학의 조선족 학생 비율이 40%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³⁵⁾ 70% 이상의 조선족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은 학생 구성에서도 비교적 뚜렷한 조선족 중심의 대학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셋째로 연변과기대가 강조한 바는 캠퍼스 내 통합적 공동체의 형성이었다. 연변과기대는 다른 어느 대학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 구성원 간의 협력과 통합을 강조했다. 총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인 캠퍼스 내에서 생활하고 학생들과 함께 기숙하면서 전인격적 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찍이 큰 관심을 끌었다. 연변과기대가 고등교육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학교의 중요한 특성으로 ‘사랑을 실현’하는 ‘통합적 캠퍼스(campus integrity)’를 강조한다는 사실은 특이하다고 할 만하다. 연변과기대의 주

35) 『동아일보』, 2013년 1월 15일.

요 이념 중의 하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³⁶⁾ 이러한 점은 학교 상징물인 본관 앞 ‘사랑주의(Love-ism)’ 기념비나 캠퍼스 내의 모든 건물을 이어주는 1.4킬로미터의 학교 대표적 상징물인 ‘연결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성원들 간 차별 철폐, 정직, 포용, 섬김, 협력, 봉사 등의 가치를 홍보·지도하고, 캠퍼스 통합운동(Campus Integrity Movement)의 전개를 통해 정직하고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장려함으로써, 학생, 학생과 교수, 교수 간의 통합과 교류를 보다 강조하였다.³⁷⁾

이러한 부분은 비단 학교차원의 형식적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인 교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속에서도 나타났다. 연변과기대는 전통적으로 교수와 제자 간 친밀한 관계가 특징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는데, 교수들이 학생들을 자택으로 빈번히 초대하여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³⁸⁾ 대학이 스스로 ‘진리의 전당’이라든지 ‘인격적 교육’을 내세우는 경우는 많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칙이나 정관에 이런 명분을 건립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요소가 대학의 핵심운영원리로 정착하는 경우는 드물다. 연변과기대는 인격주의라고 할 정도로 긴밀한 교수-학생 관계를 추구하였다. 주로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이는데도 이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데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다양한 국적의 교수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입국하였기 때문에 연변과기대 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이러한 환경 역시 서로 간에 밀접한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교 초기 연변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참아가며 학교를 건축하고 학생들

36) 허련순, 『사랑주의』.

37) 연대과학기술대학, “특색”; <http://www.yust.edu/ysm/kr/static_state/specific>.

38) 교직원 인터뷰(익명1), 2014년 7월 24일; 학생 문답(익명), 2014년 7월 10일.

을 가르치고, 해외의 후원자와 조력자들을 찾아 나선 교직원의 헌신성은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런 교직원의 헌신을 동반한 공동체 정신의 강조는 대학이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물질적 유인이나 설비의 우수성 못지않은 독자적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1〉 본관 앞 기념비석 및 연결동



V. 비전의 현재와 미래: 긴장 쟁점들

건립 20여 년이 경과한 연변과기대는 학교 내외의 여러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설립 초기 누렸던 연변과기대의 독특한 비교우위 및 장점들이 지금은 중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성과 민족성을 결합하며 독자적인 대학의 공동체성을 구축하려던 전략이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또한 내부에서는 민족대학으로서 학생의 90% 이상이 조선족이었던 건립 초기에 비해, 최근 조선족 입학비율이 50% 수준까지 감소할 정도로 학생 구성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캠퍼스 문화와 교육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점차 조선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 표명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시점에서 연변과기대가 지니고 있던 비전과 특성과 관련하여 긴장을 일으키는 쟁점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국제성 · 민족성의 독자적 가치 약화

그간 중국 내 연변과기대의 상징적 요소이자 비교우위의 핵심은 국제성에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 및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결망에서는 조선족을 위한 민족 중심의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설립 초기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이 두 성격이 큰 장점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도 국제성과 민족성은 연변과기대의 주요한 특성으로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연변과기대가 향유했던 비교우위는 현저하게 약화되

있고 다른 대학 및 기관들과도 국제성과 민족성을 두고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설립 당시와 학교 안팎의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성을 뒷받침해오던 교수진의 다양성도 대학의 국제성을 담보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연변과기대의 교수진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부임한 다양한 국적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제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국제성은 교수진의 다양성 못지않게 학과의 다양성, 학생의 다양성, 교육 과정의 다양성을 포괄하며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종합적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³⁹⁾ 1990년대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었고 ‘국제성’을 담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 사회가 급격히 개방되고 여타 대학의 국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교수의 다국적 배경이 주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학생들의 교환 방문, 다양한 해외 경험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더 중시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영어, 한국어, 중국어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장점만으로 캠퍼스의 국제적 특성의 우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서로 다른 언어의 사용이 국제적 언어 감각을 높이는 한편으로, 각 언어 집단 간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단점도 있다.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언어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한국계 교수들은 친밀한 교류나 적극적인 토론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상도 존재하였다.⁴⁰⁾ 이에 따라 연변과기대를 국제적 캠퍼스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지

39) 김진영, “국제 대학 순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0), pp.1~26.

40) “[교수회의를 할 때는 학부장이 한국 사람일 경우에는 한국어로 하구요. 그 다음에 옆에서 중국 사람들에게는 통역을 해줘요. 전달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 폐회식하고 회의하고 할 때는, 말 많이 안 해요. 가까이, 언어가 되는 사람들끼리 좀 적절히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닌 교직원도 존재했다.⁴¹⁾

민족성에 대한 강조 역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선족을 중시하는 정책은 학내 한족 학생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⁴²⁾ 또한 연변 자체의 민족 구성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연변대학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인정받기도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민족 중심적 관점에서 높은 비율의 조선족 학생을 보유하고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연변과기대의 정체성은 학생유치와 재원 확보에 중요한 자원이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해도 ‘한국어 강좌’가 연변과기대 뿐만 아니라 연변 지역 전반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함께 조선족 학생들의 한국어 구사능력 저하와 중국인 학생의 증대로 인해 학내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중국어 사용의 압력은 커지고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교수진의 사명감도 남북관계의 교착 상황과 조선족과의 관계 설정에 놓인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변과기대의 민족적 관심을 통해 재정적 후원과 정서적 지원을 이끌어오던 방식도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민족담론이 드러내는 정치적 합의 때문에 전과 같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종래 연변과기대의 독보적인 정체성이자 장점이었던 국제성과 민족성의 조합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상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앉을 때도 그렇게 따로따로 앉아서, 한국어권 중국어권. 앉아서.” 교직원 인터뷰(익명2) (2014년 7월 24일).

41) “인터내셔널이라고 하기에는 한국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 더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 [학부들만을 볼 때 … 인터내셔널 스쿨(international school)이라고 발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직원 인터뷰(익명3) (2014년 7월 24일).

42) “우리 조선족 래원(來源)이 줄어드니깐, 한족 학생을 받아들여야 되니깐, 한족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 우리는 중국 내에 있는 한국 특성화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교직원 인터뷰(익명4) (2014년 7월 18일).

2. 통합적 공동체 형성의 분화적 쟁점

연변과기대의 특성으로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을 인격적으로 결속시키는 독특한 공동체성이 있음은 이미 앞서 논한 바 있다. 이 부분은 지금도 헌신적인 교직원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지닌 학생들에게서 다수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 단위의 공동체성 역시 여러 변화와 분화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째, 학생들이 친밀한 관계보다 개인적인 자율성과 개성, 자기만의 활동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대학공동체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격적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설립 당시 연변 사회에서 찾기 어려웠던 각종 매체와 정보, 활동 기회들이 급증하였고,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과 조선족의 경제력 향상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 및 교수 의존도가 설립 초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졌으며,⁴³⁾ 이에 따라 대학 조직 및 교직원 주도적으로 형성되었던 인격적이며 긴밀한 공동체적 성격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조선족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정보화와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커졌고, 개인의 성취동기나 개성 추구를 강조한다.

다른 대학에서 보기 어려운 인격적 공동체성이 연변과기대에서 가능했던 배후에는 30년 가까이 지속된 교직원의 헌신과 학생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상황 속에서 향후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하다. 교수의 일방적 사명감과 윤리적 헌신성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특유의 인격적 공동체를 지속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구성과 관심, 태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이들을 포괄하고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전략 및 공동체적 비전이 필요하다.

43) 이성일, “조선족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논총』 제7권 1호(2014), pp.89~112 참조.

이와 함께, 통합적 대학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들이 다소 학생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생 간의 교류와 화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변 과기대는 수업 내외에서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형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⁴⁴⁾ 현지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교수들은 학생들과 일대일 면담, 식사 초대 등을 통하여 사제 간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서로 다른 학생들 간 우호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행사되는 공동체적 통합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공동체적 특성을 교직원 집단의 차원에서 살펴볼 때, 적지 않은 분화와 단절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교 설립 초기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교직원 간의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여러 모임과 행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데에 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노력은 점차 약화되며 소원해진 모습을 보였다.⁴⁵⁾ 특히 교직원 집단 간 부분적인 접촉 단절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단절 현상은 서로 다른 문화 차이 속에서 각 언어나 문화권 별로 학내 여러 개의 독자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에 따라 기능을 분리하여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개별 집단주의적 의견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⁴⁶⁾

44) 연대과학기술대학, 『대학요람 2011-2012』; 연대과학기술대학, 『대학요람 2007-2008』; (http://www.yust.edu/ysm/kr/campus_manual).

45) “[교직원 친목도모 모임으로] 체육대회도 있어요, 야유회라든가. 1년에 한번씩. 가을엔 체육대회, 봄에는 야유회. 요새는 인원이 줄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꼬박꼬박 갔어요.” 교직원 인터뷰(익명5) (2014년 7월 18일).

46) “저희 학부에서만, 다른 학부 교직원들이랑 교제를 거의 안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안에서만 친교 하고... 저희는 다른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냥 저희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학부에서] 관여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직원 인터뷰(익명3) (2014년 7월 24일).

3. 자율성 문제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는 연변과기대의 운영과 관련한 자율성 문제다. 애초 ‘중외합작대학’으로 설립되었고 연변대학의 한 ‘단과대학’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대학이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대학의 교육 기능과 행정 기능은 엄밀하게 나뉘어져 있고 행정 부문은 외국인이 담당하지 않고 대부분 중국인이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권한이 주도적으로 행사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1〉 교직원 구성과 역할

교직원 구분	기관	담당업무	인원	합계
외국인	대학	교학	184	235
		행정	26	
	부설	교학	21	
		행정	4	
중국인	대학	교학	23	152
		행정	126	
합계				387

출처: 연대과학기술대학; <http://www.yust.edu/ysm/kr/static_state/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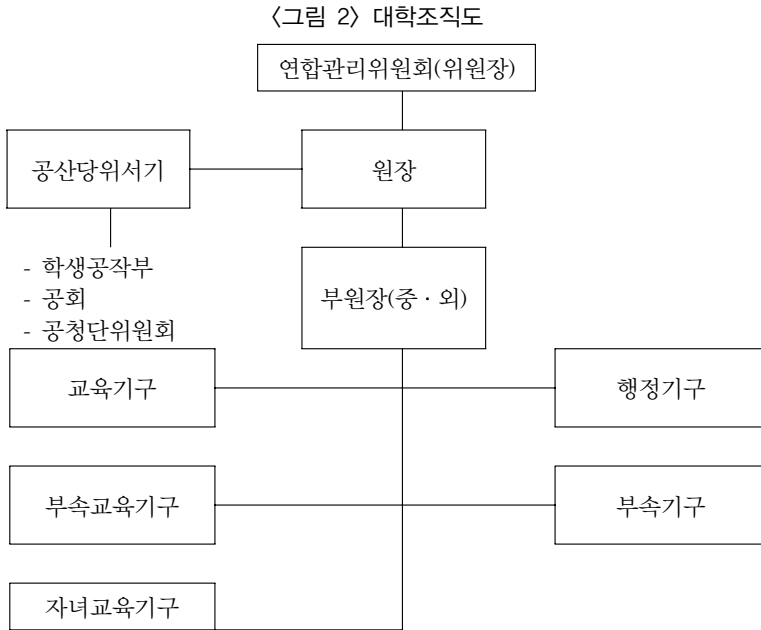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보듯 외국인의 경우 수업을 담당하는 교학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재무나 회계, 교육 당국과의 공문 협조 등 일반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부문은 중국인 교직원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자국의 업무 처리 방식에 익숙한 현지인들 중심으로 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해외에서 유입된 지적 자원으로서 외국인 교수들이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이원 체계는 일견 합리적인 분업이라 할 만하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서 각자의

특화된 능력에 따라 업무 체계를 조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최대화시킨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에 따른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대학 행정 업무와 관련된 대학의 독자적 자율성은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조직은 세부적으로 연합관리위원회, 원장, 공산당서기(학생공작부, 공회, 공청단위원회), 부원장(중방, 외방), 교육기구, 행정기구, 부속교육기구, 부속기구, 자녀교육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관리위원회는 대학의 최상위 기구로서 주요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구성원을 임용, 선임할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원장·부원장의 초빙 및 해임, 매년 사업 계획 비준, 예산·결산 심사, 행정관리기구 조직 결정, 교직원 편제 및 임금 결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학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는 합작대학의 두 당사자인 연변대학과 연변과기대의 대표 교직원단이 함께 참여하는데, 최고 진행자인 주임 직분은 ‘을’, 즉 연변과기대에서, 부주임은 ‘갑’인 연변대학에서 지정된 자들이 맡아 회의를 주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⁴⁷⁾ 연변대학 및 정부와 연계하여 주요 사안의 행정을 결정하는 학내 최고 행정관리자는 원장이라고 볼 수 있다. 원장 직계 산하에 위치하는 공산당위 서기는 학생공작부, 공회, 공청단위원회와 같은 학내 공산당 단위를 지도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정치적 사상 및 행위를 총괄한다. 이들 직위의 경우 중국 당 정부의 임명을 통해 부여되기 때문에, 학교의 또 다른 구성주체로서 총장을 비롯한 교수진들은 이들에 대한 결정 권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연변과기대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 자체의 정책적 특성으로, 합작학교의 구조 속에서도 중국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을 담보하기

47) 연대과학기술대학, “연대과학기술대학 학교운영 정관”; <<http://www.yust.edu/ysm/board/bbs/lists/tid/2/bid/12/>>.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⁴⁸⁾



출처: 연대과학기술대학, 『대학요람 2011-2012』; (http://www.yust.edu/ysm/kr/campus_manual).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안은 학생 모집이다. 연변과기대의 학생 모집은 제도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고 연변대학 전체의 입학생 선발에 연동되어 있다. 즉 연변대학이 ‘총교(總校)’로서 학생 선발의 책임을 담당하고 학생들 역시 연변대학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자신이 원하는 단과대학을 1, 2지망으로 선택한다. 연변대학의 단과대학 위치를 점하고 있는 연변과기대 역시 이런 절차를 통해 학생을

⁴⁸⁾ 이영환·임재진, “합작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16권 3호(2014), pp.121~148.

선발하게 된다.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연변대학과의 ‘협력’이라는 틀이 외부의 제약이나 준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합관리위원회의 경우, 연변대학에서 파견된 연변과기대 원장이 연합관리위원회 주재권을 소유하는 데 반해,⁴⁹⁾ 최종결정권은 한국계 미국인인 총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학내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교적 동등한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연계되는 최고 의사 전달 과정은 연변대학에 일임함에 따라, 보다 상위 기관에 대한 교류 협력에서는 외국인의 접촉이 일정 정도 제한되고 있었다. 이런 자율성의 문제는 법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VI. 결론

연변과기대는 동북아의 탈냉전,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대학이다. 이 대학은 설립 당시부터 국경과 민족, 이념과 정치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창출해내는 데에 기여할 비전을 표방했다. 전지구의 코리안 연결망 구축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이들의 기대와 희망을 대학의 비전과 특성으로 결합시켰다. 전 교직원이 인격공동체라 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대화와 소통,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면모도 크게 주목을 끌었다. 최근 평양과기대까지 설립·운영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가히 ‘원대한 실험’이라고 불러도 좋을, 흥미롭고도 소중한 시도였다.

⁴⁹⁾ 연대과학기술대학, 『연대과학기술대학 규정집』(연길: 연대과학기술대학, 2012).

연변과기대는 중외합작대학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 자율성과 독립성에 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교육과 운영 면에서 그 독립성을 인정받고는 있으나 동시에 연변대학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만 정부 당국과 소통할 수 있으며, ‘중방(中方)’과 ‘외방(外方)’이 병존하는 형태이다. 전체적으로는 구성원들이 하나의 대학공동체로서 뚜렷한 자의식을 지니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공동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층위에서 적지 않은 차이도 생겨나고 있다. 언어를 달리하는 구성원이 함께 활동하게 될 때에는 다국적, 다문화적 감수성이 자라나고 통합의 기회가 나타나는 동시에 소통의 제한으로 인한 정서적 친밀감의 약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음도 발견되었다. 이렇게 복합적이고도 분절적인 층위들은 향후 대학 단위의 공동체성이나 통합이 논의될 때에 대학 구성원 내부의 분화, 집단별 또는 개인별 편차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화가 전면적 현상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제성과 민족성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 대학의 고유한 가치를 고수하는 전략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의 문제는 현재 연변과기대가 직면한 중대한 쟁점이다. 외부 환경이 점점 더 국제화될수록 국제성에 대한 대학 내부 구성원과 외부의 평가 사이에 인식과 기대의 편차가 커질 수 있다. 공동체 의식과 관련해서도 동질적 가치의 공유 이외에 구성원들의 다원적인 기대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성의 정의(definition)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교수진의 다국적 배경이나 다중언어의 사용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교과목과 강의 내용, 학술 활동 등에서 다문화적인 요소를 더욱 수용하는 것도 요구될 것이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배경과 희망들이 20여 년의 시간 동안 분절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과 인적 연결망을 어떻게 지속해 갈 것인가도 극복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 연변과기대는 “연변에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하면서 연변과기대의 민족적·국제적 코드를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협력, 교류와 통일의 영역으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⁵⁰⁾ 연변과기대가 21세기 미래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과 문화의 허브로 작용할 수 있다면 분명 ‘국제적 민족대학’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목표를 자임하는 것만으로는 고유한 위상이 확보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연변과기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연변과기대가 독자적인 특징으로 강조해 온 국제성과 민족성의 결합,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이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상황에 부응하여 이를 재창조하고 재구성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성은 언제나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며,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혁신이 동반되어야 지속 가능하다.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 동북아의 인적, 물적, 문화적 이동과 소통의 현장 가운데서 민족성과 국제성을 창의적으로 결합하고 대학 공동체의 독자적 정체성을 지켜가는 데 성공한다면, 연변과기대는 단순히 국제적 민족대학이라는 모델의 구축에 그치지 않고 민족적 가치와 다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포용하면서 동아시아 및 남북한 평화와 공생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중요한 지적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2015년 5월 7일 / 심사 : 2015년 5월 22일 / 게재확정: 2015년 5월 22일

50) 보도에 의하면 김진경 총장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은 불가피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 연변과기대를 기반으로 삼아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이런 협동의 양질을 한층 높이며 동아시아에 있는 고등교육기구들 간에 다차원 협력과 소통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뉴시스』, 2014년 8월 1일자.

【참고문헌】

국문·일문 단행본

- 구자익·박영진·안병환.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6.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권태환 편저.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박명규·김병로·김수암·송영훈·양운철. 『노스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 아사쿠라 도시오·오타 심페이 역음. 『한민족 해외동포의 현주소』. 서울: 학연문화사, 2012.
- 윤인진.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허련순. 『사랑주의』. 서울: 흥성사, 2012.

국문 논문

- 권오국. “중국의 대북 접경지역 개발전략이 갖는 지정학적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3권 제1호(2011), pp.229~269.
- 김광선·정종대. “KOICA 지원 ‘르완다 국립대학 ICT 공학부 건립’ 소개.” 『공학교육연구』 제20권 4호(2013), pp.34~39.
- 김미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 농어촌특별전형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5호(2014), pp.269~302.
- 김범규·주철안. “학교공동체의 개념적 요인 탐색.” 『지방교육경영』 제11권(2006), pp.1~20.
- 김진영. “국제 대학 순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0), pp.1~26.
- 김태현. 『한국 문화산업 국제경쟁력 연구(韓國文化産業國際競爭力研究)』. 지린대학교 박사논문, 2012.
- 김화선. “조선족 농민의 비농화와 국제이주: 연길시 M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제36집(2012), pp.149~186.
- 류승아. “대학공동체 의식이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촉진 방안.” 『사회 및 성격』 제28권 3호(2014), pp.43~60.

- 박명규. “북경의 조선족-심층면접자료의 분석.” 권태환 편저.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박미희·홍백의.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사학회연구』 제20권 제3호(2010), pp.27~50.
- 박종문. “탈북민의 재입북에 대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제11호 (2013), pp.39~59.
- 박형중.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개념과 원칙.”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2호 (2011), pp.3~9.
- 서정섭. “중국 엔벤 조선어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16권(2005), pp.205~230.
- 설동훈.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역사와 미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엮음. 『노동인력의 세계화』.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pp.225~248.
- 설동훈.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공의료정책특론 특강. 2011년 10월 12일.
- 이성일. “조선족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논총』 제7권 제1호(2014), pp.89~112.
- 이영환·임재진. “합작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15권 3호(2014), pp.121~148.
- 이재하·김석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역성 변화에 관한 세계체제론적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제4호(2007), pp.461~475.
- 이충배·박선영. “중국 동북3성 기점 국제복합운송루트 개발과 발전 방안.” 제23집 제4호(2007), pp.91~114.
-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집 5호(2006), pp.258~298.
- 최경봉. “중국 내 조선·한국학의 특성과 위상.” 『국어국문학』 155호(2010), pp.103~131.
- 최상덕.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주요 연구 및 사업 추진방향.” 『교육개발』 제37권 4호(2010), pp.27~31.
- 황지환.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한반도 리더십 변수의 재검토.” 『국제관계연구』 제18권 1호(2013), pp.39~65.

외국어 단행본

- Bryk, S. Anthony, Valerie E. Lee and Peter B. Holland. *Catholic Schools and the Common Goo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de Wit, Hans.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urope*. Westport, Conn. ; London : Greenwood Press, 2002.
- Sergiovanni, T.J.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4.

영문 논문

- de Wit, Hans. "Reconsidering the Concept of Internationalizatio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vol. 70 (Winter 2013), pp.6~7.
- Frale, Deborah E. S. "Gender, Racial, Ethnic, Sexual, and Class Ident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8 (1997), pp.139~162.
- Blau, Peter M. "A Theory of Social Integr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5, no. 6 (1960), pp.545~556.
- Gail Furman. "Postmodernism and Community in School: Unrabeling the Paradox," Gail Furman ed. *School as Community: From Promise to Practi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2.
- Knight, Jane, and Hans de Wit.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Historical and Conceptual Perspectives."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ed. Hans de Wit. Amsterdam: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1995.
- Knight, Jane.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ane Knight and Hans de Wit, eds.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in Asia Pacific Countries*, Amsterdam: EAIE/IDP, 1997.
- Knight, Jane. "An internationalization Model: Reponding to New Realities and Challenges." Hans de Wit, Isabel Christina Jaramillo, Jocelyne Gacel-Ávila, and Jane Knight eds.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The International Dimension*. Washington, DC: World Bank, 1~38, 2005.
- Lounsbury, J. W., and D. DeNeui. "Collegiat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Relation to Size of College/University and Extrovers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4 (1996), pp.381~394.
- Mayor, Federico. "Culture and the University." *Higher Education in Europe*. vol. 1, no. 5 (1989), pp.5~13.
- McMillan, David W. and Davi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1986), pp.6~23.

權香淑 『移動する朝鮮族: 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自己統治』. 東京: 彩流社, 2011.

신문 기사

“[박식] 中國조선족高校長회의 후세교육 母國지원요청.” 『연합뉴스』. 1994년 2월 28일.

“[엔벤] 조선족자치주 60년 졸업생 전세계 진출…개교 20년만에 ‘엔벤의 자랑.’” 『국민일보』. 2012년 9월 7일.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 ‘우리대학에 동아시아 공동센터 만들자.’” 『뉴스스』. 2014년 8월 1일.

“연변과기대 졸업생 백98명 첫 배출.” 『동아일보』. 1997년 7월 3일.

“延邊에 朝鮮族 기술대학 세운다.” 『매일경제』. 1991년 10월 31일.

“延邊과학기술대학, 9일 정식 開校, 국내외 동포성금으로 설립.” 『연합뉴스』. 1993년 9월 9일.

“延邊과학기술대학, 9일 정식 개교, 韓國語로 강의.” 『연합뉴스』. 1993년 9월 8일.

“在美교포—中國 합작 延邊에 大學 세운다.” 『동아일보』. 1993년 1월 27일.

“中 엔벤자치주 조선족 인구 계속 감소…비율은 상승.” 『연합뉴스』. 2005년 3월 10일.

“한국 속의 중국인 ‘레인보 차이나’: 3. 진화하는 국내 조선족.” 『동아일보』. 2013년 1월 15일.

인터넷 자료

중국인민공화국 교육부 중외합작관학(中外合作辦學). “教育部予以資格認定的中外合作辦學單位” (2015); <<http://www.crs.jsj.edu.cn/index.php/default/approval/detail/389#>>.

중국인민공화국 교육부 중외합작관학(中外合作辦學). “학부 중외합작기구 및 프로그램(本科中外合作辦學機構與項目[含內地與港台地區合作辦學機構與項目]名單)” (2015); <<http://www.crs.jsj.edu.cn/index.php/default/approval/orglists/2>>.

연대과학기술대학 홈페이지; <<http://www.yust.edu/>>.

IJGEM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 Engineering and Management); <<http://www.ijgreen.org>>.

기타 자료

延邊大學科學技術學院. 『大學要覽 2010-2011』. 延吉: 延邊大學科學技術學院.

연대과학기술대학. 『연대과학기술대학 규정집』. 연길: 연대과학기술대학, 2012.

교직원 인터뷰(익명1). 2014년 7월 18일. 연변과기대.

교직원 인터뷰(익명2). 2014년 7월 18일. 연변과기대.

교직원 인터뷰(익명3). 2014년 7월 22일. 연변과기대.

교직원 인터뷰(익명4). 2014년 7월 24일. 연변과기대.

교직원 인터뷰(익명5). 2014년 7월 24일. 연변과기대.

교직원 인터뷰(익명6). 2014년 7월 24일. 연변과기대.

The Vision and Reality of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Focusing on Its International, Ethnic-oriented, and
Community-integrated Characteristics

Park, Myoung-Kyu · Lim, Sujin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UST) has realized its distinctive vision as an “international ethnic university” in the era of post-Cold War and globalization. As substantiating its vision over 20 years of history, this university has shaped its educational system for its vision, and maintained its identity under social changes and globalization. This article shows how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enabled this university to be founded, and in this process how its vision was shaped in terms of the Korean diaspora,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Korean-Chinese community. Further, it analyzes how three characteristics of YUST - international, ethnic-oriented, and community-integrated -, as its visions for th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this university, have been altered in the sudden changes of both Chinese society and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Under these chang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university, its international and ethnic-oriented visions have now started to be gradually weakened, which consequently resulted in the disinteg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university community members. Nevertheless, if YUST overcomes the current challenges, it will be able to be the epochal and leading model of an ethnic commun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Key words: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UST), college community, internationalization, Korean Chinese, community integration

박명규(Park, Myoung-Kyu) _____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개념의 번역과 창조』(공저)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공저) 등이 있다.

임수진(Lim, Sujin) _____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석사학위 논문은 “A Study of the WTO’s Impact on China’s Social Policies in Relation to the Social Welfare Model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이다.

재일조선인 담론에 나타난 ‘기민(棄民)의식’을 넘어서

: ‘정치적 주체성’을 생각하다 *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국문요약

조선적의 다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으로 전환했고, 최근에는 조선총련 내부에서도 북한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대두했다. 조선적을 이탈한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에 국가적으로 귀속되기를 거부하며 조선적의 역사적 정체성과 민족적 주체의를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은 재일동포의 국적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관하면서, 특히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귀속의식과 기민(棄民)의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조명한다.

조선적을 유지하는 재일조선인은 한국이 반복의식을 철회하고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민족통일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정치의식의 전파를 막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정부는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한국 방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조선적을 ‘남도 북도 아닌 무국적자’로 인식하며 조선적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북한과의 역사적 흔적을 소거시키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필자는 먼저 조선적의 정치성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선행시키며, 나아가 ‘남과 북, 일본’에 관련한 정치적 문제를 균형 있게 성찰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귀속의식, 기민의식, 정치적 주체성, 조선적 재일조선인, 여행증명서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4S1A5B8066696).

1. 재일동포의 '기민(棄民)' 담론과 엇갈린 '반한' 표상

일본 내 소수민족으로 거주하는 재일동포의 역사가 벌써 100년을 넘겼다. 그 후손이 4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 삶의 변화는 복잡다단하다. 다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한반도와 일본에 걸친 이념적·국가적 대립, 그리고 탈냉전과 세계화의 역사적 변동에 직접 노출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국적의 이동은 1945년 이후 재일동포의 삶에 나타난 굴곡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이다.

일본의 패전으로 재일동포는 일제히 '일본국민'에서 '조선적'의 외국인 신분으로 변했고,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조건에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국적 선택의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들의 국적 표기는 가족 단위 또는 개인 단위에서 2회 이상 변경된 경우도 적지 않다.¹⁾ 국적의 이동 양상은 시대의 동향에 따른 재일동포의 생활과 정치의식, 민족의식과 조국 관념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나타낸다. 특히 귀속의식과 기민(棄民, 버려진 백성)의식의 엇갈린 표상은 재일동포의 생활사와 운동사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나아가 한반도의 분단 및 그 극복을 위해 풀어야 할 정치적 쟁점과 시대적 과제까지 내포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재일지식인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2000년대에 조선적 재일조선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스스로를 분단 조국과 일본에게서 '버려진 백성'으로 표상하는 재일

1) 국적 변경의 사례는 다양하다. 조선→일본→한국, 반대로 조선→한국→일본의 변화가 대표적이다. 또한 조선적이 모국방문을 위해 한국 국적을 취했다가 다시 조선적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조선적과 결혼한 일본/한국 국적 여성이 조선적으로 변경했다가, 시대 변화 속에서 가족 단위로 국적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 세계화 이후에 가족 세대 간 국적 구성이 다양해진 경우도 적지 않다. 혈통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국적법에서 20세까지의 국적은 부모를 따르고, 성인의 이중국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조선인 담론도 확산되었다. 탈냉전 이후 분쟁 지역과 난민이 늘어난 세계적 상황에서, 마침 북한을 탈출하는 기아 난민의 행렬도 이어졌다. 그 중에는 북송사업으로 이주했던 재일조선인의 후손도 있었다.²⁾ 그러나 한국 사회에 소개된 재일조선인의 기민, 난민 담론은 탈북 난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한국의 기민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조선적 재일조선인 중에는 탈북자를 “조국과 가족을 버린 파렴치한” 또는 “미국의 대북인권 압박정책에 놀아나는 민족 배반자”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³⁾ 세계적인 탈냉전과 글로벌리즘의 영향으로 재일조선인의 조국에 대한 귀속의식이 약화하고 조선총련의 대중적 기반이 붕괴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냉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적과 재일조선인의 운동사 담론에서는 반미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활동하는 주체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⁴⁾

그렇다고 기민 표상과 디아스포라 담론이 단순히 냉전적 갈등구조 속에서 엇갈리고 충돌하는 것만은 아니다. 누가 누구에게 발화하는가의 맥

2) 필자는 2007년 8월 초 중국 출장 중 연변에서 재일동포의 후손인 20대 초반의 탈북 청년을 만났다. 부모가 사망한 후 할머니가 “너라도 꼭 일본으로 가라”고 했으며, 고모가 뚝토리현에 산다고 했다. “일본 대사관으로 찾아가라. 일본에서 법적으로 수용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지만, “중국 공안이 지키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일본에 가서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한 필자는 일본에 돌아간 후 그 청년에게 연락했지만 두절되었다.

3) 2000년대에 일본에 체류했던 필자가 당시에 접한 재일조선인들의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재일동포 이영화(간사이대학 교수)씨가 탈북자를 위해 만든 단체 ‘구출하자 북한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도 겹쳤다.

4) ‘대한제국’의 정치적 자주성을 부인한 일본은 식민지 시기 이래 ‘조선’이라는 민족, 지역명을 관용적으로 써왔다. 이 글의 용어 ‘재일조선인’은 조선적뿐 아니라, 한국 국적이어도 스스로 ‘조선인’을 민족명으로 채택하고 1970년대부터 일본어 공공영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재일조선인 담론의 생산에 적극 가담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락에 따라 기민 담론이 내포하는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지고, 기민 표상 속에서도 ‘적대적 공존’이 일어난다. 가령, 북송가족의 일본 귀환을 염원하는 재일동포는 북한과 조선총련, 그리고 일본의 기민정책을 비판한다.⁵⁾ 한편, 『만화 혐한류』의 저자인 야마노 샨린이 2006년에 펴낸 『재일의 지도: 대한기(棄)민국 이야기』라는 책의 제목은 한국에서 버려진 재일동포들이 일본 전국에 흩어져 산다고 말한다.⁶⁾ 야마노는 재일동포의 기민 담론을 역이용하여 일본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반한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혐한류 담론과 재일조선인 담론이 서로 적대적 전선을 형성하면서 공교롭게 한국의 ‘기민정책’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글은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귀속의식과 기민의식에 대해 고찰한다. 조선적의 다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으로 전환했고, 최근에는 조선총련 내부에서도 북한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대두했다. 또한, 조선적을 이탈한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에 국가적으로 귀속되기를 거부하며 스스로에게 민족적 주체의식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은 재일동포의 국적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관하면서, 특히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귀속의식과 기민의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조명할 것이다.

조선적을 유지하는 재일조선인 중에는 한국이 반복의식을 철회하고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민족통일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정치의식의 전파를 막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정부

5) ‘북송사업(일본에서는 ‘귀국사업’으로 칭함)’은 ‘북한과 조선총련의 사기극’으로 비판되면서도, 생활고를 피해 ‘인민의 낙원’을 망상했던 동포들의 판단 문제나 동포들에게 고단했던 당대 일본의 상황, 그리고 인도주의를 앞세워 재일조선인을 방출하려던 일본 정부와 언론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더불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어 소개는 통일부 공식 블로그 “화려한 허상,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의 비극”; (<<http://blog.unikorea.go.kr/4850>> (검색일: 2015.4.10) 참조.

6) 山野車輪, 『在日の地圖: 大韓棄民國物語』(東京: 海王社, 2006).

는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한국 방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했다. 그러자,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기민정책을 비판하는 여론도 고조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주목하면서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기민의식과 정치의식에 대해서 재고해 볼 것이다.

II. 재일동포의 국적과 귀속의식의 변화

한반도에서 태어나면 좋은 싫든 국적이 선천적으로 부여되지만, 해방 직후부터 재일동포는 일본국민에서 외국인(조선적)으로 변경됐고,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조선적)이거나 대한민국의 해외국민(한국 국적), 또는 일본인(귀화자)으로 호명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기반이 붕괴하고 조선적 소지자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부터 조선적을 ‘북한국적’과 ‘무국적’으로 구별하는 논리도 등장했다.

일본의 주권 회복 및 한반도의 국가 수립 이전인 1947년, 일본에 잔류하기로 결정한 재일동포들은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조선’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쳤다. 이들 조선적은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되었고, 동시에 북한에서도 해외공민으로 간주되었다.⁷⁾ 그러나 1948년 이후, 조선적을 대표하던 좌/우파의 정치단체가 각각 북한과 남한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조선적의 귀속의식도 분열되었다. 좌파운동이 활발했던 전후 혼란기부터, 조선적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북한과 일본이 정식 수교를 맺지 않았기

7) 정인섭,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1호(2014), p.18.

에 조선적이 북한국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으며, 조선적 소지자가 모두 조선총련의 열성적 활동가에 포섭된 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조선총련은 북한의 해외공관으로서 조선학교를 통해 귀속의식을 키우고 ‘정치적 일꾼’을 양성했으며, 산하의 청년 및 부녀조직을 운영하여 조선적을 망라하는 자치단체로 활동했다.⁸⁾

외국인 국적란의 ‘한국’ 표기는 1950년 민단(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1994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개칭)의 요청으로 승인되었지만, 일본은 국적란 표기에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선’과 ‘한국’(대한민국)을 모두 국적 표기로 승인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1951년 한일회담 예비회담을 추진하면서부터 한국 정부는 조선적의 국적표기를 한국으로 바꿀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국적란의 ‘한국’ 표기는 일본에 대한 국가적 위상의 제고 및 남북한 체제 경쟁의 실질적 성과로 간주되었을 터이다. 그러나 1952년 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도, ‘조선’이 지역명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그 표기를 인정한다는 논리로 일관했다.⁹⁾ 조선총련과 일본의 좌파세력이 한국 표기를 절대 수락하지도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부정하고서 ‘조선’ 호칭을 관습적으로 사용했던 일본의 국가적 입장에서도 ‘조선’ 표기를 폐기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1950년대에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독도 영유를 추진한 한국과 북송사업을 승인한 일본의 한일관계가 북일

8) 일본公安調査廳의 조사(公安調査廳, 『朝鮮總連を中心とした在日朝鮮人に關する統計便覽 昭和56年版』, 1982)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의 조선총련 산하의 대중조직에서 활동하는 동포는 20만 명 정도로, 민단의 6~7만 명을 압도하고 있었다.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東京: 岩波新書, 2015), p.138.

9) “외국인 등록상의 국적란의 ‘한국’ 또는 ‘조선’의 기재에 관하여”(일본법무성, 1965.10.26), 한영구·윤덕민 공편저,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1(1965년~1979년)』(서울: 오름, 2003), p.82. 국적 표기 문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조경희, “남북분단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통일인문학』 제58집(2014년 6월), pp.260~265 참조.

관계보다 원만치 못했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조선’ 표기는 일본과 북한의 공통된 이해를 반영한 표기였다.

일률적으로 부여받은 조선적에서부터 일본이나 한국 국적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1952년 이후 미미하게 꾸준히 존재했다. 그러다가 한국 국적자에게 ‘협정영주권’이 부여된 1965년부터 협정영주권 신청 기간에 한국 국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조선적이 한국 국적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먼저 일본의 외국인 등록제도에서 조선적을 말소시켜야 했다.¹⁰⁾ 조선적이 형식적으로 출신지역을 나타내는 임시 기호였기에 이러한 규정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북한과 조선총련에게는 조선적이 실질적으로 ‘북한 국적’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저항도 격렬했다.

드디어 1969년 통계에서부터 한국 국적(309,637)이 조선적(297,678)을 넘어서고 1970년대에는 한국 국적이 40만에 이른다.¹¹⁾ 이를 두고 조선총련은 민단의 강제병합이라며 마찰을 빚기도 하고, 국적표기를 조선으로 다시 변경하자는 국적 서환(書換)운동도 펼쳤다.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의 일본 지방자치체에서 조선총련의 요구를 허용하는 사례도 있었다.¹²⁾ 하지만 협정영주권자에게는 ‘교육, 생활보호 및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조선총련에 포섭되지 않은 조선적의 이탈 현상은 급격히 증가했다. 생활보호제도는 전후에 줄곧 일본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지만, 취직차별을 겪고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조선적에게 국민건강보험은

10) 그러나 일본의 외국인 등록제도는 2012년에 폐기되었다. 현재, 외국인은 재류 카드를 작성하며 ‘주민기본대장’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다.

11) 이광규, 『在日韓國人: 生活實態를 中心으로』(서울: 일조각, 1983), p.88. 한국 국적 취득자는 1963~64년에 12,790명, 1964~65년에 16,049명이 증가하고, 1965년부터 2년간에는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의 영향으로 각각 9,190명과 13,650명으로 증가 추세가 감소하다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연평균 2만 명을 상회했다.

12) 민단과 조선총련의 대립 양상과 조선총련의 국적바꿔쓰기 운동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여론에 대해서는 金英達, 『日朝國交樹立と在日朝鮮人の國籍』(東京: 明石書店, 1992), pp.69~77.

유리한 선택 사항이었다. 조선적의 인구는 1959년부터 실시된 북송사업 만으로도 9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조선적이 또다시 급감한 것은 1994년 김일성 사후부터 2006년 무렵까지다.¹³⁾ 일본의 외국인 통계에서는 '한국·조선'을 함께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적의 정확한 인구는 알 수 없지만, 현재 3만에서 6만까지로 회자된다. 한편, 재일한국인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한국 국적과 조선적이 동시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¹⁴⁾ 일본 총무성의 외국인 통계를 보면 2007년부터 재일한국·조선인(593,489명)을 제치고, 재일중국인(조선족 포함 606,889명)이 최다수 외국인으로 등장한다. 2014년 6월 현재 '한국·조선'의 합계는 508,561명이다. 반면, 일본 국적의 취득은 귀화 조건이 완화된 1991년 이후 매년 1만 명 가까이 증가하여, 귀화자의 누적 수는 2013년 현재 35만 명에 이르렀다.¹⁵⁾ 일본 귀화

13) 민단의 일본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단과 재일동포의 통계> 중에서 '3. 귀화자 수'는 1950년 이후 매년 수천 명씩 발생했고, '10. 민단 단원과 국민등록자 수'는 2004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조선적에서 이탈하는 인구의 증가폭을 추측할 수 있다. <<http://www.mindan.org/shokai/toukei.html>> (검색일: 2015.3.1).

14) 아래 표는 유혁수,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제12호 (2015년 2월)의 <표 1>을 참조하여 만들었다.

<표 1> 재일한국·조선인 인구 추이(2006년 이후 감소 추세)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2
한국조선	598,219	593,489	589,239	578,495	565,989	545,401	530,046	519,740
특별영주자	438,974	426,207	416,309	405,571	395,234	385,232	377,350	369,249
기타	159,245	167,282	172,930	172,924	170,755	160,169	152,696	150,491

출처: 일본총무성의 외국인 통계

15) 민단을 중심으로 일본거주를 비롯한 법적 지위의 안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지속되었으며, 1981년 일본이 '난민조약'을 비준하면서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조선적과 재일동포 후손 및 밀항자의 정주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다. 1989년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개정으로 1991년부터 과거에 제국일본의 국민이었던 재일한국·조선인과 그 후손들에게 특별영주권이 부여되고, 귀

의 증가는 일본이라는 생활공간에서 다문화공생 정책, 고령화에 따른 특별영주자의 자연사, 한반도 요인, 후속 세대의 ‘조국 지향성’ 쇠퇴 및 귀속의식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한반도 요인으로서,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정세불안, 한국의 병역의무 회피, 통일담론의 영향력 상실 등을 들 수 있다.¹⁶⁾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통일조국’으로의 귀환 담론이 명분을 발휘했고, 탈냉전 이후 ‘원 코리아’ 운동이 실제로 활발해졌다. 그러나 통일이 강조된 만큼이나 각각의 귀속의식은 여전히 분열된 상태였다. 다만,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은 서로의 민족의식을 경쟁적으로 공유했기에 그러한 대립도 가능했다. 남북의 대결과 일본과의 갈등이 겹쳐지는 중층적 대립구도 하에서 일본 귀화자는 오랫동안 주체성 상실자로 소외되었고, 일본과 동포사회의 강력한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다.¹⁷⁾ 조선적에서 한국 국적으로의 변경이 급증한 오늘날에도 귀화를 배척하는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과 4세 이후가 등장하는 세대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다수자 사회로의 동화를 오랜 역사적 공존 과정에서 일

화조건도 완화되었다.

- 16) 거꾸로 한국은 2011년 3.11 대지진과 같은 일본의 위기 상황을 탈출할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본 ‘탈출’은 생활공동체에 대한 ‘배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주자들의 이동은 적었지만, 한국 여권을 소지했다면 직접적인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대응력이 높아진다.
- 17) 초등학교 시절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된 양정명(梁政明, 山村政明)은 1967년 와세다대학 입학 후 신좌익계 당파와 대립한 일본공산당의 청년조직에 관여한다. 그는 일본조선연구소에 입회를 요청하나 ‘귀화한 배신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양정명은 당파를 비판하고 국적 문제를 고뇌한 유서를 남기고 1970년 10월에 분신자살한다. 山村政明, 『いのち燃えつきるとも』(東京: 大和書房, 1971). 1980년대 이양지(李良枝)의 소설은 귀화한 일본인의 고민에서 출발해서 그 정체성 혼란의 극복 과정을 보여준다.

어나는 문화적 혼종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수용하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3세·4세에게 일본은 '모국'의 생활공간이며, 그들은 '일본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모색한다. 2000년대 이후 일본 국적의 재일동포들은 스스로 시민적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다문화, 다민족화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표명한다.¹⁸⁾ 2012년 이후에 '재일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배외주의적 현상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지만, 일본 사회의 기조는 1990년대 이후 소수자와 함께 다문화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분위기로 변했다.¹⁹⁾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에 일본 국적을 제외시켰던 재일조선인 담론에서도, 일본 귀화를 포함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일본에 정착하게 된' 모든 동포를 '재일조선인'으로 재규정하게 된 것이다.²⁰⁾

-
- 18) '탈자이니치'론으로 한국 출신의 뉴커머 언론인 池東旭이 쓴 『在日をやめなさい — 70萬人の優秀なマイノリティに告ぐ!』(東京: ザマサダ, 1997)가 있고, 스스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고 정체성 정치를 펼치는 鄭大均, 『在日韓國人の終焉』(東京: 文藝春秋, 2001)이 있다. 관련 논문은 Hester, Jeffrey T. "Datsu zainichi-ron: An Emerging Discourse on Belonging among Ethnic Koreans in Japan." Nelson H. H. Graburn, John Ertl and R. Kenji Tierney ed., *Multiculturalism in the New Japan: Crossing the Boundaries Within* (New York: Berghahn Books, 2008), pp.139~150.
- 19) 다문화 공존 정책이 결과적으로 일본 사회에 동화되는 것으로 귀결되며, 다문화 안의 문화적 서열을 배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Chris C. Burgess, "Multicultural Japan? Discourse and the Myth of Homogeneity." *The Asia Pacific Journal: Japan Focus* (2007); <<http://www.japanfocus.org/-Chris-Burgess/2389>> (검색일: 2015.3.31). 일본 국적 취득을 민족적 동화로 간주하는 논리는 민족성의 역사적 변화 자체를 은폐할 우려가 있다. 실제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를 밑도는 일본에서 다수자 문화가 지배하는 현상은 불가피하지만, 소수자 문화의 단순한 소멸이 아닌 문화적 혼종의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인 인구 통계는 2014년 총인구 1억 2727만 명 중 162만 명. 총무성 통계국, "人口推計," 2014년 5월 20일; <<http://www.stat.go.jp/data/jinsui/pdf/201405.pdf>> (검색일: 2014.6.1).
- 20) 1975년 박경식(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その生活・運動研究序說," 『季刊三里』, 第1號 (1975年 春), p.194에서는 재일조선인에서 일본 국적을 제외시

Ⅲ. 정치적 독자성을 추구하는 조선적

이제 조선적의 ‘국적서환’ 운동은 다시 볼 수 없지만, 한국 국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선적을 말소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저항감은 재일조선인 3세에게서도 발견된다. 조경희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에 한국 유학이나 한국인과의 결혼을 위해 조선적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웬지 모를 ‘죄의식’과 ‘소외감’, 자신이 변한 것 같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한다.²¹⁾ 조선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조선적과 스스로의 정체성을 일치시켜 왔지만,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조선적’을 말소시키는 행정적 과정에서 ‘정치적 굴종’이나 ‘사상적 변절’을 강요당한 것과 같은 굴욕감마저 느끼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 정부의 국민화 정책에 위화감을 느끼며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과 정치적 독자성을 강조하는 재일조선인 담론에서는 북한의 국적법(1963년 제정)이 외국 귀화를 북한 국적의 상실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²²⁾ 북한의 국적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던 조선적과 그 자녀로서 그 국적을 방기

켰지만, 1997년 서경식은 재일조선인의 범주에서 국적을 문제 삼지 않고, 식민지 기원을 강조했다. 徐京植, “‘에스닉·마이노리티’가 ‘네이션’가”, 『歴史學研究』 増刊號(1997년 10월). 한국어 논문은 서경식, “재일조선인이 나아가갈 길: ‘에스닉 마이노리티’인가 ‘네이션’인가,” 『창작과 비평』 제102호(1998년 겨울), p.353.

21) 조경희, “탈냉전기 재일조선인의 한국 이동과 경제 정치,” 『사회와 역사』, 통권 제91호(2011년 가을), pp.71-73.

22) 조경희, “남북분단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p.261.

하지 않은 자”를 자국의 공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적은 자동적으로 북한의 해외공민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 일부 개정된 북한의 국적법에서는 외국의 공민 또는 무국적 상태에서 북한의 외교, 영사기관에 문서로 등록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제8조). 다만, 혼인, 이혼, 입양, 파양의 경우에는 국적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제11조), 과거 북한 국적을 가졌던 자의 국적 회복을 인정한다(제12조).²³⁾ 따라서, 조선적의 국제결혼과 해외입양이라는 예외적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만, 조선적의 탈퇴는 국적 포기로 인정된다. 개정된 국적법 제8조에서 무국적자에게 새롭게 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해외공민으로 간주되었던 조선적을 무국적으로 인식하는가는 별도의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을 ‘조국’으로, 한국을 ‘모국’으로 인식해 온 조선적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적의 포기를 요구하는 한국의 국적법은 재일조선인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분단 조국의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게 만드는 ‘반통일적 악법’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국적법 또한 조선적에 대한 포섭 의지를 포기한 채, 국적 선택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패전 때문에 일률적으로 부여된 조선적의 감소 추세는 역사적 필연이므로, 1963년의 단계에서도 자국 공민의 감소를 공식 추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1995년 이후, 조선적의 지속적 감소에 대한 새로운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겠지만, 북한과 조선총련으로서도 실질적 통제의 한계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국적을 초월한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해외동포를 포섭하고 귀속의지를 장려하는 정책적 지향성은 한국 정부의 해외동

23) 정인섭, “재일한인의 국적과 남북한의 국적법 개정,”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서울: 서울대출판부, 1999), pp.449~450.

포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2000년대 이후에는 조선총련 활동가조차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 충성이 아닌, 북송 가족에 대한 고려와 생계 대책으로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 국적 또는 일본 국적으로 이동하는 일이 늘어나자, 재일조선인의 가족 구성원에서 조선적과 한국 국적이 혼재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조선적을 상실했어도 조선적이 혼재하는 가족 또는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선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바야흐로 조선총련 간부의 가족과 조선학교 안에서 조선적과 한국 국적이 공생하는 시대이다. 세계화된 사회에서는 조선적이 한국 국적이거나 일본 국적뿐 아니라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도 주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선적의 상실은 생활의 공간을 선택하기 위한 편의적 절차일 뿐, 조선적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자의적 해석이 성립하고 통용되기도 한다.²⁴⁾ 국민국가의 행정 시스템에서 개인이 법적 강제성에 저항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국적이 민족의식을 제한하거나 개인의 정체성의식을 규정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한 조선적의 귀속의식이 약화되어도 조선적의 독자적 정치의식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선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고 조선적을 유지하는 후속 세대들 중에는 조선적과 자신의 정체성을 일체화시키고,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운동사와 집단주의적 공동체 의식을 계승하는 것에서 자부심을 갖기도 한다.²⁵⁾ 조선적 재일조선인 운동사의 관

²⁴⁾ 2011년 2월 26일 동국대 일본학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 『재일코리아 문학의 초국가주의』 중 전체토론에서 한 재일조선인 유학생 청년이 자신이 소유한 복수의 여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여권과 대한민국이 발행한 여권)을 보여주었다. 그 유학생은 국민주권을 행사하되 대한민국에 귀속하지 않고,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국가’를 추구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²⁵⁾ 金有變, “民族の誇りをかけた闘い: 民族教育と集團主義教育の意味,” 『部落解放』 第687號(2014年 1月), pp.24~33.

점에서 북한과 조선총련에 대한 애착심을 키워온 이들은 조선적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조직적 난관을 타개하고자 노력한다.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에 대한 지원과 일본의 교부금 배제 및 중단에 대한 항의 운동은 그 대표적 사례다.

조선총련 산하에서 독자적 민족교육을 수행해 온 조선학교는 2010년부터 실시된 일본의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배제되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가 공문화한 후, 일본의 보수적 시민단체는 지방자치체에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라고 요구했고, 2011년부터 도쿄와 오사카 및 일부 지자체에서 교부금을 중단했다. 2012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가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된 근거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조선총련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보조금의 지출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²⁶⁾ 조선학교 측은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걷어내는 등 북한과 거리두기를 시도하면서, 일본의 안팎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2013년 1월 24일 아이치조선중고등학교(愛知朝鮮中高級學校)의 고등학생들은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²⁷⁾

26) 고교무상화 정책의 실질 내용은 국공립고교에 대한 수업료 무상화·사립고교에 대한 취학지원금 지급제도이다.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문부성의 심사 기준 및 내용에 대해서는 “資料1 高校無償化に係る朝鮮高級學校の審査狀況,” 2012년 3월 26일; <http://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detail/1342909.htm> (검색일: 2015.4.1) 참조.

27) 2009년에 일본의 ‘재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이 교토의 조선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여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로 고소된 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1200만 엔의 배상금을 조선학교에 지급하고 조선학교 주변에서 시위를 엄금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일본의 사립학교보조금 지원 제도에 합당하도록 조선학교가 보편적 교육이념에 부합하고, 일본 내에서 민족어를 전수하고 민족문화를 재창조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게 되기를 기대한다.

일본의 패전 직후부터 조선적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동화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일본 교육행정의 지도를 받지 않고서도, 일본 지자체와 북한의 지원을 받아 독자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모두 요청하게 되면서 북한 및 조선총련과는 정치적 단절, 즉 북한의 정치적 지배에 대한 동화에서 벗어날 것을 거꾸로 요구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조선총련을 순수한 재일조선인의 권익 옹호 단체로 환골탈태시키자는 주장도 이미 나왔다. 과거 조선대학교 교수였던 박두진은 “북한이 가장 겁내는 것은 조선총련 내에 ‘독립파’가 득세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 활동가들 중에는 북한 지지는 좋지만 북한 지도를 받아 활동하는 것은 안 된다, 독립적으로 하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진술한다.²⁸⁾ 현재 북한의 조선총련에 대한 지도력은 여전히 관철되고 조선적의 소수정예파가 활동하고는 있지만, 차후의 변화를 지켜볼 일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조선학교의 지원자들이 일본의 민족차별 현상과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우리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얻어내는 데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학교는 한국·일본 국적으로 변경한 학생과 뉴커머 한국인, 재일중국인 조선족에게도 열린 학교로 변하고 있다. 2000년대에 조선학교를 취재한 인류학자 송기찬은 우리말 교육이 학생들에게 활기를 주기도 하지만, 집단주의 교육 내용은 다양한 에스닉 코리안에 대한 획일적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학생들은 교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일본말’과 ‘일본이름’을 쓰면서 일본 사회에 융해되고, 각각의 가정과 일본 사회 속에서 다양하게 자기를 연출한다. 송기찬은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퍼포먼스야말로 재일

28) “특파원 리포트 조선총련 간부들도 사석에선 北 비판… 젊은 활동가들은 北 추종만 말고 독립활동 하자고 해,” 『조선닷컴』, 2010년 2월 10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0/2010021000082.html> (검색일: 2015.3.1).

조선인 학생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제라는 사실을 밝히며, 민족적 주체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했던 기존의 민족교육론을 비판한다.²⁹⁾

IV. '재외동포법'에 해당하지 않는 조선적

오늘의 세계화 사회에서 이중국적을 갖거나, 2개 이상의 국가를 이동하며 장기간 거주할 자격을 갖는다면, 이는 남다른 혜택이 된다. 가령, 일본에서 특별영주권을 갖는 재일동포가 한국 국적을 갖는다면,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경우에도 한국 이동의 장벽은 거의 없다. 1999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대행하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³⁰⁾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모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느끼지 않도록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의 취득·처분을 허용하는 등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적 재일조선인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조선적은 해외국민으로 인정되었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 북한의 영향력이 쇠락한 오늘날, 조선적 소지자가 모두 북한이나 조선총련에 귀속의식을 갖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29) 宋基燦,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學校』(東京: 岩波書店, 2012), p.216.

30) 정식 명칭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에 재외국민에게만 적용하고, 중국 및 일본 국적이 제외되었지만,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정착하여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최신 개정은 2014년 5월 20일에 이루어졌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 2015.3.1) 참조.

북한과의 친화성이나 비판적 거리를 구별하는 징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대립이 고조되자, 보수정권은 조선적의 유지를 북한을 지지하는 정치적 의사 표시로 간주하며, 한국의 출입국 관리에서 그 정치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조선적 동포의 한국 국적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회유정책으로 1970년대에 ‘조선총련계 동포 모국방문 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조선총련계의 여론은 고향 방문을 한국의 군부독재 정권에 포섭되는 행위로 비난했다. 제주도 4·3을 소설화한 김석범은 작가로서 고향 제주도를 취재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을 억누르며, 한국 정권에게는 “조선총련계의 작가들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용가치가 있다”는 정치적 이유를 앞세웠다.³¹⁾ 1981년, 재일조선인 담론의 대중화에 기여한 잡지 『계간 삼천리』의 편집위원인 김달수·강재언·이진희가 한국을 방문하자, 김석범은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편집위원회를 탈퇴했다. 이렇듯 정치적으로 엄격했던 김석범이 자신의 대하소설 『화산도』의 완성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권의 민주화 선언 이후였다.

‘조선총련계 동포’인 조선적이 한국 방문을 ‘정치적 배반’이나 ‘도덕적 변절’로 매도하지 않고 스스로도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 것은 김대중 정권 이후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법(1990년 제정)’에 의거하여 간첩사건 관련자와 신원 특이자를 제외하고, 조선적에게 ‘여행증명서’ 발급이 전면 허용되었다. ‘지구촌동포연대’의 대표 배덕호가 언론에 제시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4년 초까지 5년간 여행증명서 발급 실적은 11,819건(거부 사례는 4건)이다.³²⁾ 법학자 정

31) 김석범은 재일조선인으로서 처음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작가 이회성의 한국 방문도 비판했다. 金石範, “在日의虛構”, 『在日の思想』(東京: 筑摩書房, 1981), p.244. 처음 실린 곳은 『朝日新聞』, 夕刊, 1977년 8월 10일.

인섭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까지 10년간의 누적 발급 건수는 24,000건으로 한 해 평균 2,400여 건이 발급된 셈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명박 정권 이후 약간 감소했지만, 2008년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³³⁾

그러나 2006년 10월에 북한의 핵실험이 보도된 후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2009년에는 여행증명서 신청 1,497건에 대한 발급 거부가 279건으로 늘었다. 주일한국영사관에서 총련 관련자의 한국 방문을 차단하고, 조선적 신청자의 한국 내 정치활동을 이유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영사관의 직원이 조선적 신청자에게 한국 국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의 발생 후에는 신청 건수 자체가 감소하여, 2013년에는 86건의 신청에 40건이 발급되었다. 그 중에는 정치활동을 이유로 학술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례도 있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조선적 여성의 한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여성의 경우,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계기로 여론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면서 재입국이 허용되었다.

조선적에게 여행증명서를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사태는 한국 사회의 ‘남남갈등’이 재현되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의 보도는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및 인터넷 뉴스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³⁴⁾ 2010년 7월 13일에는 강창일 의원 외 민주당 의원

32) 배덕호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등 돌린 정부, 거드는 대법원,” 『프레시안』, 2013년 12월 18일.

33) 아래 표는 정인섭이 언론보도와 외교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 p.10.

〈표 2〉 연도별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발급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청건수	3,329	2,957	2,229	2,033	1,497	401	64	44	86
발급건수	3,358	2,949	2,229	2,030	1,218	176	25	20	40

34) “‘조선적’은 적대적? ‘조선적’ 재일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요청 거부는 정당하다 판결한 대법원, 재일동포 역사와 현실 무시한 처사,” 『한겨레 21』, 제991호

12인의 발의로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외교통상 통일위원회’에 계류되었다. 하지만 여권법 개정안의 처리는 보류된 채, 18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자동 폐기되었고, 이후 다시 제출되지 않았다.³⁵⁾ 보수 진영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복세력의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경우 적잖은 안보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권법의 개정 입법화를 막은 것이다.³⁶⁾

조선적의 한국 방문에 제동이 걸린 궁극적 이유는 국가 안보의 책임을 맡은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대남도발과 조선적의 정치활동을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조선총련 활동가들의 술회에 따르면, 냉전시대에는 조선적이 한국 국적을 위장 취득하여 민단에서 세력을 확장하거나 한국에서 공작활동을 벌인 사례도 있었다.³⁷⁾ 그렇다면 한국 국적으로의 이동이 늘어난 현재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대남공작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굳이 출입국 관리의 대상인 조선적을 내세울 까닭도 없다. 개인의 첩보 활동보다 오히려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기술적 접근과 안보의식을 더욱 중시해야 할 시대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항의하여 조선총련 활동가들의 방한 신청을 거부하고, 반미·반한 의식이 투철한 조선적의 한국 내 정치활동을 제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12월 19일);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004.html> (검색일: 2015.3.1).

35) 그 개정안은 여권법 12조에 규정된 외교부장관의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재량권을 제한하고,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안이었다. 정인섭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 p.10.

36) “조선련, 국내 입·출국 완전허용?...논란 ‘일파만파,’” 『뉴데일리』, 2011년 7월 5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84748>> (검색일: 2015.3.2).

37) 朴斗鎭, 『朝鮮總連: その虚像と實像』(東京: 中公新書, 2008).

조선적 재일조선인에 대한 조건 없는 포용과 자유왕래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로 생각되나, 한국 사회의 인식이나 여론 형성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다. 조선적의 정치적 성향을 단순히 북한에 귀속시키거나 '중북몰이'로 배제시키는 태도는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쌓아두고 있는 조선적 동포와의 관계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국적 이동이 자유로워진 오늘날, 조선적의 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개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삶의 방식에 근거하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조선적 재일조선인 운동사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선적 자신의 정치적 책임 의식을 촉구하며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V. 조선적 재일조선인은 '기민, 난민'인가?

기민 담론은 전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이 점령당국(SCAP: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연합국 최고사령관)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 2개의 조국에게서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피해자 의식을 담고 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개개인들이 내쳐지는 사태는 비단 재일조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해도 단일민족의식이 강한 일본 사회에서 재일동포는 피차별 민족의 처지에 있었고, 그 민족적 수난사는 수없이 표상되어 왔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의 삶을 단순히 피해자의 모습으로 그려낼 수는 없다. 특히 재일조선인의 조직운동을 들춰보면, 그 이면에 생활의 권익과 정치적 이상을 좇아 판단하고 행동해 온 역동적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1946년 11월, SCAP는 일본에 잔류하는 조선인에게 한반도에 국가가 수

립될 때까지 일본 국적을 보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해 10월에 한반도에서 대구폭동이 일어나자 점령당국은 한반도의 자치능력을 의심하게 되었고, 일본에서도 공산당과 재일조선인들의 공동투쟁 및 좌·우파의 폭력적 충돌을 점령정책의 저해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었다.³⁸⁾ 이에 따라 SCAP는 1947년 5월에 외국인 등록령을 실시하여 조선인을 일본국민에서 해제시키고, 좌·우파의 활동가들을 ‘범죄예비군’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본국 송환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 서둘러 성립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1952년 4월에 발효되어 일본과 한반도의 독립이 승인됨에 따라, 재일동포는 정식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³⁹⁾

SCAP에 의한 일본 국적의 해제를 두고 199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 연구자들은 국민적 권리의 박탈이자 기민(棄民)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 반미-아시아주의가 고양된 일본과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전후처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기민정책이 인터넷의 재일조선인 담론에서도 거론되었다. 그러나 역사

38) 당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여론은 암시장에서의 불법거래, 공산당과 연계된 정치활동, 밀입국과 폭력 등의 부정적 이미지였다. 일본공산당과 재일조선인의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한 전국적 통계(篠崎平治, 『在日朝鮮人運動』, 長野: 畠文社, 1955)에 따르면, 1952년 1년간 폭행, 상해, 화염병 투입, 투석, 인분 투입, 방화, 폭약 사용 등 총 사건 396건에 검거인 수 1605명이었다. 李瑜煥, 『在日韓國人60萬-民團朝總聯の分裂と動向』(東京: 洋洋社, 1971), p.30.

39) 조약 발효일 9일 전에 법무부 민사국장은 ‘평화조약에 따른 조선인, 대만인 등에 관한 국적 및 호적 사무처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民事甲通達第428號〉를 발표했다. 그 제1항에서는 “조선 및 대만은 조약 발효일로부터 일본국 영토에서 분리되므로 이에 따라 조선인 및 대만인은 내지에 재주(在住)하는 자를 포함하여 모두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고 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일본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는 혈통과 무관하게 일본국민으로 간주했다. 정인섭, “재일한인의 국적과 남북한의 국적법 개정,” p. 432. 일본어 원문은 “1952年4月19日付け民事甲第438號法務府民事局長通達”; (<http://www.kokuseki.info/kitei/tsutatsu/1952-04-19.html#chu1>) (검색일: 2015.4.15) 참조.

적 실상은 그렇게 일방적이거나 단순하지 않다. 당시 재일조선인들은 스스로를 언젠가 조국으로 돌아갈 '해방인민', '해방된 국민'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의 해제를 당연시했다. 해방 후에 독립을 기대했던 한반도의 민심이 신탁통치에 반대했듯이, 명분상으로도 일본 국민의 '권익'을 추구할 계제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일본 국민의 해제가 순전히 '자주민' 의식에서 나온 것만도 아니었다.

2015년 1월에 이와나미(岩波)신서로 출판된 『재일조선인 역사와 현재』에서도 기민 담론의 일방적 피해의식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재일조선인을 대표했던 재일본조선인연맹(좌파 단체)이나 조선건국축진청년동맹(우파 단체)이 요구한 것은 '패배한 일본국민'과 구별되는 '외국인으로서의 처우'였다. 이것은 점령당국 하에서 '생활의 권익'을 챙기는 문제였다. 조선인이 패배한 일본국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내지 않고, 승리한 연합국민에게 분배되는 특별배급을 받으려면 우선 일본 국민에서 해제되어야 했다.

조련이 생활권 옹호를 위해 가장 중시한 과제의 하나였던 재산세 문제만 해도, 패전국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갖는 재산세가 조선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연합국민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부여되었던 특별배급(일본인의 주식배급이 1일 2.7홉(합)인 것에 비해 4홉이 지급됨)도 조선인이나 건청·민청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그 적용을 요구했다.⁴⁰⁾

패전 직후에 재일조선인은 연합국민, 즉 외국인의 입장에서 일본인보

40)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 pp.108~198. 그러나 1947년 4월 총선거를 맞이할 무렵에는 이러한 외국인 논리와 일본 사회에 생활 기반을 두는 주민 논리 사이에서 모순이 표면화한다고 말한다. 인용문을 통해 조선인 중에서는 빈곤층만이 아니라 재산세를 회피할 만큼의 부유층도 존재했고, 이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모두 획득하기 위해 분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 풍부한 물자를 배급받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일본공산당의 재건을 주도하고 ‘인민혁명정부’ 건립을 위한 운동까지 주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운동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조선인 활동가에 대한 본국 추방령이 실시되었고, ‘외국인 등록’은 강제 퇴거와 재입국 불허를 가능하게 만든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좌·우파의 폭력적 대립 구도에서 폭도로 추방되던 조선인들은 강제 추방될 불안 속에서 활동해야 했고, 한반도의 정세 불안을 피해 일본으로 재입국한 재일조선인도 밀항자로 살아야 했다. 그 때문에 이후 재일조선인 운동에서 제기하고 저항한 문제는 생존권과 참정권의 획득, 강제 퇴거와 지문 날인의 폐지 및 재입국 허가 등에 관한 것이었다. 애초에 외국인 자격을 폐지하고 일본 국적을 다시 부여하라는 요구는 없었다.

최근의 기민 담론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사상(捨象)한 채, 반일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직설 화법으로 재구성되어 한일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재일조선인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경식의 저서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의 일부를 보자.

그리고 패전으로 식민지 지배가 끝난 후에는, (SCAP와 일본은: 인용자) 조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들의 ‘일본 국적’을 부정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이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조치조차 없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조선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⁴¹⁾

41) 서경식 지음, 형진의 옮김,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서울: 반비, 2012), p.134. 일본어판은 徐京植, 『在日朝鮮人ってどんな人?—中學生の質問箱』(東京: 平凡社, 2012). 인용문은 인터넷의 어느 블로그에 게시된 서경식의 글 중 일부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http://kkangjong.blog.me/220298444870>> (검색일: 2015.2.1).

여기에서 “조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라는 진술은 “전체 조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타당하다. 만일 일본 국적으로 남기를 원했다면 ‘친일 협력자’로 배제되었을 터이지만, 그들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국적의 박탈 후에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조치조차 없었다”는 진술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일본인보다 유리하게 배급 받던 점령시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빈곤한 조선인들은 생활보호를 받고 있었다. 일본의 주권 회복을 앞둔 1951년부터 전후 부흥에 성공한 1957년까지 매년 재일조선인의 생활보호율은 최저 10.8%에서 최고 24.1%에 이른다. 이것은 일본인의 최저 1.6%에서 최고 2.5%와 비교할 때, 5배에서 10배 이상의 비율이다.⁴²⁾ 1950년 에다가와(枝川町)의 조선인 마을에서는 매월 조선인 163세대에게 총액 60만 엔(1세대에 3600엔) 정도가 지급되었다.⁴³⁾ 이는 당시 조선인 중에 빈곤층이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위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조선인이 사각지대에 버려진 상태는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의 일본어판 제목은 『재일조선인은 어떤 사람?—중학생의 질문상자』로, 중학생들에게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사정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입문서로서 기획되었다. 식민주의 비판론에 입각한 서경식의 기민 담론에 대해서, 아마존의 독자서평을 들춰보면 찬반양론으로 명확하게 갈린다. 재일조선인을 역사의 피해자로 그리는 서경식의 감성 언어는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는 ‘착한 일본인’들에게 감화를 준다. 반면, 일본을 일방적 가해자로 증언하는 논리는 자신들이 ‘역사적 사실’을 중시한다고 주장하는 ‘협한류’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시키고 있다.

42)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 p.145.

43) 李東準, 『日本にいる朝鮮の子ども: 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東京: 春秋社, 1956), pp.11~12. 당시 우동 한 그릇이 15엔 정도였다. 戦後昭和史, “うどん・そばの價格推移”; <<http://shouwashi.com/transition-noodles.html>> (검색일: 2015.4.12).

이 책의 기획 의도를 떠나서 일본인들에게 사실 왜곡이자 일본 비방으로 읽히는 기민담론은 ‘반일’과 ‘협한’의 갈등구조를 증폭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기민정책에 대한 비판은 어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변주되고 있는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이후에 조선적 재일조선인들은 북일국교 정상화를 촉구하고 귀국운동(북송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한일회담을 ‘굴욕외교’로 비판하고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다. 당시 재일조선인과 연대했던 일본의 좌파 지식인들도 한일협정을 일본 국가독점자본의 한국 재침략으로 분석하면서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이중적 종속국가로 간주했다.⁴⁴⁾ 그들이 원하는 ‘북일국교 정상화’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냉전구도의 심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협정영주권에서 배제된 조선적은 스스로 제국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주민’임을 당당하게 선언한 셈이었다.

스스로에게 ‘민족주체’의 자격을 부여한 재일조선인은 한국의 ‘신식민지적 군부정권’에 귀속되기를 거부하면서도, 정치적 투쟁 차원에서 한국의 ‘기민(棄民)정책’을 비판해 왔다. 협정영주권에서 배제된 조선적에게는 1981년에 ‘특별영주권’이 부여되었고, 1991년 일본의 출입국관리 특별법에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일본 국적을 소유했던 외국인에게 특별영주권이 부여”됨으로써 비로소 한국 국적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2002년 김정일과 고이즈미의 북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44) 조선사 연구자의 대표적 상징인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의 한일회담 반대 논리를 비롯하여 일본조선연구소의 한일회담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조관자, “내재적 발전론의 네트워크, ‘민족적 책임’의 경계,” 강원봉·도베 히데아키·미쓰이 다카시·조관자·차승기·홍중욱,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서울: 아연출판부, 2014)를 참조.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분출하면서, '북일국교 정상화'의 성사까지 숨죽여 기대하던 재일조선인 사회에도 치명적인 위기가 닥쳐왔다. '북일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날개가 돋을 것인가를 관망하던 분위기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사태가 반전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1998) 이후 일본의 방위의식이 고조되고 풀뿌리 민족주의가 강화된 현실이었던 만큼, 북일 교섭의 가능성은 일시에 차단되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은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된다. 이후 납치 사실과 북한의 대응에 대한 일본인의 비난과 분풀이는 고스란히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전가되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는 대북교류를 가로막고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 철회까지 요구했다.

일본 사회에서도 과거 식민지배의 폭력과 비교하며 일본의 과도한 '북한 때리기'와 퇴행적 자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상대 국가의 과거 폭력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해결을 요구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치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자세는 일부 한국인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자국 내 풀뿌리 민족주의의 비타협성과 도덕적 정당성에 맞서서 사태를 냉정하게 돌이킬 만한 정치가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만날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의 담론 지형에서는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군사독재의 신식민지'인 반면에 북한은 '인민의 낙원' '주체의 나라'로 과대 선전되었고, 일본은 늘 역사적 가해자로 비난받으며 풀뿌리 민족주의를 당당하게 펼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2년의 납치사건 국면을 계기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잠재되었던 실망감과 일본의 민족주의적 반격이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그 후폭풍은 그동안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던 현실인식과 민족주의 표출에서 나타난 한일 간 불균형의 폭만큼이나 강한 진동으로 다가왔다.

이후 조선적을 이탈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조선총련의 하부 기

관과 조선학교가 문을 닫는 사태가 전개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의 역사적 피해자로서 다수자의 횡포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재일조선인의 도덕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침묵해 왔던 자신들의 자세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비껴갈 수 없게 된 사실일 것이다. 원로 시인 김시종은 “북공화국의 국가범죄와 민족수난을 명확히 분별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식민통치 피해자의 정당성이 “한방에 날아가고” 납치 피해 가족들 앞에서 “몸이 움츠러드는” 느낌이라고 고백했다.⁴⁵⁾ 그러나 한국에서도 활동하는 대부분의 재일조선인 운동가와 지식인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침묵한 채, 한국과 일본의 국가폭력만을 문제 삼는 모습을 보였다.⁴⁶⁾

이 무렵부터 재일조선인 담론에서 민족교육을 지원한 ‘고마운 조국’이란 표어 대신, 북한 국가로부터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기민의 논리가 공식적으로 거론된다. 북한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재일조선인 스스로가 북한과 선긋기를 명시한다. 과거에 북한의 해외공민으로 인정되어 북한의 여권을 발급받았던 조선적의 귀속의식이 변화한 것이다. 이제 조선적은 북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총련계의 일부 북한 국적자, 그리고 한국과 북한, 일본의 어느 국적도 선택하지 않는 무국적자로 나뉘어 정의된다.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귀속의식을 갖지 않게 된 경우에도, 재일조선인의 역사에서 정체성을 찾으며 스스로에게 분단을 넘어선 ‘통일 국적’에

45) 金時鐘, “お互いを見つめなおす契機となるよう” 『部落解放』 第511號(2003년 1월); “在日詩人の詩と音楽が融合 金時鐘さん, 京都で公演,” 『共同通信』, 2003년 7월 3일; <<http://www.47news.jp/CN/200307/CN2003070301000545.html>> (검색일: 2012.2.29).

46) 徐勝, 『東アジアの國家暴力と人權・平和』(東京: 立命館大學法學叢書, 2011)은 자신의 옥중생활에 기초하여 한국과 대만의 국가폭력,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 및 미국의 군사전략을 비판하지만, 2011년이라는 시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준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조선적을 유지한다. 조선학교에서 북한을 '조국'으로 새기고 조선총련의 하부 조직생활을 통해서 '조국 통일'을 위한 민족의식과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온 세대는, 북한과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도 곧바로 한국이나 일본 국적의 취득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조선적 소지자들 중 일부는 스스로에게 국민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진보적 세계관을 부여하며 무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미래의 통일국가 건설을 표방하는 재일조선인의 경우, 스스로를 일본과 한국, 북공화국 모두에게 버림받은 '기민'이라고 말한다. 한국 국적자로서 스스로를 재일조선인으로 명명하는 서경식도 자신을 식민지 지배로 일본에 거주하게 된 '반난민'으로 말한다. 그러자 일본 넷우익과 재특회는 일본에서 특별영주권자로서 사회복지의 특혜를 누리면서도 일본을 비난하는 '거짓말쟁이'들은 일본을 떠나라고 역비판하면서 험한 운동을 벌인다.

단지 조선적이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강제 추방된 사례는 없다.⁴⁷⁾ 한국이나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장벽이 높은 것도 아니지만, 조선적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일본 정주자로서의 생활이 위협받지 않는다.⁴⁸⁾ 일반 범죄자에 대한 추방 명령의 경우, 조선적이 아닌 외국인 일반에 해

47) 해방 직후에 한반도로 귀환하거나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재일동포가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해 밀항하는 사례들이 1950년대 전반까지 빈번하게 있었다. 金贊汀, 『在日義勇兵歸還せず 朝鮮戰爭秘史』(東京: 岩波書店, 2007).

48)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 조건(거주 기한, 생계 능력)을 성립시켜야 하고, 범죄와 전과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는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조선적과 모든 동포들의 후손까지 일본에 정주할 수 있도록 1975년, 입국관리국 직원인 사카나카 히데노리(坂中英徳)가 귀화 조건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기하였다(坂中英徳, “今後の出入國管理行政のあり方について,” 『入管月報』, 第176號, 1976) 당시 재일조선인들은 사카나카의 제언을 일본의 동화정책으로 비판했지만, '재일'의 정주화는 이미 필연적 흐름이 되고 있었다.

당하는 규정이다.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한, 일본에서 거주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본에서 특별영주권을 가지며 '무국적자'의 권리와 자유를 당당하게 펼치려는 조선적을 '난민'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본의 국가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해외여행에 불편을 겪는다 해서 제일조선인을 '난민'으로 부른다면, 아프리카의 빈곤 난민이나 전쟁 난민, 중국 등지에서 불안에 떨며 불법 체류하는 탈북자들을 부를 이름이 없어질 것이다.

Ⅵ. 조선적의 한국 입국 제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한의 이질적 체제가 평화로운 통일을 구상하고 상생의 질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식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끼리'의 민족 차원이 아닌 국제 사회의 공존공생 질서에 협력하면서, 무력행사가 아닌 민주적 절차에 입각하여 공공의 가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및 그 진위 논란, 연이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과 최근의 장성택 숙청 등 일련의 사건은 북한을 평화적 통일의 협상 상대로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통일에 대한 '동상이몽'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오늘날,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와 무력 도발이라는 양날의 칼에 냉철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 여론이 형성되는 환경에서, 평화통일 공세 및 민족공조론은 국내외에서 모든 한글 능력자들에 의해 직접 발신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 통제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북한 당국 및 북한을 지지하는 해외동포의 주장과 요구를 힘겨루기로 일관하면서 무조건 배제

할 수도 없고, 민족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포용할 수도 없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적을 소지한 재일조선인에게도 해당한다. 조선적은 누구인가? 최근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조선적은 <남도 북도 선택하지 않는 무국적자>라고 정의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의 기사(2014년 3월 13일)에서는, “조선적(朝鮮籍)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방을 맞은 뒤로 남북한 어느 국적도 선택하지 않아 무국적으로 남아있는 동포들로, 부모의 선택을 따른 후손들을 포함해 5~6만 명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⁹⁾고 보도한다. 그러나 조선적이 실제로 남북의 어느 한쪽과도 무관하게 단순한 일본의 국내적 행정 문제로 무국적자로 살아왔다면, 한국 정부가 고향을 찾는 동족의 출입국을 통제할 이유도 명분도 없을 것이다.

조선적은 역사적으로 북한과 조선총련에 연루된 이름이 분명하다. 그 다수는 북송동포나 조선총련 활동가의 가족이지만 북한에 대한 충성도는 과거와 다르다. 현재 조선총련 활동가조차도 북한의 세습정치를 비판하지만 생활의 연속성에서 조선총련을 떠날 수 없다고 한다. 일찍이 조선총련을 떠났지만 사회주의적 신념이나 통일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조선적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준통일 국적’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다. 무국적자로서 조선적을 지키는 이유는 가족, 의리, 신념, 가치의식, 생활의 수단과 존립의 근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조선학교 출신이 대부분인 조선적 소지자들은 스스로에게 식민주의와 분단을 극복한다는 역사적 의식과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햇볕 정책이 여운을 드리웠던 2006년 무렵(북한의 핵실험 이전)까지만 해도,

49) “조선적 입국 문제 후퇴…재일조선인들의 ‘토로,’” 『연합뉴스』, 2014년 3월 13일.

재일조선인의 민족담론에서는 ‘통일조국’으로의 귀환이 중시되고 실천 활동이 모색되는 분위기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조선적 소지자는 한국을 방문하여 조국통일과 민족문제를 논하며 미군철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2009년 이후 보수정권은 조선적의 정치활동을 이유로 ‘여행증명서’ 발급을 ‘정치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정**(일본의 모 대학 교양교육센터 준교수)는 2009년 6월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한·일 공동심포지엄 『식민지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단체활동의 전개』의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해 5월에 오사카 영사관에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자, 그는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취소’를 위해 오사카 총영사를 제소했다. 2009년 12월 31일, 1심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판례 2009구합34891)는 주일오사카총영사관 총영사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하며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0년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판례 2010누3536)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원고가 ‘재외동포 NGO대회’에 참석하여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한국민주통일연합(한국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일 한국인들의 단체, 약칭 한통련) 부의장과 회합하였고, 조선총련 산하 재일본조선청년동맹(약칭 ‘朝靑’) 대표단의 일원으로 조선대학교 재학 중 방북하여 친북활동을 한 점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학술회의가 종료되어 여행목적은 이미 상실했다는 점도 거부 취소를 무효하게 만들었다. 2013년 12월 12일 대법원 특별3부(판례 2010두22610)도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선적의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문제를 다루는 매체는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와 인터넷 블로거들이다. 주된 논조는 한국 보수정권과 사법부의 조선적에 대한 ‘역사적 몰이해’와 ‘기민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가혹한 차별과 탄압에 직면해왔던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몰역사적인 판결”이자, “조선적 재일동포

의 간절한 염원인 고향 방문과 자유로운 고국 방문을 가로막는 정권의 행태에 철저히 편승한 마녀사냥식의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것이다.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 배덕호는 대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지난 독재 정권 시기, 일제강점기의 피해자인 재일조선인을 외교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며 자국 국민을 버리고 방치한 ‘기민(棄民) 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한다.

비판론자들은 일본을 가혹한 지배자로 못박아두고 한국 정부가 한일 협정 이후 조선적을 제외시킨 문제를 ‘기민 정책’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인식 자체가 북한과 조선적을 정치적 행위주체로 바라보지 않고, 조선적을 일본 및 한국의 보수정권에 의한 민족적 피해자로만 그려낸다. 민족감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읍소하고 선전하는 태도이다. 과장된 민족주의를 걷어내고 보면, 실제 문제의 핵심은 한국 정부와 재일조선인, 양자 모두의 ‘정치적 의지’에 관련한 대립 양상이다. 특히, 한국의 보수 정권에 비타협적인 조선적 소지자의 정치적 태도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선적의 정치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통치 이념이 명백하게 전면 충돌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적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문제를 연구한 정인섭은 대법원의 판결이 법해석의 관점에서 타당한 조치였지만, 정부가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삶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보여서 상호교류의 폭을 넓힐 것을 요구했다.⁵⁰⁾ 이에 대해 필자는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삶’을 서술하는 재일조선인 운동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며, 재일조선인 스스로가 먼저 ‘민족 수난자’라는 기존의 역사상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수난만을 읍소하고 권리만을 옹호하려는 모습은 한일의 민족적 갈등구도에서 지지자들

50) 정인섭,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 pp.22~23.

언을 수는 있어도, 윤리적으로 명쾌한 모습은 아니다. 이제 재일조선인들은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인격체로서, 일본의 동화교육이나 식민주의에 대해 비판해 온 민족주체로서, ‘사회주의 조국으로의 통일’을 외쳐온 정치운동의 주체로서 살아온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줄 때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생각은 재일조선인의 국적문제와 한국 이동의 부자유에 대해서 발언해 온 조경희의 논문을 읽으면서도 똑같이 떠올랐다.

유학과 업무 차원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재일동포를 인터뷰한 조경희는 “그들은 자신들의 월경적 활동과 비-분단적 정체성을 한국 사회에 발신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재일조선인 표상과의 교섭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재구축한다”고 분석한다.⁵¹⁾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적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분단적 사고를 비판해 온 조경희는 결국 조선적 재일조선인에게도 한국을 자유 왕래하며 ‘비-분단적 정체성’을 발신하고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필자도 그러한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원래 지역적 혹은 민족적 용어이던 ‘조선’은 어느새 냉전 논리의 역학관계 속에서 정치와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⁵²⁾ 원래 ‘조선’과 ‘한국’을 둘러싼 호명은 ‘정치적’인 것이었고 그 해석은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으로 변주된다.⁵³⁾ ‘조선’ 호명의 정치성을 탐색시킨 조경희의 주장 자체가 ‘탈냉전’의 구호를 소비하는 시대에 조선적 재일조선인이 북한에서부터 이탈하게 된 상황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주장은 냉전기의 역사를 사상(捨象)시키고 있다. 비-분단 또는 탈-분단을 말하면

51) 조경희, “탈냉전기 재일조선인의 한국이동과 경계 정치”.

52) 조경희, “남북분단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p.274.

53) 재일조선인의 호명 문제에 대해서는 조관자, “전후 재일조선인의 해방운동과 지식의 정치성,” 『일본사상』, 제22호(2012) 중에서 2절, “조선’이라는 호칭과 정체성 정치”를 참조. 장인성 편, 『전후 일본의 지식풍경』(서울: 박문사, 2013)에 수록.

서, 한국과 북한의 현재의 적대적 대립 상황을 외면할 수도 없다. 당파의 논리에 입각한 정치적 대립을 지속하면서 자신들의 윤리적 과제를 외면한 채 '분단 극복'인 것처럼 자족해서도 안 될 것이다.

분단을 넘어서는 정체성의 확립과 실천은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및 교류 속에서도 확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국적 문제를 떠나 재일조선인은 스스로가 독자적 정치 노선과 사상적 지향성을 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정치적 투쟁 주체로 살아왔다. 한국이라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려는 의지 자체도 스스로의 주관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단이며,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도 자율적 정치의식의 발로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정치적인 불관용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정치적 비타협성과 정치운동의 편향성을 모두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북도 아닌' 조선적의 정치적 지향성이 드러나고 있지만, 조선적 소지자는 북한을 '사회주의 조국'으로 인식하거나 그 민족적 정통성을 인정했으며, 남북이 서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연방제 통일을 외친 적도 있다. 북한이 남한 정권을 '정치적'으로 인정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조선적의 일부는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특혜'도 누렸다. 일본인 납치 문제로 인한 일본의 대북통제 때문에 북한을 통행할 기회는 실질적으로 제한되었지만, 대신에 평택의 미군기지 철수, 제주도의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한국의 반미 평화 운동에 조선적이 직접 참가할 수도 있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고양된 반미 운동의 현장에서 조선적의 재일조선인들이 북한의 반미, 통일 구호와 일치하는 내용을 그대로 외치는 경우도 있었다.⁵⁴⁾

54) 필자는 재일조선인 정** 씨를 일본에서 본 적이 있다. 2006년 겨울로 기억하는데, 당시 대학원생이던 그가 도쿄의 어느 한 출판기념회에서 평택의 반미집회에 참가한 경험을 피력했다. 일본에 거주하며 마침 정** 씨의 연설을 듣게 된 필자는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재일조선인 청년이 평택 주민들 앞에서 북

반면에 조선적 소지자가 북한에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고 북한 정권과 불화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는다. 가능성은 있지만 딱히 알려진 바가 없다. 2013년 12월 일본 문부성은 조선학교 학생 몇 명이 고 김정일 서기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가극을 공연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거부했다.⁵⁵⁾ 조선학교의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충성의 의례는 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에는 조선적만이 아닌 한국 국적으로 전환한 학생들이나 재일 중국조선족 학생들도 다닌다. 조선학교에서 ‘남도 북도 모두 관계를 맺는’ 학생들이 장차 새로운 재일조선인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오늘날, ‘남도 북도 아닌 통일조국’으로의 귀환을 꿈꾸는 조선적 재일 동포는 자신들에 대한 한국·일본·북한의 기민정책을 비판한다. 하지만, 국민국가에 대한 비판자로, 혹은 조선적의 역사적 정체성에서 의미를 찾는 정치적 주체로 살아가려 한다면, 정식 국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정치적 불이익은 이미 감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감내해야 할 몫일 것

한의 어법으로 미군철수를 외치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렸고, 한국의 변화와 정권의 관용성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보수진영의 ‘탄핵 심판’이 국민적 반발 속에서 수포로 돌아간 정치 국면에서, 2005년부터 북한은 한국의 인터넷 공간 등에 ‘반미 민족주의 평화 공세’를 적극 펼치고 있었다(필자는 당시 ‘오마이뉴스’ 등에서 북한의 인터넷 부대를 포함한 해외동포의 필치가 느껴지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지했다). 필자는 정**씨가 결코 위협적이거나 무모한 사람이 아니며, 그의 학술 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의 반미 민족주의가 남한에서 생생하게 재현되는 것을 ‘탈분단’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전개된 조선적의 통일표상과 통일운동을 수궁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적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정부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55)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금지 이유에 대해서는 文部科學省, “朝鮮學校への補助金に關する都道府”(2013);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jcsFiles/afieldfile/2013/12/27/1342846_03.pdf> (검색일: 2015.4.1).

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 동족차별을 항의한다면, 북한 동족의 자유로운 해외 출입국이나 북송 동포의 자유로운 일본 방문을 위해서도 싸워야 공평할 것이다. 만일 북한 정권의 정치적 불관용성 때문에 북 동포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 한국과 일본의 국가적 폭력을 비판해 온 자신들의 정치적 당파성과 주체적 실천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재일조선인 담론에 나타난 '기민' 의식을 넘어서 스스로 정치적 책임 주체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정치적 실천에 대한 '중북 비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과 일본의 재일조선인 담론에서는 '남도 북도 아닌 무국적자'로서 조선적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북한과의 역사적 흔적을 소거하기 전에, 먼저 조선적의 정치성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조선적 사회와 재일조선인 담론에서 '남과 북, 그리고 일본'에 관련한 역사적, 정치적 문제를 균형감 있게 성찰하면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제기할 때, 한국 정부와 연구자들도 그 신념과 실천을 존중하면서 상생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접수: 2015년 5월 5일 / 심사 : 2015년 5월 18일 / 게재확정: 2015년 5월 18일

【참고문헌】

국문 논문 및 단행본

-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9.
- 강원봉·도베 히데아키·미쓰이 다카시·조관자·차승기·홍종욱.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 서울: 아연출판부, 2014.
- 서경식. “재일조선인이 나아갈 길: ‘에스닉 마이너리티’인가 ‘네이션’인가.” 『창작과 비평』 제102호(1998년 겨울). pp.353~371.
- 서경식 지음. 형진의 옮김.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 서울: 반비, 2012.
- 유현수.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제12호(2015년 2월). pp.72~101.
- 이광규. 『在日韓國人: 生活實態를 中心으로』. 서울: 일조각, 1983.
- 장인성 편. 『전후 일본의 지식풍경』. 서울: 박문사, 2013.
- 정인섭.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1호(2014). pp.1~24.
- 정인섭. “재일한인의 국적과 남북한의 국적법 개정.”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9.
- 조경희. “탈냉전기 재일조선인의 한국이동과 경계 정치.” 『사회와역사』 통권 제91호(2011년 9월). pp.61~98.
- 조경희. “남북분단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통일인문학』 제58집(2014년 6월). pp.253~277.
- 조관자. “내재적 발전론의 네트워크, ‘민족적 책임’의 경계.” 강원봉 외.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 서울: 아연출판부, 2014.
- 조관자. “전후 재일조선인의 해방운동과 지식의 정치성.” 『일본사상』 제22호(2012). pp.193~214.
- 한영구·윤덕민 공편저.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1(1965년~1979년)』. 서울: 오름, 2003.

일문 논문 및 단행본

- 公安調査廳. 『朝鮮總連を中心とした在日朝鮮人に關する統計便覽 昭和56年版』. 東京: 公安調査廳, 1982.
- 金石範. “在日の虚構.” 『在日の思想』. 東京: 筑摩書房, 1981.

- 金時鐘. “お互いを見つめなおす契機となるよう” 『部落解放』 第511號(2003년 1월)
- 金英達. 『日朝國交樹立と在日朝鮮人の國籍』. 東京: 明石書店, 1992.
- 金有燮. “民族の誇りをかけた闘い: 民族教育と集團主義教育の意味”. 『部落解放』 第687號(2014年 1月). pp.24~33.
- 金贊汀. 『在日義勇兵歸還せず 朝鮮戰爭秘史』. 東京: 岩波書店, 2007.
- 李東準. 『日本にいる朝鮮の子ども: 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 東京: 春秋社, 1956.
- 李瑜煥. 『在日韓國人60萬-民團朝總聯の分裂と動向』. 東京: 洋洋社, 1971.
-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その生活・運動研究序説” 『季刊三千里』 第1號(1975年 春). pp.194~197.
- 朴斗鎮. 『朝鮮總連: その虚像と實像』. 東京: 中公新書, 2008.
- 山野車輪. 『在日の地圖: 大韓棄民國物語』. 東京: 海王社, 2006.
- 山村政明. 『いのち燃えつきるとも』. 東京: 大和書房, 1971.
- 徐京植. “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がネーションが”. 『歴史學研究』 増刊號(1997年 10月).
- 徐京植. 『在日朝鮮人ってどんな人?—中學生の質問箱』. 東京: 平凡社, 2012.
- 徐勝. 『東アジアの國家暴力と人權・平和』. 東京: 立命館大學法學叢書, 2011.
- 篠崎平治. 『在日朝鮮人運動』. 長野: 令文社, 1955.
- 宋基燦.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學校』. 東京: 岩波書店, 2012.
-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 東京: 岩波新書, 2015.
- 鄭大均. 『在日韓國人の終焉』. 東京: 文藝春秋, 2001.
- 池東旭. 『在日をやめなさい—70萬人の優秀なマイノリティに告ぐ!』. 東京: ザマサダ, 1997.
- 坂中英徳. “今後の出入國管理行政のあり方について.” 『入管月報』 第176號(1976).

영문 단행본 및 논문

- Burgess, Chris C. 2007. “Multicultural Japan? Discourse and the Myth of Homogeneity.” *The Asia Pacific Journal: Japan Focus*; <<http://www.japanfocus.org/-Chris-Burgess/2389>>
- Hester, Jeffrey T. “Datsu zainichi-ron: An Emerging Discourse on Belonging among Ethnic Koreans in Japan,” Nelson H. H. Graburn, John Ertl and R. Kenji Tiemey ed, *Multiculturalism in the New Japan: Crossing the Boundaries Within*, New York: Berghahn Books, 2008. pp.139~150.

신문기사

- “특파원 리포트! 조선총련 간부들도 사석에선 北 비판… 젊은 활동가들은 北 추종만 말고 독립활동 하자고 해.” 『조선닷컴』, 2010년 2월 10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0/2010021000082.html>.
- “‘조선적’은 적대적? ‘조선적’ 재일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요청 거부는 정당하다 판결한 대법원, 재일동포 역사와 현실 무시한 처사.” 『한겨레 21』, 제991호 (2013년 12월 19일).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004.html>.
- “조선적 입국 문제 후퇴…재일조선인들의 ‘토로.’” 『연합뉴스』, 2014년 3월 13일.
- “조총련, 국내 입·출국 완전허용?...논란 ‘일파만파.’” 『뉴데일리』, 2011년 7월 5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84748>>.
- “在日詩人の詩と音楽が融合 金時鐘さん, 京都で公演.” 『共同通信』, 2003년 7월 3일; <<http://www.47news.jp/CN/200307/CN2003070301000545.html>>.

인터넷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20일; <<http://www.law.go.kr/main.html>>.
- 대한민국 민단. “민단과 재일동포의 통계”; <<http://www.mindan.org/shokai/toukei.html>>.
- 배덕호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등 돌린 정부, 거드는 대법원.” 『프레시안』, 2013년 12월 18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573>>.
- 통일부 통일 미래 길잡이 북한 전망대. “화려한 허상,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의 비극.” 2015년 2월 18일; <<http://blog.unikorea.go.kr/4850>>.
- 文部科學省. “朝鮮學校への補助金に関する都道府” (2013);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icsFiles/afieldfile/2013/12/27/1342846_03.pdf>.
- 日本 文部省. “資料1 高校無償化に係る朝鮮高級學校の審査狀況.” 2012년 3월 26일; <http://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detail/1342909.htm>.
- 日本 總務省 統計局. “人口推計.” 2014년 5월 20일; <<http://www.stat.go.jp/data/jinsui/pdf/201405.pdf>>.
- 日本國籍のなしくずし剝奪を許さない會. “1952年 4月 19日付け 民事甲 第438號 法務府民事局長通達”; <<http://www.kokuseki.info/kitei/tsutatsu/1952-04-19.html#chu1>>.
- 戦後昭和史. “うどん・そばの價格推移”; <<http://shouwashi.com/transition-noodles.html>>.

Beyond the consciousness of “Abandoned people” in the
discourses of Jaeil Joseonin
: Thinking of the political subjectivity

Jo, Gwan-ja (IJ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Zainichi Korean with Joseon-jeock (Chōsen-seki in Japanese)'s senses of belongingness and being abandoned. In general, Korean residents' nationalities in Japan a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Joseon-jeock, South Korean, and Japanese. Althoug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regarded those with Joseon-jeock as its expatriates, in reality Joseon-jeock has been the temporary status of Japanese foreigner register since 1947. From the late 1990's, many of Zainichi Koreans with Joseon-jeock have changed their nationality to South Korea or Japan. Recently, some of Zainichi Koreans with Joseon-jeock asserted independence of the Chongryeon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ven after renouncing Joseon-jeock, some of Zainichi Koreans still have a sense of ethnic subjectivity while they refuse to belong to Korea or Japan as nation states.

Zainichi Koreans (Jaeil Joseonin in Korean) continually maintaining Joseon-jeock have asserted that South Korea has to achieve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through withdrawal of the U.S. Armed Forces and

abandoning anti-sentiment against North Korea. To prevent dissemination of their political ideolog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restrained their political activities in its territory, and refused the issue of “travel certificate” to Zainichi Koreans with Joseon-jeock since 2009. Accordingly, critical public opinion against this harsh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risen up. This paper will rethink of Zainichi Koreans with Joseon-jeock’s sense of belongingness, and the discourses of “Abandoned people”.

Key words: belongingness, Abandoned people, political subjectivity, Joseon-jeock (Chōsen-seki in Japanese), Jaeil Joseonin, travel certificate

조관자(Jo, Gwan-ja)

도쿄대학교 총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본 주부(中部)대학에서 근무한 뒤,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논문으로 “Beyond the criticism of assimilation: rethinking the politics of ethno-national education in postwar Japan” (Inter-Asia Cultural Studies)와 “일본 우익사상의 부흥과 ‘좌우합작’ 등이 있으며, 최근 저서로 『일본, 상실의 시대를 넘어서』(편저),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다』(공저)가 있다.

북한의 망명음악가 정추 연구

: 초기 교향악을 중심으로 *

이경분 (서울대 일본연구소)

국문요약

1923년 광주에서 출생한 작곡가 정추는 일본유학을 했고, 해방 후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모스크바 유학 중에 망명하여 2013년 카자흐스탄에서 일생을 마친 망명음악가이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출판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작곡가의 1차 자료를 분석했다는 의미뿐 아니라, 정추의 음악에 관한 첫 학술적 논문으로서 의미가 크다. 2013년 알마티에서 사망한 정추의 유물은 현재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및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유족이 나누어 소장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초기 교향악만을 중심으로 그가 어떤 음악가였는지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정추의 초기 교향악을 중심으로 망명생활이 그의 음악세계에 남긴 흔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추의 악보와 자필 원고 및 연주회 프로그램, 녹음자료, 사진, 신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삶을 간단하게 그려보고, 초기 오케스트라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음악 언어를 추출해 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추 음악의 평가에 대한 신빙성 없는 말들로 혼란과 오류가 재생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연구의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정추, 김순남, 윤이상, 민족음악, 북한 망명음악가

* 본 논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지원한 정추음악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술된 보고서를 대폭 보완,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

I. 시작하며

작곡가 정추는 1923년 광주에서 출생하여 일본유학을 하였고, 해방 후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모스크바 유학 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일생을 마친 망명음악가이다. 정추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매체에서 간간히 보도되는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제대로 학술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정추가 언급되는 유일한 학술적 연구로 논문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창작가요”가 있지만, 그 속에서 정추에 관한 것은 3페이지에 불과하다.¹⁾ 오히려 인터뷰 “[대담] 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정추를 소개한 글로서 의미가 크다.²⁾ 정추의 생애에 대해 양적으로 가장 방대하게 서술한 단행본으로는 『정추: 북한이 버린 천재 음악가-反김일성 투쟁에 앞장선 차이코프스키의 4대 제자』(2012)가 있다. 하지만,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부족하고 역사적 사실을 간과한 오류와 모순된 정보가 많아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필요한 책이 되었다.³⁾

한국 근대 음악사에는 정추처럼 잊혀져버린 음악가들이 적지 않은데, 특히 북한으로 간 이들의 발굴과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⁴⁾ 남한

1) 김보희,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창작가요,” 『한국음악연구』 제42집(2007년 12월), pp.41~76.

2) 주성혜, “[대담] 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 『낭만음악』 통권 제19호(1993년 6월), pp.9~25.

3) 구혜우·송홍근, 『정추: 북한이 버린 천재 음악가-反김일성 투쟁에 앞장선 차이코프스키의 4대 제자』(서울: 시대정신, 2012). 한 가지 예만 들면 정추가 1956년 모스크바의 차이코프스키 음대 졸업 시험에 참여한 시험관으로 (이미 1953년에 사망한) 프로코피에프와 유명한 쇼스타코비치가 들어 있었다고 서술되어 있지만(p.49), 최근 입수된 심사위원 명단에는 없다. 한국근대문화연구소, “작곡가 정추 수증자료 목록화 및 연구(결과보고서),”(2015년 4월), pp.160~161.

4) 북한으로 간 김순남, 이건우, 안기영, 문학준 등 뛰어난 음악가들은 더 연구되

에서는 정추가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존재자체가 오랫동안 부정되었다면, 북한에서는 그가 김일성에 반대하여 소련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한 금기시 되었다. 정치와 무관한 듯 보이는 음악이 한반도에서는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민족사의 불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음악가임에도 음악으로 그의 존재를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잣대로 음악가를 재단하고 배척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근시안적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그 잣대도 달라지므로, ‘멀리 보는 한반도의 근대음악사’를 위해서는 음악가들이 남긴 작품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인 음악 대가로 유명한 윤이상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음악가로서 한평생을 살았지만, 한반도에서는 그를 오로지 정치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경향이 여전히 팽배하다. 세계적 음악가들이 그의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그의 음악은 환영받기는커녕 배척당하고 있다.

물론 북한으로 간 또는 북한에서 망명한 음악가를 연구하면서 그 정치적 배경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작품의 탄생과정에서 작곡가의 아이디어가 정치적 사실에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작곡가는 음악으로 말해야 하고 음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작곡가 정추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은 그의 인생 여정이 아니라, 결국 음악이어야 한다.

어야 하고, 광주사람으로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 음악가로 칭송되는 정율성, 상해음악원에서 유학하였고 모택동과 반대진영에 있었던 장개석 쪽의 음악가로서, 그리고 상해임시정부의 항일음악가로서 많은 음악을 창작했던 부산출신의 한형석(韓亨錫, 후에 韓悠韓으로 개명함) 등에 대해서도 망명음악가로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오금덕·양무춘, “항일시기 작곡가 한유한에 대한 기초 조사보고서,” 『한국음악사학보』 20집 1호(1998), pp.515-521.

본 논문은 지금까지 출판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작곡가의 1차 자료를 분석했다는 의미뿐 아니라, 정추의 음악에 관한 첫 학술적 논문으로서 의미가 크다. 2013년 알마티에서 사망한 정추의 유물은 현재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및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유족이 나누어 소장하고 있다.⁵⁾

본 논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초기 교향악만을 중심으로 그가 어떤 음악가였는지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케스트라 음악인 교향악을 먼저 다루는 것은 이것이 작곡가의 기법 수준과 스케일을 가늠해볼 수 있고, 작곡가에게는 모든 상상력과 기량을 펼쳐 보여줄 수 있는 음악적 실험의 장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정추의 초기 교향악을 중심으로 망명생활이 그의 음악세계에 남긴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⁶⁾ 이를 위하여 정추의 악보와 자필 원고 및 연주회 프로그램, 녹음자료, 사진 그리고 중앙아시아 동포신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삶을 간단하게 그려보고, 오케스트라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음악 언어를 추출해볼 것이다. 특히 한민족의 민속적 선율을 선호한 그의 음악은 김순남, 안익태, 나운영 등 20세기 한국 음악가들의 작업과 일맥상통한 측면도 있다. 동시에 현대성을 추구한 김순남, 나운영 음악과 달리 정추의 음악은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분위기에서 탄생한 만큼 소련의 음악정치사 맥락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이 정추 음악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정추의 음악 세계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제대로 잡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5) 한국근대문화연구소, “작곡가 정추 수증자료 목록화 및 연구(결과보고서),” pp.5-68 참고.

6) B. G. 에르자코비치 박사의 글 “작곡가 정추의 음악세계에 대해”와 이를 정추가 직접 자필 번역한 문서(이하 “정추 자필 번역본”이라 칭함)에는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을 1956년 작으로 기록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1958년 출판된 악보의 연도를 작품 탄생 연도로 보고자 한다.

작곡가의 인터뷰나 신문기사 및 음악회 프로그램에서 정추의 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가 모순된 채 난무하는 상황이다.⁷⁾ 문헌 검토와 철저한 확인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무질서한 작품명에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II. 망명음악가 정추의 음악적 삶

1. ‘자발적인’ 망명

‘망명’의 좁은 의미는 정치적 박해를 받아 고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⁸⁾ 정추의 경우는 북한에서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난 후, 1956년 소환 명령을 받고도 북한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소련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여 ‘자발적인’ 망명자가 되었다. 망명에는 외부의 강제를 받았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자발적인 망명’이라는 말은 모순을 안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정치적 반대자들이 가할 위협을 미리 대비하여 생명을 보존하고자 취하는 ‘자발적인’ 행위에도 외부의 강제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히틀러 제국 시기 미국으로 망명한 헝가리 음악가 벨라 바르톡(Bela Bartok)의 경우가 자발적인 망명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유

7) 송홍근, “박제가 된 천재음악가 정추,” 『주간동아』 792호(2011년 6월 20일), pp.34-37. “양림동이 낳은 천재 음악가 정추 추모공연,” 『전남일보』(2012년 8월 1일)에도 ‘천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 정추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

8) 이경분, 『망명음악 나치음악: 20세기 서구음악의 어두운 역사』(서울: 책세상 2004) 참고.

대인이 아니었으므로, 나치의 일차적인 위협을 받지 않았지만, 다가올 나치의 야만적인 문화적 억압을 개인적인 위협으로 느끼면서 고향을 떠나 미국에서 가난한 망명음악가로 1945년에 생을 마쳤다.⁹⁾

정추의 망명은 바르톡의 경우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지만, 남북의 분단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윤이상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이다. 망명의 동기와 그 전개는 차이가 있지만 처음에 유학을 갔다가 나중에 망명자가 된 것은 같다. 즉, 정추는 1952년에 모스크바로 유학을 갔다가¹⁰⁾ 2013년 망명지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했고, 윤이상은 1956년 유럽으로 유학 갔다가 1995년 망명지 독일에서 세상을 떠났다.

물론 윤이상이 독일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이유에서 망명자로 볼 것이지에 의문을 품은 독일어권 연구도 있지만,¹¹⁾ 한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분명 망명 음악인이었다.¹²⁾ 1956년 남한에서 파리로 유학을 갔다가 1957년 서베를린으로 옮겨 공부하였고, 북한을 방문한 것이 빌미가 되어 윤이상은 1967년 간첩 혐의로 남한에서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국제적인 예술인의 적극적인 구명 운동 덕분에 1969년 남한에서 추방되어 서베를린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윤이상은 20세기 서구음악의 중심지인 독일에서 현대음악의 거장으로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 동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서구의 인정을 받았던 그였지만 고향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추방된 자였다.¹³⁾

9) 위의 책, pp.28~30.

10) 1952년은 육이오 전쟁 중이었지만, 정추는 북한 정부의 장학생으로 모스크바로 유학할 수 있었다. 북한은 전쟁 중 인력 소모에 대처하기 위해 유학 사업을 전개했다고 한다.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았던 정추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주성혜, “[대담] 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 p.16.

11) Ilja Stephan, “Isang Yun-Im Spannungsfeld der Kulturen und politischen Systeme,” Ferdinand Zehenreiter ed., *Komponisten im Exil* (Berlin: Henschel Verlag, 2008), pp.243~258.

12) 이경분, “망명음악가 윤이상,” 『동양정치사상사』 제10권 제1호(2011), pp.195~215.

정추 역시 카자흐스탄의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오랜 망명 생활을 거치며 뿌리 뽑힌 자로서 생애 마지막 20여 년간 이미 작곡가로서 활동을 중단했음을 그의 작품 연보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정추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활동하면서 일생 동안 북한 방문은 하지 못했다. 반면 한·소 교류의 물꼬가 트이면서 1991년부터 광주 출신인 정추에게 고향 방문의 길이 열렸다. 사망할 때까지 고향 통영의 땅을 밟지 못한 윤이상과 달리, 북한에 적대적이었던 정추는 중앙아시아 한인교포의 대표 음악가라는 위상을 지니고 끊어졌던 고향 광주와의 재결합을 어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었다.

2. 정추의 음악적 성장과정

카자흐스탄의 망명음악가라는 길을 가기 전 정추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광주에서 태어난 정추가 음악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그가 일찍이 서양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음악적인 가족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만석꾼이었던 외가의 셋째 외삼촌 정석호는 1920년대 베를린 음악원을 다닐 정도로 음악적으로 앞서갔다. 외삼촌 덕분에 정추는 어렸을 때부터 그랜드피아노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실제 베를린 예술대학(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¹⁴⁾의 문서보관소에서는 ‘Chung, Suckhoe’라는 철자로 적힌 정석호의 이름이 베를린 음악학교의 전신인 스테른 콘서

13) “망명 지성인은 모두 상처 입은 자”라는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의 말처럼, 윤이상도 일생동안 고향과의 관계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였다. 위의 논문, pp.196~197.

14) <http://www.udk-berlin.de/sites/content/themen/fakultaeten/musik/index_ger.html> (검색일: 2015년 4월 30일).

바토리(Das Stern'sche Konservatorium)의 학적부에 2년간(1924/25~1925/26) 공부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당시 함께 공부했던 한인으로는 별교 출신의 음악가 채동선이 유일하다. 채동선은 1925/26년의 자료에만 등록되어 있으므로, 정석호가 채동선보다 1년 먼저 그리고 1년 더 오래 공부한 셈이다.¹⁵⁾ 정석호는 성악(Gesang)을 전공했으며, 스승은 알프레드 미헬(Alfred Michel)이라고 되어있다.¹⁶⁾ 일본 유학도 아니고 베를린 유학까지 했지만, 정석호는 귀국 후에 전문 음악가의 길을 가지 않았고, 전문적 '음악 애호가'로 남았는데, 한국 근대 음악사의 독특한 사례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영화감독인 형 정준채도 음악적으로 다재다능하여 여러 가지 서양 악기를 다룰 수 있었다고 한다. 형과 함께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의 교향곡을 함께 들으면서 키운 서양음악 감수성은¹⁷⁾ 1940년 일본 유학으로 이어졌다. 정추는 도쿄에 있는 제국음악학교에서 나운영, 전봉초 등을 사귀었고, 이후 일본대학 예술과에서 이케노우치 도모지로(池内友次郎)에게 배웠다고 한다. 파리 음악원 출신의 이케노우치는 윤이상의 스승이기도 했다.¹⁸⁾ 윤이상은 1939년부터 배우다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로 귀국하였으므로 두 사람이 만날 기회가 있었으리라 추측되지만, 정

15) 1925/26년 연감(Jahresbericht)의 기록에 따르면 채동선은 바이올린 전공이었고, 스승은 루이스 반 라르(Louis Van Laar)로 되어 있다. Das Stern'sche Konservatorium, *Jahresbericht über das 76. Schuljahr 1925-26*, p.20.

16) 독일 학기의 시작과 끝은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는 슈테른 콘서바토리오도 마찬가지이다. 정석호는 1924년 9월부터 1926년 8월까지 연감에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다. 위의 문서 참고.

17) 그의 감수성은 이후 1936년 광주일고 음악교사 최동희와 서울 양정 중학교 교사 최창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주성혜, "[대담] 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 p.12.

18) 루이제 린저 지음, 홍종도 옮김, 『윤이상-루이제 린저의 대담: 상처입은 용』(서울: 한울 1988), pp.55~56.

추는 윤이상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한국인과의 여러 인터뷰에서 정추는 윤이상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며 북한에 호의적이었던 윤이상과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자 했다.¹⁹⁾ 같은 스승에게 배웠지만, 두 사람의 음악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정추는 1943년 전쟁 막바지에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였다. 노동인력으로 징집되어 오사카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귀향했다. 광복 직후 광주서중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형 정준채를 찾아 1946년 평양에 간 후, 그곳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6년 후인 1952년 국비장학생으로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에 유학을 간다. 그곳에서 아나톨리 니콜라에비치 알렉산드로프(Anatoly Nikolayevich Alexandrov 1888~1982)에게 지도를 받아 1958년 졸업했다.²⁰⁾

이 졸업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을 근거로 앞서 언급한 단행본 『정추: 북한이 버린 천재 음악가』에는 ‘천재 음악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²¹⁾ 하지만, 서양음악사에서 천재는 독학을 하거나 스승도 제대로 없는 경우도 흔할 뿐 아니라, 학교 졸업점수가 우수해서 천재로 불린 적은 한 명도 없다. 음악 천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건은 자신의 독창적 길을 개척하여 남긴 예술작품이다. 소련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Dmitri Dmitriyevich Shostakovich)가 천재 음악가로 불리는 것은 그의 우수한 졸업 점수 때문이 아니라, 졸업 후 그가 창작한 작품이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정추를 ‘천재음악가’로 칭하기 전에 먼저 그의 음악을 제대로 평가하

19) “나를 윤이상 같은 변절자와 비교하지 말라,” 『신동아』 647호(2013년 8월), pp.324~335; 구해우 외, 『정추: 북한이 버린 천재 음악가』, pp.164~166.

20) “정추 자필 번역본,” p.1.

21) 구해우 외, 『정추: 북한이 버린 천재 음악가』, p.49. 또한 이 책에서는 “1937년 9월 11일 17시 40분 스탈린”을 독립적인 교향조곡의 제목인 듯 서술하지만 (p.25), 이 곡은 2008년 연주회 때, 1972년에 작곡한 <극적 교향조곡>에 소재목을 따로 붙인 것에 불과하다.

는 일이 급선무이다.

3. 소련에서 망명음악가로

1) 정추는 왜 망명을 선택했는가?

1946년부터 1952년까지 정추의 삶(북한 시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많지 않다.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겠지만, 그의 인터뷰 자료를 종합해 보면, 그가 북한에 머물면서 했던 활동은 크게 세 가지이다. 평양국립영화촬영소에서 형의 일을 도우면서 영화음악을 담당하였던 것, 평양음악대학에서 서양음악사를 강의한 것, 그리고 노어대학에서 2년간 러시아어를 공부했던 것이다. 영화음악 일을 하면서 김순남에게 타이틀 음악을 의뢰하게 되어 김순남과도 교류했다고 하지만, 이 활동은 후에 정추의 삶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은 듯 그의 작품 목록에는 영화와 관련된 작품은 전혀 없다.²²⁾ 반면, 음악사 강의와 러시아어 학습은 간접적이거나 그의 망명과 연관이 있다. 음악사 강의는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욕망을 불러 일으켰고, 당시 북한에서 구할 수 있었던 자료가 주로 러시아어로 되었던 것은 러시아어 학습의 동기가 되었다.²³⁾ 그리고 러시아어 능력은 북한의 국비유학생 선발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었다. 결국 정추는 1952년 김순남과 같은 해에 국비 유학생으로 선정되었다.²⁴⁾ 1952년이

22) 주성혜, “대담 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 pp.20~22; “정추 자필 번역본” 참고.

23) 위의 글, p.14. 정추는 그 후 인터뷰에서는 러시아어를 학습한 이유가 북한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인과론적으로 말한다. 구해우 외, 『정추: 북한이 버린 천재 음악가』, p.45.

24) 김성동, “현대사 아리랑 조선 제일의 작곡가 김순남 下,” 『위클리 경향』 제806호 (2008년 12월 30일).

라면 6·25 전쟁시기였지만,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간부 양성을 위해 시작한 유학생 사업을 전쟁 시기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²⁵⁾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정추에게 1956년은 중요한 생의 전환기가 되었다. 스탈린이 죽은 지 3년이 지난 후인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에 대한 비하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기는 무너지고 해방기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 때, 북한 유학생들도 김일성 비판을 시작하였다. 정추는 강한 반체제 입장을 표명했던 인물에 속했다. 그가 북한을 비판하는 이유는 북한에 거주할 때부터 ‘이방인’으로서 북한의 ‘비과학적’인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에 실망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⁶⁾ 구체적으로 정추의 인터뷰를 분석해 보면, 음악가로서의 관점이 중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김순남의 숙청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추에 따르면, 김순남 숙청의 이유가 작품 속에 6도 도약 음정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부르주아 작곡가’라는 혐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순남이 해방공간에서 작곡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인민항쟁가〉의 가사 “원수와 더불어 싸우다 죽은”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²⁷⁾

해방 직후 김일성은 김순남, 이태준, 최승희를 ‘자랑스러운 민족적 천재’로 높이 평가하였으나, 1953년부터 시작된 남로당계의 숙청과 함께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이들을 비판하고 숙청했음은 정추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남한 출신인 정추 자신도 김순남처럼 북한

25)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문경옥도 국비 장학생으로 레닌그라드에 7년간 (1947~1954) 유학을 했다. 정창현, “북의 첫 여성작곡가 문경옥(상),” 『민족21』 통권 제81호(2007년 12월), pp.118-127 참고.

26) 구해우 외, 『정추: 북한이 버린 천재 음악가』, p.45.

27) 주성혜, “대담 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 p.15. 김순남이 숙청당할 이유에는 그가 박현영에게 축하하며 연주한 즉흥 피아노곡도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에 돌아가면 신변이 위태로워지리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문제는 더 자세하게 분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카자흐스탄 망명생활의 세 시기

정추의 망명 생활은 그의 작품과 삶을 참고로 할 때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서술해 볼 수 있다. 망명 초기는 모스크바 음악원 졸업과 함께 소련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여 북한 당국의 입김이 비교적 먼 곳인 중앙아시아에 정착하게 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제2의 고향이 된 카자흐스탄은 서구 현대음악의 흔적을 거의 느낄 수 없는 변두리였다. 이 시기에 정추의 대표적 오케스트라 음악이 모두 탄생한다. 하지만 산업화의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알마티의 고령인 사회에서는 교향곡에 관한 수요보다는 합창곡, 가곡, 민요 편곡, 연극을 위한 음악의 수요가 더 많았으리라 추측된다. 정추는 알마티의 고령 연극단을 위해 〈희망의 오솔길로〉(1971), 〈봉이 김선달〉(1975)과 같은 연극 음악 등을 작곡하였고, 국립 고령인 극장의 가무단을 위해 가극 〈아리랑〉을 작곡하였다고 한다.

망명 중기는 그의 직업 활동에 변화가 있는 1970년대 말부터 정년퇴임하는 1990년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79년 카자흐스탄 국립사범대학에서 “소련 한인의 가요 문화”에 관한 연구로 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정추의 삶은 교육과 연구 활동이 주를 이루게 된다. 즉 망명 생활이 깊어질수록 작곡가로서의 활동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고령인 민속음악을 채보한 민속음악학자로서의 활동은 활발해진다.²⁸⁾ 정추가 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작곡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²⁹⁾

²⁸⁾ “정추 자필 번역본,” pp.6~8.

교향곡 창작은 서구적 콘서트 문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카자흐스탄에서 그의 교향곡 작곡이 1977년 〈조곡 풍년절〉³⁰⁾로 끝나는 것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교향곡 연주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의 상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작곡가로서의 자부심도 점차 열어질 수밖에 없었으리라 추측된다. 다시 말해, 교향곡 작곡의 중단은 정추가 후에 민속학자, 음악학자로 진로를 변경하는 중요한 전환과도 맞물려 있었다고 추측된다.

망명 말기는 1990년 정년퇴임 후부터 임종까지로 볼 수 있다. 그는 대학 강사, 카자흐 공화국 작곡가 동맹 중앙위원, 검열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지만, 망명 중기에 그나마 간헐적으로 하던 작곡은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 같다.³¹⁾ “한국 오페라, 오페레타, 발레 음악, 교향악, 실내 음악을 쓸”³²⁾ 계획은 실천에 옮겨지지 못한 채 그는 2013년 90세의 나이로 알마티에서 세상을 떠났다.

음악 연주는 작곡가의 창작 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정추에게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가 창작한 작품은 서구는 물론이고, 소련에서도 한국에서도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소련연방공화국의 붕괴 이후 한·소 외교관계가 맺어질 무렵, 한국과 소련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한·소 작곡가 작품교류 발표회에서 거의 처음으로 정추의

29) 러시아어로 『한국 민요의 음악적 형식의 몇 가지 특수성』(1986), 논문 “한인의 역사민요”(1973), “아리랑 모음의 서정적 민요”(1975), “소련 한인의 새 노래 장르”(1975) 등을 발표했다. 위의 글, p.9.

30) 주성혜의 “[대담] 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 속 작품목록(p.20)에는 〈조곡 풍년절〉이 없다. B. G. 에르자코비치 박사의 글 “작곡가 정추의 음악세계에 대해”(정철훈 옮김), p.2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유족 대표 정철훈은 최근 〈조곡 “풍년절” 전 4악장〉의 1977년 녹음 자료를 발굴했다. 이에 따라 교향곡이 총 6곡으로 보이지만, 악보의 부재로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31) 한국근대문화연구소, “작곡가 정추 수증자료 목록”(2015년 4월) 참고.

32) “정추 자필 번역본”, p.6.

작품이 소개되었다.³³⁾ 그리고 2007년 제1회 광주국제음악제에서 정추의 음악만으로 구성하여 연주회를 했고,³⁴⁾ 2008년 제4회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에서 (같은 광주 음악가) 정추의 교향곡을 한 곡 연주했다. 또한 2008년 탄생 8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그의 작품 세계만을 다룬 음악회가 개최되었지만, 이미 꺼진 창작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지는 못했다.³⁵⁾

Ⅲ. 정추 작품 제목의 일관된 사용에 관하여

먼저 그의 초기 작품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통일성 없는 작품 제목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작곡가로서 정추의 기량과 스케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오케스트라 음악인데, 모두 망명초기에 집중되어 있다. 1988년 정추가 살아있을 때 발표된 카자흐스탄 음악학자 B. G. 에르자코비치 박사의 글 “작곡가 정추의 음악 세계에 대해”에는 정추의 교향악으로 〈조선적 주제에 의한

33) 주성혜, “[대담] 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 p.10, 1991년 4월 서울에서 한국과 소련의 창작품 교류 발표회가 있었는데, 재소환인으로 정추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34) 광주국제음악제(정추 편)에서 러시아 국립 이르쿠츠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주최: 광주국제음악제조직위원회, 주관: 문화신포니에타, 후원: 광주광역시 북구청)가 연주하였다.

35) 2008년 연주회 실황중계는 DVD로 남아있다. 그 외, 정추 창작 50주년 기념 음악회 실황(2002년 3월 14일, 알마티 트보르체스키 거리 잠블 필하모니 콘서트홀) 녹음테이프가 남아있다. 또한 이흥기 감독이 만든 다큐 영화 〈미행. 망명자 정추〉가 EBS 방송에서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으로 방송되었다(2010년 1월 12일 21:50).

교향조곡)(1958), 〈칸타타 “고대 수도”〉(1957), 〈교향시 “조국”〉(1958), 〈교향시 “향토”〉(1968), 〈극적 교향조곡 전 5악장〉(1972)의 5곡을 언급하고 있다.³⁶⁾ 하지만 현재 악보로 남아있는 것은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 〈교향시 “조국”〉, 〈극적 교향조곡 전 5악장〉으로 총 3곡이다. 이 중에서 정식으로 출판된 것은 모스크바 콘서바토리의 졸업 작품으로 스승 알렉산드르프의 지도하에 탄생한 첫 작품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 뿐이다.

1958년 모스크바의 국립 음악 출판소에서 4개 언어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불어)의 작품 소개로 출판된 총 53쪽 분량의 악보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 제목이 병행되어 있다.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조선적”이라는 표현과 “교향조곡”이라는 명칭이다. 이러한 악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명은 제각각 다르게 사용되어 혼돈 상태이다. 즉,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 〈한국을 주제로 한 조곡〉, 〈한국적 주제의 교향조곡〉, 〈한국을 주제로 한 교향모음곡〉, 또는 〈조곡〉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작품뿐 아니라, 1972년에 작곡된 〈극적 교향조곡〉은 〈극적 교향 모음곡〉, 〈극적 조곡〉 또는 〈1937년 9월 11일 스탈린〉으로 불리기도 한다.³⁷⁾

36) 주성혜, “[대담] 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 p.20 비교.

37) 송홍근, “박제가 된 천재 음악가 정추,” p.37. 앞서 언급했듯이, 〈극적 교향조곡〉은 어처구니없게도 “1937년 9월 11일 17시 40분 원동 한인 강제 이주 희생에 대한 추억”이라는 부제를 달고 2008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새로 탄생한 작품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극적 교향조곡〉은 이미 1972년에 작곡된 곡이다. “작년 고려인 정추 70주년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그 때 당시 희생당한 선조들의 고통과 아픈 추억을 회고하며 전 5장으로 창작했다”라는 작곡가의 말을 인용한 듯한 표현이 오해의 근원이었다. 알마티의 동포신문 〈The Weekly Korean〉 기사나 연주회 프로그램의 정보, 한국의 각 신문 뿐 아니라, 단행본 『정추: 북한이 버린 천재 음악가』의 서술도 수정을 요한다.

〈사진 1〉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 악보 표지



출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제공

정추의 작품명에 통일성이 없는 것은 정추 음악 연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작을 고려하지 않고 번역자에 따라 다양한 제목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서 작곡가 스스로가 작품명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58년 출판할 때에는 당시 북한의 영향으로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이라 칭했지만, 1990년대 한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같은 작품을 〈한국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으로 칭했다. 구소련 치하의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북한 용어 ‘조선’을 사용하였지만, 1990년대에는 남한과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한국’으로 바꾸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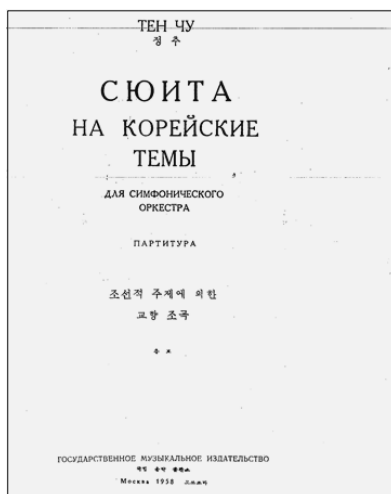
또 다른 예로 ‘조곡(組曲)’이라는 용어도 문제이다. 이 말은 원어 Suite를 일본식으로 번역한 용어이다. 일본이 먼저 번역하여 동아시아에서 통

용되었으므로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이 용어가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음악 장르의 성격을 더 잘 표현해주는 용어 ‘모음곡’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더 많다.

이렇게 난무하는 작품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곡’으로 하든 ‘모음곡’으로 하든, ‘한 곡, 한 작품명’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처음부터 확고하게 정하지 않으면, 정추 연구의 수월한 진전은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한 곡, 한 작품명’ 원칙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작품이 가장 먼저 출판되었을 때의 제목과 필사본의 제목이다. 애매한 경우에는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통일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출판된 총보에 써어 있는 그대로) 첫 교향곡을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으로 일관되게 사용할 것이다. 또한 장르 명칭도 교향모음곡 대신 ‘교향조곡’이라 칭할 것이다.

〈사진 2〉 러시아어와 한글이 병행된 악보 속 첫 페이지



출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제공

IV. 정추의 초기 교향악의 음악 언어

정추가 교향악에서 시도한 것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추의 교향곡에서 두드러진 면은 일반적인 교향곡 형식이 아니라, ‘교향조곡’이라고 칭하면서 교향곡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정추의 교향악이 추구한 것은 민족정서를 표현한 음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왜 ‘교향조곡’인가?

조곡은 원래 춤곡을 나열한 것으로 교향곡의 형식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교향조곡’(交響組曲, Symphonic Suite)이라는 장르명은 주로 (‘조곡’이 일본적 용어이듯이) 일본에서 통용되는 장르이다.³⁸⁾ 이 용어는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이 애매모호하게 사용되어 왔다. 베토벤, 말러의 교향곡과 같은 19세기 개념의 교향곡과 비교해보면, 교향곡은 첫 악장이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고, 각 악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가 하나의 ‘우주적’ 음향 세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교향조곡’은 이러한 교향곡의 소나타 형식과 상관이 없고, 각 악장의 연결도 음악적으로 훨씬 느슨하며, 거대한 음향 세계보다는 사실적인 묘사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더 자세하게 연구되어야겠지만, 대체로 ‘교향조곡’이라 불리는 작품의 유형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발레

³⁸⁾ 그 외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의 음악을 따로 기악곡으로 편곡하여 교향조곡으로 발매하는 경우가 일본에서 흔하다.

곡',³⁹⁾ 둘째는 서사적 내용을 배경으로 작곡한 표제음악적 '교향시',⁴⁰⁾ 셋째는 사실적 묘사와 춤곡을 포함하는 느슨한 형태의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서사적 줄거리가 음악을 이끌어 가는 추진력이 된다면, 세 번째의 경우는 니콜라이 야코비예비치 미야스코프스키(Nicolai Yakovlevich Myaskovsky)의 교향곡 23번⁴¹⁾의 예에서 보듯이 각 악장을 연결하는 음악 외적 줄거리가 약하여 앞의 두 유형보다 더 느슨하다.⁴²⁾ 미야스코프스키의 곡은 교향곡이라고 되어있지만, 중앙아시아의 민속 춤곡을 인용하여 사실적 분위기로 충만한 교향조곡에 속한다.

39) 예로서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이나 구니히토 하시모토(橋本國彦)의 오케스트라 발레곡 〈선녀와 어부(天女と漁夫)〉을 들 수 있다.

40)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드〉, 하야사카 후미오(早坂文雄)의 〈유카르(ユウカラ)〉를 예로 들 수 있다.

41) 제2차 대전 중인 1941년 독일군의 공격으로 모스크바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모스크바에 있었던 프로코피예프와 하차투리안(Aram Il'yich Khachaturian) 등의 음악가들과 함께 미야스코프스키는 중앙아시아 쪽(지금의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의 수도 날치크)으로 피신해야 했다. 낯선 민속음악에 매료된 미야스코프스키는 그곳에서 약 30분가량의 23번 교향곡 A단조(Op. 56)를 작곡하였다. 1악장 Lento, 2악장 Andante molto sostenuto, 3악장 Allegretto vivace로 된 이 교향곡은 전쟁과 피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중앙아시아적인 멜로디를 인용한 것으로 대작이 아니다. 프로코피예프도 1941년 같은 민속선율을 이용하여 현악4중주 2번(Op. 92)을 (Allegro sostenuto, Adagio, Allegro) 3악장으로 작곡했다.

42) 춤곡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 작곡가 제임스 클리프톤 윌리엄스(James Clifton Williams)의 〈Symphonic Suite〉(1957), 기시 고이치(貴志 康一)의 〈일본스케치(日本スケッチ)〉(1934)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기시의 곡은 모두 4악장으로 1악장 “시장(市場)”, 2악장 “밤의 노래(夜の曲)”, 3악장 “가면(面)”, 4악장 “마츠리(祭り)”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일본을 유럽에 소개하고자 하는 기시의 의도는 쿠르트 바일(Kurt Weill) 등의 음악을 모방한 듯한 부분이 많아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시에 관해서는 梶野繪奈·長木誠司·ヘルマン ゴツェフスキ 編著, 『貴志康一と音楽の近代—ベルリン・フィルを指揮した日本人』(東京: 青弓社, 2011) 참고.

정추의 교향조곡은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각 악장에 “조선무용”, “서정적 가요”, “자장가”, “농민무용”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한민족적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웅대한 음악적 우주를 상상하면서 큰 스케일로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낸 베토벤 및 말리의 교향곡과 달리, 정추는 민속적 분위기가 부각되는 소규모(약 12분 정도)의 단순하고 서정적 오케스트라 음악 ‘교향조곡’을 만들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러한 정추의 음악적, 장르적 시도는 소련과 일본 음악계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즉, 정추가 자신의 작품명을 ‘교향조곡’이라 규정한 것은 한편으로 일본 음악계의 관습과 일맥상통하다. 유독 일본 작곡가들이 작품명에 ‘교향조곡’이라 규정한 경우가 흔한 것을 고려할 때, 음악의 기초를 일본 유학 시기에 습득하였던 정추에게 자신의 작품을 ‘교향조곡’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낯설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다른 한편,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알렉산드로프의 지도를 받았던 정추가 모스크바 음악원의 대부이자 교향곡의 대가인 미야스코프스키⁴³⁾의 작품을 모른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⁴⁴⁾ 민속 선율의 춤곡과 악장 간의 느슨한 연결 형태라는 음악적 측면에서 미야스코프스키의 23번과 정추의 작품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3) 미야스코프스키는 1950년에 사망하지만, 정추의 스승 알렉산드로프는 미야스코프스키와 절친한 관계였다.

44) 미야스코프스키가 모스크바 콘서바토리에서 가르친 제자 중에 훗날 유명하게 되는 작곡가 하차투리안이 있는데, 그도 정추에게 영향을 미쳤을 인물로 보인다. 1951년부터 모스크바 콘서바토리 교수였던 하차투리안은 1952년 북한에서 유학 온 김순남을 잠시 지도하였고(김미옥, “특집: 한국음악 20세기; 김순남(金順男)”, 『음악과 민족』 26권, (2003), p.96) 정추의 졸업시험에 시험관 중 한 명으로 들어왔다. 만점을 주자고 한 사람이 하차투리안이었다고 한다. 한국근대문화연구소, “작곡가 정추 수증자료 목록화 및 연구(결과보고서),” pp.160~161.

2. 민족성과 현대성 : 정추와 나운영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교향조곡’으로 정추가 시도한 것은 ‘민족정서를 표현한 음악’이었다. 물론 민족음악의 시도는 비단 정추만 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음악을 배운 한반도의 작곡가 중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해방 직후 함께 활동했던 나운영도 마찬가지였고, 천재적인 작곡가 김순남도 그러하였다.⁴⁵⁾ 문제는 같은 이상을 품고 같은 의도였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하는 음악적 방법과 아이디어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었다. 해방공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한반도 최고의 작곡가 김순남보다는 일본 유학 시절부터 음악적 교류가 있었던 나운영(1922년생)과의 비교가 정추의 음악 언어를 설명하기에 더 적합해 보이므로, 나운영의 민족음악 시도와 비교하고자 한다.

1946년 정추와 나운영은 ‘민족음악연구회’를 결성하여 함께 활동했다. 나운영의 제안으로 정추는 『악학궤범』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⁴⁶⁾ 서로 민족적인 음악을 창작하는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지만, 그 결과의 차이는 해방공간의 소용돌이에서 나타나지 않고, 훗날 각자의 길을 간 이후 교향곡의 작곡에서 드러난다.

남한에서 줄곧 활동했던 나운영은 1958년부터 1974년까지 13개의 교향곡을 작곡하였고, 그 이후부터 타계하기까지 약 20년간 교회음악의 토착화에 심혈을 기울였다.⁴⁷⁾ 나운영이 이상적으로 상상하는 민족음악은

45) 정추는 김순남의 노래에서 “훌륭한 민족정서와 음악의 결합”을 보았다. 일본 유학 시절과 북한에서 영화음악 작업할 때 그리고 1952년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김순남과 만날 기회는 있었지만, 웬지 깊은 교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주성혜, “대담 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 pp.14~15.

46) 북한에서 출판한 『악학궤범』은 현재 국회도서관 정추 컬렉션에 포함되어 보존되어있다.

‘민족성’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것이었다.⁴⁸⁾ 다시 말하면, 나운영은 5음계를 사용하면서, 기능적인 3화음을 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⁴⁹⁾ 그는 3화음의 사용은 이상적인 민족음악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고 믿었다.⁵⁰⁾ 즉 “음악이 보다 한국적이려면 3화음 대신, 전음계적, 4도 음정, 부가화음, 복조, 다조적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⁵¹⁾ 결론적으로 말하면, 3화음의 사용으로 만든 음악은 구시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으므로, 전통음악의 성격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대음악의 기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추는 민족정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하는 데에는 관심이 적었다. 정추는 5음계의 전통음악 선율을 인용하지만, 5음계를 고수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서양적 기능화성과 3화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현대적 음향과는 거리가 있는 19세기 조성 음악적 사운드를 만들어내었고, 전통음악의 분위기도 약화되었다. 이 점에서 정추의 민족적 음악은 나운영이 추구했던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사운드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 의미이다. 나운영의 현대성을 윤이상의 현대적 음악과 비교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윤이상의 음악은 20세기 후반 서구 아방가르드 음악의 최첨단에 섰던 것으로서 ‘음렬주의’라 불리는 음악에 속한다. 반면 나운영의 음악은 복조성 정도의 현대적 색채를 지닌 것에 불과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나운영과 정추 음악

47) 홍정수, “나운영의 음악관: 그의 민족음악론을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제10호 (1995), p.143.

48) 홍정수, “한국음악의 관점(6): 나운영의 이론적 착상,” 『음악과 민족』 제41호 (2011), pp.119-123.

49) “나운영에게 5음계는 ‘민족음악적 상징’이었다. 하지만 5음계의 음악적 예로서 오히려 드뷔시의 음악을 분석하고 있는데, 3음이 없는 빈 5도 화성 등은 현대적인 사운드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위의 논문, p.120.

50) 홍정수, “나운영의 음악관: 그의 민족음악론을 중심으로,” p.141.

51) 위의 논문, p.140.

의 차이는 윤이상과의 차이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3. 민족음악작곡을 위한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정추의 실험

위대한 예술가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음악에 옮겨놓지 않고 훨씬 예술적인 차원으로 형상화한다. 무엇보다도 음악이라는 매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삶과 관련된 텍스트를 끌어오거나, 서정적인 제목을 내세우거나, 멜로디의 인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음악과 삶을 연관 짓는 시도가 가능하다. 미술에서도 삶을 표현할 때, 사실적인 차원에서 추상적인 차원까지 다양한 표현방법이 있듯이, ‘민족적 음악’을 창조하기 위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다양한 차원이 있다. ‘민족음악’을 창조하기 위해 한국 음악가들이 시도했던 방법은 네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한인에게 잘 알려진 민요 선율을 주제로 인용하거나 변주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 특히 아리랑 선율은 가장 선호되는 한민족의 선율 중 하나일 것이다.

둘째로는 작품의 제목과 악장의 소제목에서 민족적 연관성을 나타낸다. ‘아리랑’, ‘코리아’는 한민족과의 연관성을 드러낼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예를 들면, 안익태의 〈코리아 팬터지〉가 그렇고,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 윤이상의 〈Garak〉, 〈Sori〉, 〈Piri〉 등이 그렇다.

셋째로는 5음계와 같은 음악 내적인 요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전통악기의 농현 등을 모방한 연주 주법을 사용해서 서양악기로 한민족 전통의 음색을 만들기도 한다.

넷째, 가장 추상적인 차원인데, 전통음악이 가진 그 원리와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새로이 창작하는 것으로서 ‘재료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윤이상의 음악이다. 다시 말해, 윤이상이 한국적, 동양적 음악을 창조한 방식은 선율을 직접 인용하는 일차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통의 정신세계, 전통음악의 원리를 서양음악 기법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음 하나 하나의 강한 떨림으로 살아 움직이는 전통음악의 원리를 ‘주요음(Hauptton)’이라는 이론으로 만들어, 서구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켰다.⁵²⁾ 그래서 한국인들은 아리랑이나 방아타령 등의 알려진 멜로디가 ‘낯 것’으로 들리지 않는 그의 음악을 두고 “이것이 무슨 한국적 음악이냐”라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적 재료, 동양적 재료의 사용이라는 단순한 ‘재료주의’를 넘어 서양음악계가 납득할 수 있는 동양적 음악을 만들어 보인 것이 윤이상이 세계적 대가로 인정받게 된 핵심이었다. 결국 윤이상은 메이지 시기 이래 수없이 시도되었던 동아시아인의 오랜 염원을 이루어낸 첫 아시아 음악가가 되었다.⁵³⁾

정추의 작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의 첫 작품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에서 〈영산회상〉의 타령, 〈방아타령〉, 〈박연폭포〉의 전통 선율을 인용하였고, 작품명 ‘조선적 주제’ 및 소제목 ‘조선무용’에서도 민족적 연관성을 직접 나타낸다. 예를 들면, 제1악장의 첫 부분에서 〈영산회상〉의 타령 선율을 ‘낯 것’으로 제시하였다.

〈악보 1〉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 1악장 1~5 마디 (이하 생략)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Violini I. The tempo and style are marked 'Andantino, galante'. The score is in 3/8 time and G major (one sharp). The first five measures of the first movement are shown, featuring a melody that is a variation of the traditional Korean 'Yeongsanhwang' (영산회상) taeryeong. The notation includes a treble clef,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3/8 time signature. The melody consists of eighth and quarter notes.

출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제공

⁵²⁾ 윤신향, 『윤이상. 경계선상의 음악』(서울: 한길사 2005), p.89-96.

⁵³⁾ 한국음악가 뿐 아니라 메이지 시기 이래 일본음악가들이 수없이 시도했고, 근대 중국음악가들도 자국의 민족적 선율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선율이 쉽게 각인 되도록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주선율을 솔로로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선율을 튜바, 트럼본과 같은 강력한 금관악기가 다른 파트를 리드하면서 주인공으로 표면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악보 2〉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 2악장 30~34마디. 4관 호른 (corn I, II):
두 번째 악기 그룹

출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제공

또한 세 번째 방법도 사용하고 있지만, 5음계 전통 선율에다 서양 화성을 선호하다보니 그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난다. 특히, 셋째 방법에서 나운영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정추도 전통음악을 “화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의 음악은 나운영의 음악보다 훨씬 화성적이다.⁵⁴⁾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의 1악

⁵⁴⁾ 정추는 전통음악의 아름다운 개념인 “즉흥성, 만중삭(慢中數)의 빠르기 전개,

장은 A장조, 2악장은 E장조, 3악장은 F장조, 4악장은 A장조로 되어있다. 각 악장의 부제와 빠르기, 박자, 조성, 총 마디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악장	부제	빠르기 표기	박자	조성	총 마디 수
제1악장	“조선무용”	Andantino galante 안단티노 갈란테	6/8	A장조	53마디
제2악장	“서정적 가요”	Andante 안단테	3/4	E장조	88마디
제3악장	“자장가”	Calmò e sostenuto 칼모 에 소스테누토	6/8	F장조	32마디
제4악장	“농민무용”	Allegro 알레그로	6/8	A장조	72마디

따라서 5음계의 전통적 선율과 3박자 계열의 리듬에도 불구하고, 선율에 붙은 서양화성 때문에 전통 민속적인 분위기는 퇴색되고, 약간 이국적인 색채를 지닌 19세기말 분위기의 음악이 되었다.⁵⁵⁾

가락의 풀어나감 등을 “눈여겨 살려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주성혜, “대담 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 p.19.

55)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에 사용된 악기는 러시아어와 이탈리아어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악기군	악기	비고
목관악기군	플루트 피콜로, 2플루트, 2오보에, 2클라리넷 (B, A), 2파곳, 잉글리쉬 호른	
금관악기군	4호른(F), 2트럼펫, 3트롬본, 튜바	
타악기군	탐파니, 트라이앵글, 군악드럼, 탬버린, 심벌즈	방울악기 4악장에서 사용
실로폰과 하프	실로폰, 하프	하프는 1악장에서만 사용, 실로폰은 4악장에서만 사용
현악기군	대편성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정추가 일본 유학 시절이나 북한 체류 시기에 작곡한 작품이 없으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망명 초기에 작곡한 작품이 전통적 선율을 내세우면서도 서양식 어법의 사실주의적 음악으로 탄생한 것에 망명지의 영향은 없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추의 작품에서 당대 서구의 모던한 생활 감각을 표현하는 무조적 음악은 회피되고, 19세기적 조성 음악으로 되어있는 것은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음악을 연상시킨다. 예를 들면, 쇼스타코비치는 1935년 ‘형식주의’ 비판으로 위태롭게 되었을 때, 1937년 현대적 음향을 제거한 매우 화성적인 d단조 5번 교향곡을 작곡하여 비판자들에게서 찬사를 받았다.

또한, 추상적인 현대음악을 반인민적인 것으로 비판했던 소련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적인 미학을 선호하는 알렉산드로프가 정추를 지도했던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원래 알렉산드로프는 뛰어난 피아니스트로서 피아노 소나타와 가곡 및 실내악 음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다. 그의 음악은 서구적 취향의 러시아 음악가 스크리아빈(Alexander Nikolajewitsch Scriabin)과 세르게이 다네예브(Sergei Ivanovich Taneyev)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알렉산드로프의 1920년대 작품에는 인상주의적 분위기의 음악이 많았으나, 1932년부터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미학적 대세가 된 이후 알렉산드로프의 음악은 보수화되어갔고 단순한 민족적 음악으로 선회하였다. 1950년대 정추가 알렉산드로프의 제자가 되었을 때 알렉산드로프는 이미 오랫동안 소련의 공식적 음악정책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후기 낭만주의 음악에 기울어 있었던 것이다.⁵⁶⁾

요약해서 말하면, 정추의 초기 교향악은 서구 연주회장에 오르는 교향곡처럼 형이상학적이고, 엘리트적인 것이 아니라, 농민들도 향유할 수

⁵⁶⁾ 알렉산드로프는 아방가르드적 (소위 ‘형식주의’) 음악에 대해 “예술이 아닌 것들”이라고 폄하했다고 한다. “나를 윤이상 같은 변절자와 비교하지 말라,” pp.333-334.

있을 정도로 이해가 쉽고 접근이 용이한 음악 장르가 될 수 있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잘 알려진 〈박연폭포〉나 〈영산회상〉 중 ‘타령’ 등의 선율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과 교향곡의 길이가 짧은 것도 그 의도를 반영한다.⁵⁷⁾ 물론 이러한 정추의 음악은 북한 건국 초기 소련의 영향 하에 형성된 ‘북한식 사실주의’ 음악적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V. 끝맺으며

정추에 대해 제대로 연구되기 전에 ‘천재 음악가’라는 신빙성이 없는 말들로 혼란과 오류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추 음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한 음악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차이코프스키의 4대째 제자”라는 표현은 마치 대단한 음악적 역량을 담보하는 듯 오해되고 있다. 하지만 서구 음악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작곡가에게 이런 표현은 별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베토벤이나 구스타브 말러에게서 배운 제자 중 유명한 음악가는 거의 없다. 반대로 말러, 장 시벨리우스(Jean Sibelius), 후고 볼프(Hugo Wolf), 프란츠 슈레커(Franz Schreker) 등 19, 20세기의 대단한 제자들을 길러 낸 스승 로버트 푸크스(Robert Fuchs)의 이름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작곡가는 스승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치장할수록 음악가의 존재 가치는 오히려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⁵⁷⁾ 물론 이 교향곡을 듣고 민속 선율을 바로 알아차릴 고려인들이 주위에 있었는지, 1950년대 교향곡을 연주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본 논문은 제목을 비롯하여, 작품의 탄생 시기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작업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정추의 초기 망명 음악의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를 가설로서 요약한다면, 정추는 기악곡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지도록, 가창이 가능한 선율과 민속적인 선율을 사용하여 기악곡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을 가능한 한 축소하고 사실성을 드러내는 음악 장르인 소규모 '교향조곡'을 실험했다. 여기서 나타나는 19세기적이고, 민속적인 음악 언어는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미학 및 북한의 사실주의적 음악과 연관성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다시 말해, 정추의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은 한인의 전통적 선율 등 민족음악을 창조하려는 기본 아이디어와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추구하는 인민이 이해하기 쉬운 음악을 창조하려는 의도가 맞물려 만들어낸 첫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것은 소련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북한식 사실주의 음악 경향과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1958년 정추의 초기 작품에는 정추가 그 이전에 접했던 모든 음악적 경험(일본, 북한)과 소련의 리얼리즘적 음악 미학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북한을 거부하고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초기 작품에서 망명 생활로 인한 음악적 변화는 잘 감지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망명 생활이 깊어지면서 음악적 변화가 두드러진다. 즉, 아직 소련에서의 생활이 오래되지 않았던 1950년대, 망명 초기 정추의 음악에는 한민족적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전통 선율의 인용, 3박자 계열의 리듬 사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20여 년의 망명 생활이 지속되면서 망명 중기에는 한민족적 색채는 더욱 벌어지고 중앙아시아적 분위기가 짙어지는 현상이 그의 음악에 나타난다. 오케스트라 음악뿐 아니라 실내악에서도 70년대 카자흐 선율을 이용한 기악곡이 증가하고, 특히 카자흐 민요를 편곡한 대표적 합창곡도 1970년대에 나타난다. 망명 중기

및 후기 그의 음악적 변화는 추후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민속음악학자로서 카자흐스탄에서 주로 한민족의 민속음악을 보존하면서 기록으로 남긴 그의 활동도 망명 음악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20세기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중요한 음악적 증거물'로 재발견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정추 연표]

연도	주요 정보
1923.12.25.	광주 출생
1940	서울 양정중학교 졸업.
1940~1943	일본대학교 예술과 수학.
1946.12.	월북
1950.	평양노어대학 졸업. 평양음악대학 교수
1952.	국비장학생으로 선발. 모스크바 유학.
1956.	반김일성, 반체제 운동 가담.
1958.	모스크바 음악원 졸업.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 악보 출판. 소련 망명. 알마티에 정착.
1959.	카자흐스탄 국립사범대학 음악학부 전임강사.
1978.	동 대학 음악학부 정교수.
1979.	논문 『소련 한인의 가요문화』로 카자흐 국립 사범대학 예술학 박사학위 취득.
1988.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훈예술인’ 칭호 수여.
1990.	카자흐스탄 국립 사범대학 정년퇴임.
2008.	탄생 85주년 기념 연주회(알마티). 카자흐스탄 오케스트라 연주.
2013.6.13.	알마티에서 사망. 향년 90세.

출처: 에르사코비치의 “정추의 음악에 대하여”, 주성혜: “[대답]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에 수록된 영어, 독어 해설 및 “작곡가 정추 수증자료 목록화 및 연구”를 참조로 작성하였다.

■ 접수: 2015년 5월 5일 / 심사 : 2015년 5월 18일 / 게재확정: 2015년 5월 18일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 구해우·송홍근. 『정추: 북한이 버린 천재 음악가: 반김일성 투쟁에 앞장선 차이코프스키의 4대 제자』. 서울: 시대정신, 2012.
-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서울: 주류성, 2013.
- 루이제 린저 지음. 홍종도 옮김. 『윤이상-루이제 린저의 대담: 상처입은 용』. 서울: 한울, 1988.
- 윤신향. 『윤이상 경계선상의 음악』. 서울: 한길사, 2005.
- 윤이상재단. 『윤이상의 창작세계와 동아시아 문화』. 서울: 예술, 2006.
- 이경분. 『망명음악 나치음악: 20세기 서구음악의 어두운 역사』. 서울: 책세상, 2004.

국문 논문

- 김영술. “고려인 사회의 문화예술 특성에 대한 연구: 표현문화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35집(2007). pp.357~404.
- 김보희.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창작가요.” 『한국음악연구』 제42집(2007). pp.41~76.
- 안일웅. “나운영의 실내악 작품 분석.” 『음악과 민족』 제9호(1995). pp.89~126.
- 오금덕·양무춘. “항일시기 작곡가 한유한에 대한 기초 조사보고서.” 『한국음악사학보』 제20집 1호(1998). pp.515~512.
- 윤신향. “윤이상의 사회참여 작품-한 망명작곡가의 자화상.” 『음악과 민족』 제38호(2009). pp.141~173.
- 이건용. “나운영의 화성이론에 관한 연구.” 『음악과 민족』 제11호(1996). pp.57~77.
- 이경분. “망명음악가 윤이상.” 『동양정치사상사』 제10권 제1호(2011). pp.195~215.
- 정창현. “북의 첫 여성작곡가 문경옥(상).” 『민족21』 통권 제81호(2007.12). pp.118~127.
- 주성혜. “중앙아시아 한인사회의 문화와 음악.” 『낭만음악』 통권 제25호(1994). pp.123~180.
- 주성혜. “대담 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 『낭만음악』 통권 제19호(1993). pp.9~25.
- 최애경. “윤이상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대왕의 주제’>: ‘바흐의 아시아 전통으로의 산책.’” 『음악논단』 제29호(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2013). pp.121~152.
- 홍정수. “한국음악의 관점(6): 나운영의 이론적 착상.” 『음악과 민족』 제41호(2011). pp.119~123.

홍정수. “나운영의 음악관: 그의 민족음악론을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제10호 (1995). pp.134-151.

외국어 단행본 및 논문

Kho, Songmoo. *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 Helsinki: Finnish Oriental Society, 1987.
 Sparrer, Wolfgang. “Isang Yun und koreanische Tradition”, Wolfgang Sparrer ed. Ssi-ol: *Almanach der Internationalen Isang Yun Gesellschaft 1998/99*. Berlin/München: edition text+kritik, 1999. pp.107-145.

Stephan, Ilja. “Kontinuität als Schaffensprinzip. Über zyklische Zusammenhänge im Werk von Isang Yun.” 한국음악학학회·윤이상평화재단 공동 엮음. 『윤이상
 상의 창작세계와 동아시아 문화』. 서울: 예술, 2006. pp.261~280.

Stephan, Ilja. “Isang Yun-Im Spannungsfeld der Kulturen und politischen Systeme.” Zehentritter, Ferdinand ed. *Komponisten im Exil: 16 Künstlerschicksale des 20. Jahrhunderts*. Berlin: Henschel Verlag, 2008. pp.243-258.

梶野繪奈·長木誠司·ヘルマン ゴチェフスキ 編著. 『貴志康一と音楽の近代—バル
 リン・フィルを指揮した日本人』. 東京: 青弓社, 2011.

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기고문

김성동. “현대사 아리랑 조선 제일의 작곡가 김순남 下.” 『위클리 경향』 제806호(2008
 년 12월 30일).

송홍근. “박제가 된 천재음악가 정추.” 『주간동아』 제792호(2011년 6월 20일) pp.34-37.

송홍근. “나를 윤이상 같은 변절자와 비교하지 말라.” 『신동아』 제647호(2013년 8월).

한국근대문화연구소. “작곡가 정추 수증자료 목록화 및 연구(결과보고서).” 2015년 4월.

한국근대문화연구소. “작곡가 정추 수증자료 목록.” 2015년 4월.

1차 자료(악보, 영상자료, 기록자료 등)

- 정추 작품 악보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 모스크바 국립음악출판소, 1958.

〈교향시 조곡〉 (자필본) 1958.

〈극적교향조곡〉 (자필본) 1972.

- 정추 자필 문서 (무제, 정추 이력).

- 카자흐스탄 연주회 실황 영상자료. 2008.
- 이흥기 감독. 다큐멘터리 〈미행. 망명자 정추〉. EBS 방송 영상자료, 2010.
- 베를린 예술대학(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아카이브 문서
 - Das Stern'sche Konservatorium, Jahresbericht über das 75. Schuljahr 1924~25.
 - Das Stern'sche Konservatorium, Jahresbericht über das 76. Schuljahr 1925~26.

A Study on Chung Chu, an exiled musician from North Korea to Kazakhstan

Lee, Kyung-Boon (IJ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an unknown exiled musician Chung Chu(1923~2013), born in Gwangju of colonial Korea and passed away in Almaty of Kazakhstan. Main questions, scrutinized in this study, are how he defected as a composer from North Korea to Moscow to Kazakhstan, what kinds of music language he used for his “suite symphony” with Korean folk song melody, and how his orchestral works were influenced from Soviet’s socialistic realism during his first exile life in Moscow and Almaty. These questions will be answered from the primary source such as the composer’s scores, manuscripts, pictures, recording of concerts, and others from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wangju Asian Culture Complex,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so on.

Key words: Chung Chu, Kim Sunnam, Yun Isang, Exile in Kazakhstan, Exiled musicians from North Korea

이경분(Lee, Kyung-Boon)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망명음악 나치음악』, 『프로파간다와 음악』, 『잃어버린 시간 1938~1944(안익태)』, “Japanese Musicians Between Music and Politics during WWII”, “독일제국권에서 일본제국권으로 온 망명음악가 연구” 등이 있다.

【서평】

김정은의 ‘북한호’는 어디로?

* 임을출 엮음, 『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 파주: 한울, 2012.

* 서보혁·김일한·이지순 엮음,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 서울: 선인, 2014.

이무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 들어가며

최근 북한의 행보가 또다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 9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사진을 관영매체들을 통해 공개했다.¹⁾ 북한의 SLBM 시험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성공 유무를 비롯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에 의한 ‘핵 공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가운데 13일에는 국정원이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사실을 밝힘으로써 김정은의 ‘공포

1) “북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연합뉴스』, 2015년 5월 9일.

정치가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국내외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²⁾ 현영철 숙청과 관련해 국정원이 밝힌 첩보 수준의 처형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2012년 리영호 숙청, 2013년 장성택 숙청과 연결되어 국내외 여론은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폭압적 성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호전성과 비정상적 행태에 대한 비판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로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외의 학계 및 언론계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과 북한 붕괴론이 주로 논의됐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럭저럭 버티기’ 방식으로 현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붕괴론은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붕괴론이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망각한 채 북한의 두 번째 권력교체에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현실 분석에 투영되어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고, 미래의 전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죽음이 곧 체제 및 정권의 위기로 연결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³⁾ 그러나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 등의 사례를 교훈 삼아 사전에

2) 국정원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불경·불충죄’로 숙청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영철이 4월 30일 평양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수백 명의 고위군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포로 총살됐다는 ‘첩보’도 입수했지만, 처형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이 밝힌 북 현영철 처형 전말 ... 불경·불충죄,” 『연합뉴스』, 2015.5.13. 그런데 북한이 아직까지 현영철 숙청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하는 기록영화에서도 현영철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숙청이 사실이 아니거나 해임되었더라도 공개처형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3) 소련의 경우, 스탈린 사후 권력 투쟁과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났고, 중국의

수령의 후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령의 유고라는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왔다. 이는 김정일 정권에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70년 간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북한 체제의 구조적 속성과 능력 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문제'에 접근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역사와 구조, 능력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공포정치 등과 같은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는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 위에서 펼쳐지는 주요 행위자 및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주목한 책이 3년 전 (사)경실련 통일협회가 한반도 전문가 30인과 펼친 좌담회 내용을 정리해 발간한 『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한울, 2012)와 지난해 현대북한연구회가 집단 연구의 성과로 발간한 연구총서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선인, 2014)이다. (사)경실련 통일협회가 발간한 책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에게 공식적 권력승계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한반도 전문가 30인이 당시 제기되고 있었던 북한 문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반면에 현대북한연구회의 연구총서는 중견 및 소장학자들이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 3년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의 지속과 변화를 논의한 논문집이다. 책의 성격이나 논의의 시점은 다르지만 다루고 있는 북한 체제 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과제는 유사하다. 또한 북한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서

경우에도 모택동 사후 권력 투쟁이 발생하였다. 대체로 권위주의 및 독재정권에서 독재자의 죽음은 체제 및 정권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동일하다.⁴⁾

이 두 권의 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안고 있는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도 매우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균형적 시각으로 북한 체제의 역사가 만들어낸 현 체제의 구조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의식과 행위 양상,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작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이 책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도전과 과제, 북한에 대한 인식과 연구방법, 그리고 김정은 체제 연구의 과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II.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도전과 과제

『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는 2012년 당시 경제, 정치·군사, 북중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 새로운 대북정책의 구상 등 각 분야별 김정은 체제의 핵심 쟁점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 식량문제, 빈부격차, 시장통제, 물가폭등(환율폭등), 경제의 중국 예속화, 지역 간 격차, 경제강국 건설, 개혁개방 전망과 관련한 쟁점을 짚어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정당성 유지를 결정할 최대 변수는 경제문제, 특히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핵심과제라

⁴⁾ 북한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책들이 다수 출간되고 있지만 분석적인 저서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분석적인 연구결과물은 주로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주요 (대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가 대부분이다. 최근에 북한연구학회가 발행하고 있는 연구총서 시리즈(총 5권)도 주목할 만하다.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 정착과 개혁개방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북한 경제 전문가의 의견이 개선되어 있다.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미래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안정, 중장기적으로 불안정 혹은 불투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북한 수령제의 특성과 당시와 김일성 사망 시기의 대내외적 조건과의 비교 속에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및 이데올로기 제시 가능성, 선군정치의 지속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그리고 북한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이 정치적·군사적 의존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북중관계를 비중 있게 다룬다. G2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해 전략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가 중국이라는 도전과 기회의 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북미관계와 관련해서는 2012년 2월 북미 양국이 양의한 2.29 합의가 주목하면서 돌발변수가 없는 한 북미 간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당시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돌발변수,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인공위성 발사) 시험과 제3차 핵실험으로 대화는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5.24 조치,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문제, 개성공단 등의 핵심 문제를 살펴보면서 남북관계는 어떤 조건에서 복원될 것이며, 복원 이후 어떤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

당시 쟁점들은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등장이라는 권력교체기라는 점에서 수령의 사망과 새로운 수령의 등장으로 인한 북한 체제의 안정성 여부, 새로운 수령으로서 김정은의 리더십, 김정은 정권의 과제 등이 주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투영된 다소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당시 쟁점과 과

제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북한 체제의 변화 여부였다. 과연 북한 체제는 대내외적 도전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수령과 함께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불안정 속에 소위 말하는 급변사태 혹은 붕괴의 나라로 떨어질 것인가? 한반도 전문가 30인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30인의 전문가들이 논의한 북한 문제의 쟁점과 과제는 어떻게 진행되어 나갔고,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 발간 후 2년이 지난 시점(2014년)에서 출간된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가 이에 답하고 있다. 이 책은 국가전략과 이념·권력구조를 분석한 논문 3편, 경제와 노동 분야의 논문 3편, 사회와 문화 분야 3편, 핵문제와 대외정책 분야 2편 등 총 11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먼저 서론에서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의 출범은 북한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몰고 왔다고 평가한다. 북한 내부의 권력교체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관계, 북핵문제, 대외관계를 비롯해 장성택의 전격적인 숙청사건까지 북한 사회는 문자 그대로ダイナミック한 시기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의 공식적인 출범 이후 불과 2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지만, 그 변화의 내용과 깊이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 분야에서는 북한이 추진하는 국가전략과 이를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권력구조를 분석·평가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전략(발전전략)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북한 경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의 문제,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일 유형을 통해 분석·평가하고 있다. 사회·문화의 경우, 추모문학을 통해 문학이 어떻게 당국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에 활용되고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음악정치'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도와 함께 북한의 변화된 사회경제상을 북한 당국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년동맹 분석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청년 세대를 중시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핵문제와 대외정책의 경우, 북한의 대외정책과 핵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둘러싼 쟁점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현대북한연구회의 집단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국내 정치 부분에서 북한 체제를 안정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더불어 경제적인 성과 역시 이전 정권과는 차별화된 정책과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권력구조와 시장 인플레이션의 지속, 식량부족, 공장가동률 저하에 따른 실업문제 등 김정은 정권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력 교체기에 제기됐던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여부는 2년이 지난 2014년 시점에서, 현대북한연구회의 중견·소장 연구자들이 보기에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김정은 정권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에서 나타난 변화를 해석하면서 기본적으로 정책의 사후적 성격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정책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반영한 것이며 이념 및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히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권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 문제의 쟁점과 과제,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보면, 김정일 시대나 김정은 시대가 처한 대내외적 도전과 과제는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김일성이 남긴 체제 유산의 상당부분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기존 체제의 기본적 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재건과 체제 보장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제는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요구되나, 개혁개방으로 인한 체제의 위기 증가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딜레마를 김정일 정권에게 안겨 주고 있었다. 현재의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20여 년 전과 현재의 모습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의 본질은 유지되고 있으나 구조 및 체제 운영 방식과 대외환경,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주된 행위자와 조직의 능력과 의지 등에 있어서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 변화의 제한성은 구조적 측면에서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와 관련해서 제한된 변화가 가져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변화가 가져오는 작은 파장이라도 그것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 나가는 것이, 북한 체제 변화를 전망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두 권의 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Ⅲ. 북한에 대한 인식과 연구 방법

북한 체제를 분석·평가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서,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대상으로서 북한은 매우 명확해 보이나,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의 이데올로기적 속성과 폐쇄성, 특수성 등은 북한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북한 연구를 지역 연구의 하나로 간주한다면, 다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타자성을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북한은 타자로 간주되기보다는 우리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하므로 이것이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논의가

바로 북한 불변론이나 붕괴론 등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전문가 30인과 현대북한연구회의 연구자들도 바로 이 부문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불확실한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북한의 급변사태 및 붕괴 가능성도 상정하고, 그 유형과 함께 유형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도 분명히 북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분단 이후 형성된 구조와 남북관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쉽지 않다. 다만 연구자 입장에서 이러한 인식을 연구 과정에서 최대한 배제한 가운데 실증적이고 논리적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해석의 문제이고 동시에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정치적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논쟁이 근거가 미약한 가운데 희망적 혹은 부정적 기대나 바람이 개입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함께 연구 방법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이 서구에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분과학문에서의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비교 사회주의적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다른 사회주의와 달리 해명이 어려운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연구자들은 분과학문 체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대체로 실증주의적 연구경향)들을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북한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 담론 및 텍스트 분석, 현상학적 접근, 일상

사 연구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비교 사회주의적 접근을 통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북한이탈주민과의 면접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 등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결과들이 제출되고 있다. 연구 분야도 정치, 경제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 예술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범위 또한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⁵⁾

이러한 연구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이다. 이 책에 수록된 11편의 논문들은 북한 문헌에 대한 분석, 기존 분과학문의 이론 적용(송영훈, 서보혁의 경우 국제정치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강동완·박정란의 경우 중국에서 만난 북한 주민과의 인터뷰도 활용)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 체제를 분석·평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필자가 주목한 것은 바로 북한의 추모문학집 분석을 통해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한 이지순의 논문과 음악정치라는 개념을 활용한 강동완·박정란의 논문이다.⁶⁾

우선 이지순은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이 발행한 추모시집을 분석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이념적, 정치적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 못함으로써 후속 연구들의 자극제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최근 연구 성과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북한학계의 조직적인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평가 작업이 향후 연구의 질적 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북한학계가 활발한 논쟁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 『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에서도 한반도 및 북한 전문가들이 모두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논문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에서 활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추모시집은 우선 상실(김정일 사망)에 대한 비탄과 원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비탄과 원망이 안내하는 곳은 절절한 슬픔의 이면에 놓인 불안과 공포라고 할 수 있다(193쪽).⁷⁾ 그 다음으로 김정일 사망 원인이 과로에 있고, 그러한 과로는 인민들 자신의 탓이라는 인과론적 입장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195쪽). 지도자 상실의 원인이 인민에게 있다는 자책감, 내지 죄의식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결핍으로 남아 있는 상실의 대상을 채워 못 다한 책무를 다하는 것, 이전에 못다 한 사랑과 헌신을 다 주는 과정에서 죄책감은 자기비난을 멈추고 다시 생활의 에너지가 된다(196쪽). 궁극적으로 김정은을 향한 충성 맹세는 김정일에 대한 죄책감을 더는 필연적인 요소가 된다(197쪽).

북한에서 애도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위이면서, 공적 영역 속에 존재한다. 애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일탈이 될 수 있다. 애도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은 소속을 증명한다. 작가를 포함하여 노동자, 농민, 아동, 청소년까지 모두 참여한 추모 문학집은 애도가 집단적 행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과 제도 사이에서 소속과 충성도를 증명하는 표지가 된다(182쪽). 추모문학은 죽음의 시간을 복원하고 현재화한다. 이는 사건을 마주했던 개인의 시간과 문화적 기억을 결합하여 하나의 역사적 기억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83쪽). 기록의 통제는 기억의 통제이며, 기억의 통제는 정치적 권력의 공고화를 위한 것이다. 정치적인 통제권의 교체 후에는 정당성을 구조화하면서 기록의 내용도 변화한다. 북한 문학은 문학 언어로 치환된 기록물 보관소라 할 수 있다(199쪽). 이를 바탕으로 이지순은 김일성 시대와 마찬가지로 인민은 구원의 대상이고, 통치자는 메시아라는 등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

⁷⁾ 앞으로 서술 과정에서 본문 괄호 안의 쪽수 표시는 서보혁 외 역음,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의 페이지를 지칭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으며, 국가 발전이라는 근대화 담론이 여전히 압도적인 오늘날, 북한이 목표로 하는 내일은 반세기 전의 지도자 숭배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고 평가한다(200쪽).

한편, 강동완·박정란은 모란봉악단을 통한 북한 음악정치의 의미를 파악한다. 모란봉악단 여성 구성원들의 파격적인 의상, 그리고 배경 화면과 음악으로 미국의 미키마우스와 영화 록키의 주제가가 활용되고 있는 것 등의 조치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영상물을 비롯한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의 대중적 문화 욕구에 일부분 부응해야 할 뿐 아니라, 문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212쪽). 억압과 통제 우선의 통치가 아니라 이미 북한 상류층을 비롯해 하층민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남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외부 문화에 대한 동경을 북한식 문화로 해석하여 호감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집권 초기 젊은 지도자라는 점을 장점으로 부각하여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최상의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모란봉악단을 통한 음악정치라 할 수 있다(293쪽).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젊은 세대들은 젊은 지도자의 등장에 따른 변화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성세대들은 “우리 생활방식하고 맞지 않다”고 반응한다(215~221쪽). 이를 바탕으로 강동완·박정란은 모란봉악단이라는 문화적 코드를 통해 의도된 메시지를 주입하고자 하는 정권의 정치적 의도와 이에 대해 반응하는 북한 인민들 사이의 간극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234쪽).

이 두 연구는 북한 연구에서 ‘정치’ 개념의 확장을 요구한다. 정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고 이론적 합의가 부재하지만, 통상 정치는 국가권력(공적 권력)의 획득, 유지를 둘러싼 항쟁 및 권력을 행사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정치를 통치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치도 정치의 한 부분이지만 통치가 정치의 전부는 아니다. '지배의 정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저항의 정치'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편, 맑스주의적 시각에서는 정치를 국가권력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계급적 실천의 총체로 파악한다. 그런데 탈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한 개인의 삶에 있어 정치적이지 않은 사적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푸코의 계보학적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무엇이 공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인가 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효과'이고 역사적으로 변해왔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도 기존에 사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가정, 젠더, 동성애 등의 문제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시권력에 주목하는 차이의 정치, 기억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 일상성의 정치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본래 이념과 달리 '국가와 경제의 사회화'가 아닌 '경제와 사회의 국가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에 통합된 상태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자생적 시장화로 공적 영역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 균열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 재조정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⁸⁾ 따라서 '권력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 그 자체가 권력 관계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회적 실천은 정치적"이라는 확장된 정치 개념에 입각해 북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는 북한 연구의 질적 향상과 내용의 풍부화를 가져올 것이며, 북한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8) 이우영 외,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서울: 한울, 2008) 참조.

IV. 김정은 체제 연구의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두 권의 책은 김정은의 북한 체제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의는 이 가운데 정치와 경제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북한 연구에서 과거와 현재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분석과 평가, 그리고 전망의 판단 기준이 요구된다. 정치 분야에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연구의 경우, 김정은의 리더십과 권력정치에 대한 분석이 필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령과 파워 엘리트 사이의 권력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체제의 구조적 성격과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권의 안정성은 구조적 측면과 함께 주요 행위자 및 조직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의 개념을 확장하여 권력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수령과 주민 간의 사회적 관계, 수령과 엘리트 간의 관계, 엘리트와 주민 간의 관계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공식 주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추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해 파워 엘리트들의 우려와 불만이 증가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성이 일정 정도 훼손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수령과 파워 엘리트 간의 관계 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령에 대한 불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충성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고, 수령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다면, 수령과 파워 엘리트 간의 ‘충성과 시혜’의 교환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권력정치 측면에서 진행되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연구는 확장된 정치의 개념을 적용한 이지순, 강동완·박정란 식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종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연구는 대체로 계획과 시장의 구분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경제정책의 의도가 계획경제의 강화 혹은 시장경제 제도의 도입인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경제구조는 이미 이러한 구분이 쉽지 않을 정도로 계획 영역과 시장 영역이 상호작용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아래에서부터 '자생적 시장화'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주민을 결속시키고 사회통합을 유지해 왔던 사회운영 원리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다. 북한의 경제구조는 자생적 시장화로 공식적인 계획경제와 합법·불(비)법적인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북한 경제에서 시장경제 영역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 시장경제적 활동이 경제위기의 강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적 활동에 대한 통제는 곧 인민들의 죽음을 의미했다. 결국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한 주민생활 보장이라는 물적 토대가 와해되었고, 그로 인한 사회적 균열을 억압적 국가 기구를 활용해 억제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부분적 묵인과 용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관료적 조정 방식 내에서 관료와 주민들은 행정·명령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분배의 특혜와 편의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복종을 받았다. 이러한 관계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급제의 마비로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사적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다시 말해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사적 경제활동의 대가로 관료들에게 뇌물과 대가를 지불하고 관료들은 이를 묵인해 주었다. 또한 관료들은 직접적으로 사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이들과의 관계를 활용해 친인척의

사적 경제활동을 돕거나 자신의 부를 축적해 나가기도 했다.

다시 말해 관료적 조정 방식 내에서 ‘은폐’되어 있었던 생존 논리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가 시장교환 논리를 매개로 ‘현실’적 생존 논리로 적극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시장 의존적 삶과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 북한 사회의 모습이다. 결국 관료적 조정 양식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적 조정 양식과 결합하면서 ‘기생적 또는 약탈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⁹⁾ 이는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에 수록된 김화순의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일과 의식”(143~173쪽)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 신흥부자로 등장하고 있는 ‘돈주’와 지배 엘리트 간의 정치적 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의 특성상 돈주는 지배 엘리트의 ‘정치적 비호’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돈주는 탈계획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체제에 대한 이탈과 저항이 어렵다. 즉 시장화를 주도하는 돈주는 개혁이나 전환을 희구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기보다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안정희구세력이 될 가능성도 있다.¹⁰⁾

이와 함께 지적할 것은 북한의 경제를 국내 차원에서만 분석하는 방법 차제의 문제이다.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에서 김일한은 북한의 인플레이션을 분석하면서 북한 내부 요인과 함께 세계 경제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119~142쪽). 자립경제노선으로 인해 북한 경제가 고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북한 경제가 세계 경

9) 이에 대해서는 이무철, “북한의 경제조정 메커니즘의 변화 경향 분석,” 윤대규 역음,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서울: 한울, 2008), pp.84~120 참조.
10) 이에 대해서는 윤철기, “북한 체제 변화에서 시장의 위상과 역할: 시장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북한연구학회,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과 북한연구의 성찰』(북한연구학회 2011 하계 정기학술회의 자료집, 2011년 6월 17일) 참조.

제의 변화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시간 간격이 있는 간접적 방식이지만 분명히 북한 경제도 세계 경제의 변화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북한 경제 연구에서 세계 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의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북한에게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발전 및 쿠바 사례 등이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과 유사한 다시 말해 '경로의존적 형태'를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주의의 종별 변이로서의 북한 변화가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 북한의 행보는 여타 사회주의가 걸어왔던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의 수순을 모색하다 이내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식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북한식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대응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대북한연구회의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나무를 모르고 숲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라는 숲을 보여주기 위해 정성들여 가꾼 나무로 표현했다(5쪽).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로 인한 정책적 딜레마로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제한적 성격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숲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나무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혀나갈 때 향후 북한이라는 숲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권의 책은 바로 이러한 작업과 함께 논쟁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무철(Lee, Moo-Chul)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분권화 과정과 구조적 한계』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있다. 주요 논저로는 “북한 교육정책의 정치학: 생산조건의 재생산을 중심으로”(2015), “향후 1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2012),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발전전략: 비판적 평가”(2011),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2011) 등이 있다.

원고 집필요령

1. 본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원고의 총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서평의 경우는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3. 원고는 논문제목, 국문필자명, 국문요약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논문제목, 영문필자명, 영문요약문, key words, 필자 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4. 필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먼저 기재한다.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표시를 하여 원고의 첫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5. 논문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하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6.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차로 매긴다.
7. 본문에서 짧은 인용은 “ ”로, 긴 인용은 본문보다 들여쓰기로 하며, 강조의 표시는 ‘ ’로 한다.
8. 북한연구의 특성상 원문을 인용할 경우가 많은 바, 직접 인용 시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 북한 자료는 출판시기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있으므로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년도를 명기한다.
 - 예) 김일성, “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1960.8.25),”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298~299.
9.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 그림의 번호(<표 1>, <그림 1>)를 부여하고 하단에는 출처 또는 자료라고 쓴 후 완전한 각주양식으로 표기한다.
10.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표기하고,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 처음으로 어떤 저작에 관해 주를 사용할 때는 완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 완전한 양식이란 저자의 이름, 저서의 이름(논문이름), 그리고 출판에 관한

사항(저서인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논문인 경우 학술지의 이름, 권호, <vol. no.>, 학술지의 출판 년, 월), 페이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사용할 때는 마침표 없이 ;로 연결한다.

(1) 단행본

- 이은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서울: 법문사, 1993), pp.20~28.
-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55~57.
- 저자의 이름으로 연구기관, 단체, 정부의 기관 등도 사용되며, 편, 편저, 편역, 1인 이외의 공저, 공편 등의 사항을 표기한다.
-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한올아카데미, 1999), p.20 참조.
-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김세균 외 공저,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p.3~36.
- 최중태 · 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3~36.
- Chong-Shik Chung and Chong-Wook Chung, eds., *Major Powers and Peace in Korea*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9), pp.25~34.
- F. Parkinson 저, 정규섭 · 강원식 역, 『국제관계사상』(서울: 일신사, 1994), p.15.

(2) 논문

<학술지>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명』, 제×권 ×호 (출판년도)의 양식으로
-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제9권 1호 (2002), pp.6~51.
- Donald S.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575~583.

<단행본 수록>

- 김세균, “북한의 ‘수령 중심의 당·국가 융합체제’의 성립과 공고화 과정,” 김세균 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

부, 2006), pp.3~36.

- Chong-Sik Lee, "Stalinism in the East,"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5), p.247.

(학술회의)

-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 대주제』, 주최 및 학술회의 명 (학술회의 날짜).
- 양문수, "김정일 방중 이후의 남북경협: 북중경협 확대와 한국정부의 과제," 『북한체제진단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 학술회의 (2006년 3월 31일).

(3) 학위논문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p.10~15.
- Taik-young Hamm, "State Power and Armament of the Two Koreas: A Case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96), pp.7~21.

(4) 신문

- 『로동신문』, 2004년 8월 15일.
- *The Korea Times*, April 20, 2003.

(5) 인터넷 자료

- 뉴스 기사의 경우
"우리가 버린 脫北 청소년들," 『조선일보』(온라인), 2004년 7월 14일;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140421.html>>.
- 논문 등의 경우
유호선,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2004);
<<http://www.budreview.com/html/18/18-nondan-yoo-sun-ho.htm>>.
- url을 명시할 때 세미콜론으로 연결, 웹페이지 내에서의 인용위치를 명시하는 것 등은 불필요

11. 첫 번째 표기한 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

- (1) 바로 앞 번호의 각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는 국문은 위의 책, 위의 논문, 위의 글로, 영문은 Ibid.로 처리한다.

(2) 주 번호상 바로 앞 번호가 아닌 경우는 출판사항을 삭제하고 저자 이름, 저서 및 논문명의 축소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이온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p.22.

– Suh, *Kim Il Sung*, p.60.

– 함인희,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의 변화,” p.270.

–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p.577.

12. 참고문헌 작성

(1) 일반적으로 국문, 영문, 기타의 순서로 배열한다.

(2) 각각은 저자의 이름에 따라 국문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참고문헌 작성의 기본양식은 각주에서의 심표 대신 마침표가 사용되고 괄호가 제거된다. 영문의 경우 저자명을 기록할 때 성(last name)을 먼저 쓴다. 2행부터는 들여짜기를 해야 한다.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 Suh,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김연철.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추격발전과 전통적 정치체제: 북한, 루마니아, 알바니아 비교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 (2004), pp.107~128.

– Macdonald, Donald S.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575~583.

『통일과평화』 윤리규약

I. 저자(투고자) 연구윤리와 책임

1. (중복투고 및 게재의 금지)

『통일과평화』 이외의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2. (교신저자 및 책임저자의 역할)

-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3. (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변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

다음의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가설, 이

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복게재의 심의와 원칙)

- ① 중복게재 및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6.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도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 시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한다.

- ① 부적절한 출처행위
- ② 참고문헌의 왜곡: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하며,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③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④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자기표절)의 금지: 저자(투고자)는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출간된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한다.
- ⑤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7. (논문의 수정)

저자(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I. 편집위원의 윤리규약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투고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III. 심사위원의 윤리규약

1.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안 저자(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IV. 윤리위원회와 제재

1. (윤리위원회의 권한)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를 판정한다.
- ②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2. (소명 기회의 보장 및 비밀 보장)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투고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윤리규약 위반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제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저자(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불허
-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를 적용
- ③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

4. (연구윤리규정 위반내용 공개)

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인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